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의결 사례

제2장

시정요구심의 의결 사례

1. 주의사실 게재 사례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40 |
| 언론사 | 주식회사 세계타임즈(세계타임즈) |
| 심의대상 | 세계타임즈 1월 7일자 3면 「이용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 |
| 주 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세계타임즈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세계타임즈 3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세계타임즈 2022년 1월 7일자 1면 「대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제하 기사의 제목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였다.</p> <p>살피건대 언론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약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공약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 고유의 역할이라 할 것이나, 심의대상기사와 같이 언론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마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소속된 것처럼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을 전문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p> |

이 유 한편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책토론 제안문 또는 출범식 인사말 전문을 세 차례 반복 게재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21. 12. 8.자 '제20대 대선-자심20' 결정을 통해 '경고' 조치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1월 7일자 3면 「이용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세계타임즈
2022년 1월 07일
03면 (국회/정당)

이용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공약'은 표만 되면 뭐든 다하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전형 을 보여주

제에 대한 급여등재가 더욱 시급하다. 이들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 역장이 무너진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이재명 후보는 왜 모르는가.

아무리 표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공약을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이런 사기성 공약에 속아 한껏 기대를 했던 탈모인들은 '탈모공약'이 대선 이후 없었던 일로 된다면 얼마나 허탈해 하겠는가.

당장 문케어를 보라. 모든 의료분야에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급어화할 것처럼 했지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없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성 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이다.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탈모공약',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고 있다.

30대 남성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으로 시작된 '이재명 탈모공약'은 이제 '이재명은 심는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마치 모발이식까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수백여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상 1모당 3,000원 정도 1회 시술비용이 7~8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날 수 밖에 없다. 탈모약 건보 적용보다 중증·희귀환자나 암환자에게 필요한 신약과 항암

이재명 기자
(11.6*14.5)cm

<세계타임즈 2022년 1월 7일자 3면>



이용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공약’은 표만 되면 뭐든 다 하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남성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으로 시작된 ‘이재명 탈모공약’은 이제 ‘이재명은 심는 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마치 모발이식까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상 1모당 3,000원 정도, 1회 시술비용이 7~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날 수밖에 없다. 탈모약 건보 적용보다 중증·희귀환자나 암환자에게 필요한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

여등재가 더욱 시급하다. 이들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 역장이 무너진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이재명 후보는 왜 모르는가.

아무리 표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공약을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이런 사기성 공약에 속아 한껏 기대를 했던 탈모인들은 ‘탈모공약’이 대선 이후 없었던 일로 된다면 얼마나 허탈해하겠는가.

당장 문케어를 보라. 모든 의료분야에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급여화할 것처럼 했지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을 상승은 없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성 과장광고는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이다.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탈모공약’,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세계타임즈

2022년 02월 16일
03면 (국회/정당)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결정 알림

본보는 지난1월 7일자 3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20대 대통령후보의 공약에대한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간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등에관한 규정제4조(공정성및형평성) 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 제2호를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11.8*4.6)cm

<세계타임즈 2022년 2월 16일자 3면>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41 |
| 언론사 | 주식회사 호남제일신문(호남제일신문) |
| 심의대상 | 호남제일신문 1월 7일자 11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 |
| 주 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호남제일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호남제일신문 11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 「희귀·중증질환·암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는 보이지 않나」와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였다.</p> <p>살피건대 언론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약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공약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 고유의 역할이라 할 것이나, 심의대상기사와 같이 언론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마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소속된 것처럼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을 전문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p> <p>한편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21. 10. 6.자 '제20대 대선-자심9' 결정을 통해 '경고' 조치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1월 7일자 11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은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보도내용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희귀·중증질환·암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는 보이지 않나
이용호 의원 “지금이라도 국민 속이는 왜곡 선동 중단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공약’은 표만 되면 뭐든 다 하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전형 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남성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으로 시작된 ‘이재명 탈모공약’은 이제 ‘이재명은 심는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마치 모발이식 까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기만 하고 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수백억

〈호남제일신문 2022년 1월 7일자 11면〉

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상 1모당 3,000원 정도, 1회 시술비용이 7~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 날 수밖에 없다.

탈모약 건보 적용보다 중증·희귀환자나 암 환자에게 필요한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 등재가 더욱 시급하다.

이들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 억장이 무너진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이재명 후보는 왜 모르는가.

아무리 표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국

민을 현혹하는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공약을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이런 사기성 공약에 속아 한껏 기대를 했던 탈모인들은 ‘탈모공약’이 대선 이후 없었던 일로 된다면 얼마나 허탈해 하겠는가.

당장 문케어를 보라. 모든 의료분야에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급여화할 것처럼 했지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없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성 과장광고는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이다.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탈모공약’,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결정 후보도문

호남제일신문

2022년 01월 27일
11면 (종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보는 지난 1월 7일자 11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13.9*6.9)cm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60 |
|------|---|
| 언론사 |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
| 심의대상 | 중앙일보 1월 26일자 31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천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하의 광고 |
| 주 문 | <p>1.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p> <p>2.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과 본문을 통상적인 ‘알림’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로 한다.</p> |
| 이 유 | <p>1. 사실관계</p>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권교체와 정권유지를 각각 주장하는 해당 후보자의 자질과 주요 공약 등을 비교·평가한 표가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p> <p>2.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p> <p>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제1항에 입각하여,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표현물의 배부, 살포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2012 헌바391(병합) 결정 참조).</p> <p>나. 살피건대, 심의대상광고의 내용과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광고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통상적인 의견광고의 수준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타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심의대상광고가 각 후보자의 공약이나 관련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후보자의 성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후보자에 관한 것인지를 누구든지 쉽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

이 유 다. 한편, 심의대상광고가 자유민주주의 의뢰에 의하여 게재된 바, 「정당법」 제 37조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심의대상 광고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심의대상광고의 게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3. 제재조치의 수위에 대한 판단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가 배임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것처럼 독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21. 12. 8.자 '제20대 대선-자심21' 결정을 통해 '주의' 조치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동일한 정당의 불공정한 의견광고를 게재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보다 엄중하다. 또한 심의대상광고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이에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1월 26일자 31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권교체

자유시장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의 나라!

정권유지

국민을 갈라치고 끼리끼리 이권 나눠먹는 나라!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권력의 불법과 탄압, 위선과 무능에 맞서 싸운 대통령이 법치와 공정, 자유와 품격, 전문과 국정운영으로 자유와 장의를 활짝 꽃 피우는 나라,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의한 대북 평화 ○ 시장을 존중한 중대 250인종 공급정책, 민간 영역과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달성,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완화 공약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정책 정상화, 부동산 거래도 시장 자유 ○ 말쑥한 부당을 국민이 떠난 긴장과 일선 책임자, 할금 뿌리기 아닌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모태펀드 확대와 청년과 여성 창업자 지원, 중부권 최첨단 연구개발 창업단지, 혁신적 성장, 따뜻한 복지 ○ 밝힘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최고관료를 상대로 공명과 정의를 관철시킨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 부연에 대한 여권의 의혹선동에 오히려 2000여명의 지지자가 오르는 후보가 대통령인 나라 ○ 여실가족부는 여성을 보호로 정착하는 시이장단의 수단,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사정해 양성평등 정책 지향하고 육아휴직 확대 ○ 소와 대북 교류에 의한 평화와 이과 강행한 몇어깨 평화, 북한의 핵·미사일 한 발에 국민 수백만명이 희생되는 것을 신재적으로 막기 위해 '일 재민'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제 구축, 당당한 외교와 든든한 안보의 한미동맹을 재진,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대화와 협력 가능 | <p>자유·공정 전사</p> <p>기업과 근로자의 생명</p> <p>역동적 성장</p> <p>공정·품격</p> <p>양성평등 정책</p> <p>강한 한미동맹</p> | <p>대통령의 지역</p> <p>부동산 대장님 사인</p> <p>경제와 기본소득</p> <p>도덕성</p> <p>여성, 청년 정책</p> <p>확한 안보, 외교</p> | <p>연과 4범</p> <p>피구기 포퓰리즘</p> <p>국민 유혼</p> <p>패륜, 망명</p> <p>2000년대 정책</p> <p>부인과 탄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보보유세, 용역형 허가제 등으로 국민 생활과 시민생활을 통해 이익, 가족과 이웃에 대한 배려의 역할과 상충적인 가치관 정렬, 국가 권력 남용 일소화, 철저한 이념에 의한 커리커리 이권 사회 ▷ 부동산 규제 남발로 가족을 폭동시켜 국민의 재산소득 불공평 확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공시지가 폭등 등의 세금폭탄으로 일차리 탈출 기업을 피하지, 국민은 갈라지기, ▷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500원이나 되는 제법 바쁜 위해 국보보유세, 탄소세 등 부과, 스위스에서는 국민이 거부한 단순 피구기 경제 시행,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는 관료주의적 경제정책 ▷ 전과 4범(루고 및 공무원 사찰, 도로교통법 위반 유주권, 특수공무집행령 공용원진 손실, 선거법 위반)에다 가족에 대해 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 ▷ 여실가족부를 생활동가족부 등으로 개칭 공약했으나 여론 파문이 계속 찬성(1,20~11리얼미터),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공약했으나 2020년 4대 60%가 반대(1,18~19 우리리서치) ▷ 국조음속 미사일 시험 등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원탐이 되어 강한 안보로자를 전방관망이러 모는 나라, 우리나라 무장해제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속, 종전선언으로 미군철수를 선동, 대북 대응 공중미포 지속, |
|---|---|---|--|---|

'문재인 중북파의 정권 혁명'

당면 기업은행 ☎ 02-717-1948, 010-3620-5142(문지)

자유민주당

대표 : 고영주 변호사

이 문고는 99%의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하며 후원 금액 1천 원 이상은 내보내 보냅니다. 후원처 : 신한은행 100-034-986599 자유민주당중앙당공회

08.2-15.1cm

<중앙일보 2022년 1월 26일자 31면>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재심2

{원결정 제20대 대선-자심60}

재심청구인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재심청구대상

중앙일보 1월 26일자 31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하의 광고

주 문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제20대 대선-자심60 결정과 관련하여 주의적으로 '주의사실 게재' 취소를, 예비적으로 '경고'로의 경정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① 이 사건 심의대상광고가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툼이 있고, ② 심의대상광고의 광고주인 특정 정당의 광고를 타 언론사의 경우도 여러 차례 게재한 바 있음에도 재심청구인만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유 형평에 맞지 않으며,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2021. 12. 8.자 '제20대 대선-자심21' 결정에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이어 원심 결정시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의' 조치의 다음 조치인 '경고' 조치를 건너 뛰어 '주의사실 게재' 조치를 내린 것은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원심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였다.

2.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

가. 심의대상광고에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권교체와 정권유지를 주장하는 특정 후보자의 자질과 주요 공약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평가한 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해당 후보자의 성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후보자에 관한 것인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의 직접적인 적시 여부가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을 인정함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한편, 심의대상광고는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후보는 우호적으로, 정권유지를 주장하는 후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나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93조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였음이 틀림없다.

3. 제재조치의 수위에 대한 판단

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만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고, 정당 광고의 단순 게재 사실 또는 게재 횟수를 심의·의결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심의대상광고의 광고주인 자유민주당의 광고를 몇 차례나 게재했는지는 선거기사심의에 있어서 하등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 이 유 나. 재심청구인이 제20대 대선-자심60에서 주의사실 게재결정을 받은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최소 3,318억원 배임의 공범”」 제하의 광고)를 게재함에 따라 ‘제20대 대선-자심21’ 결정을 통해 ‘주의’ 조치를 이미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보다 엄중했기 때문이다.
- 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에 근거한 제재조치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불법성에 상응하는 수위에서 적절히 결정될 뿐, 반드시 순차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기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 바, 심의대상광고의 경우 선거일을 40여 일 앞두고 게재되었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한 것이다.

4. 결론

이와 같이 위원회의 제20대 대선-자심60 결정은 정당하고, 해당 결정 이후 이를 파기하거나 변경해야 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The JoongAng

2022년 03월 03일
23면 (오피니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보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1월 26일자 31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8.6*5.9)cm

<중앙일보 2022년 3월 3일자 23면>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71 |
| 언론사 |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전북중앙신문) |
| 심의대상 | 전북중앙신문 2월 21일자 15면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제하의 기사 |
| 주 문 | <p>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p> <p>2.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전북중앙신문 오피니언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전북선택 중요해)와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p>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이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로 작성한 기고문을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고문(2월 21일자 15면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전북선택 중요해

3주간의 20대 대선 본 선거운동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선거운동 초반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가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북 주요 도시들을 나눠 방문했다.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예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의 역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들에서 전북도민들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해왔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국 최고 지지를 보내며 전북발전을 이끌고, 탄핵당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북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할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과거 군부독재와 같은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을 공언했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5년차에도 과반에 육박하는 국정지지도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허물러에 비유하고 5년짜리 정권이 법 없이 날뛰는 망언을 일삼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역행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라 사실이 명약관화한 이유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마음대로 대통령 유조자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지난 보수정권을 능가하는 정치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민지털이시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진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동안 전북은 큰 진전을 이뤘다. 십수 년째 정체되었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매카로 발돋움하며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수도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 신산업으로서 탄소 소재 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번 정부에서 전북지역 출신 장·차관이 수십여명 배출되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전북의 저력을 뚜렷이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전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 전북도민들은 경선에서 흔들리는 이재명 후보를 확고하게 밀어주며 호남경선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전북에 각별함을 표시하며 대통령 후보

로 처음으로 전북을 2박 3일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바 있다. 전주, 익산, 부안, 남원 등 전북 곳곳을 누비며 전북에 대한 비전도 발표했다. 이번 본 선거운동 기간 방문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소외된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라는 대전환의 발상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북도약 기로

하지만 전북도민들의 선택은 지엄하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낸 것과 달리 2016년 20대 총선에는 민주당에 따른 회포를 들었었다.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단결 치목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초결전 선거일 수록 전북의 역할과 가치는 빛이 난다. 전북의 선택이 20대 대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발전을 스스로 만들었던 전북도민이 20대 대선에서도 전북발전을 약속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전북 도약의 새로운 디딤판을 마련할 때다.

(21 >21 50cm)

<전북중앙신문 2022년 2월 21일자 15면>

보도내용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3주간의 20대 대선 본 선거운동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선거운동 초반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가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북 주요 도시들을 나눠 방문했다.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예전에 미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전북의 역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들에서 전북도민들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해왔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국 최고 지지를 보내며 전북발전을 이끌고, 탄핵당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북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할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과거 군부 독재와 같은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전북선택 중요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을 공언했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5년 차에도 과반에 육박하는 국정지지도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5년짜리 정권이 법 없이 날뛰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에 역행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란 사실이 명약관화한 이유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마음대로 대통령 욕조차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지난 보수 정권을 능가하는 정치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진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간 전북은 큰 진전을 이뤘다. 십수 년째 정체돼있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돋움하며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수도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 신산업으로서 탄소 소재 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번 정부에서 전북 출신 장·차관이 수십여 명 배출되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전북의 저력을 투표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전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 전북도민들은 경선에서 흔들리는 이재명 후보를 화끈하게 밀어주며 호남경선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전북에 각별함을 표시하며 대통령 후보로는 처음으로 전북을 2박 3일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바 있다. 전주, 익산, 부안, 남원 등 전북 곳곳을 누비며 전북에 대한 비전도 발표했다. 이번 본 선거운동 기간 방문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소외된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라는 대전환의 발상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북도약 기회로

하지만 전북도민들의 선택은 지엄하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낸 것과 달리 2016년 20대 총선에는 민주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었다.

오차범위 내에서 엇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초접전 선거일 수록 전북의 역할과 가치는 빛이 난다. 전북의 선택이 20대 대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발전을 스스로 만들었던 전북도민이 20대 대선에서도 전북발전을 약속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전북 도약의 새로운 디딤판을 마련할 때다.



전북중앙신문

2022년 03월 11일
10면 (오피니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고문(2월 21일자 15면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10.5*6.1)cm

<전북중앙신문 2022년 3월 11일자 10면>

2. 경고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4 |
| 언론사 | 주식회사 문화매일(문화매일신문) |
| 심의대상 | 문화매일신문 8월 19일자 2면 「전주 3040세대 815명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화매일
2021년 8월 19일

전주 3040세대 815명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3040세대들이 역경부락, 대동세상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



이재명 후보는 2020년 8월 15일 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815명의 청년들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취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3040세대 815명은 전주에서 '직장인, 학부모, 생활형 사내직원이 모여 공 정사회 실현과 양극화 해소, 민주사회 대개척의 길을 만들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게재하였다" 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동세상'과 '역경부락(即興扶 弱, 均濟를 부르고 약자를 도우며)의 정 신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뜻을 같 아고 있음'을 강조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 무 렷지도자가 안양된 양주 녹두관아에 화생자들을 추모하고 김계남 장군이 처형된 초록바위모에 이재명 집현전 의 지를 담아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날 선언은 '대동'을 함께 실천하 (대동세상 구현)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시대가 흐른 2021년에도 여건 이 유호리라 청년 거각변은 청년 소 득빈곤, 부동산분쟁, 불공정, 불평등으

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선출 장 배으로 부대의 해방을 염원하는 선언 식"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제과 기본소 득, 청년기본대를 등을 적극 지지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청년 사회 용에 등을 포함한 청년들의 정치 선출 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들도 제안하였다.

지지 선언문에는 "이재명 후보는 반 척과 복권을 얻었고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역에 대한 요구를 실현 할 수 있는 실효적인 후보로서 동학농 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 극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적대 적으로 지지를 선언한다고 권명하고 있다.

이를 815명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 적 지원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호 난이기에 차별없이 지역불평등에 맞서고 대동세상을 만들어 갈것임을 확신하며 조남에서 출발해 전국으 로 뚫릴처럼 박근혜 동학농민혁명 100 전력이 있는 3040세대들이 함께 지지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문]

우리 3040세대는 절공교체와 사회 제도개혁을 통해 한국사회가 민주화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라났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정문부과 노무현대통령이 참여정부 탄생을 지켜보았고, 임정희정부를 탄생시킨 총리연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하 였습니다. 여전히 30대와 40대의 40%이 상이 일용직에만 지지하는 것처럼 우 리는 민주화운동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들 지지하며 한 사회의 건보와 개척과 개혁을 중중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젊어져

아 할 경제력, 사회적 두계는 마비 수 있는 차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 종산가치의 급격한 자산불평등을 관 찰이 배타적지라는 신조어까지 확산 했고 코로나19 팬데믹사태는 거대 자본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고 있는 양 상이며 '일자노선'으로 일한 청년들 은 가상화폐를 위험자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증가, 청년실업 문제를 3040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갈수록 심 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든 YOLO(우리는 live once가 아니라 live well 을 살고 있습니다. 지지대생이 아니 라 함께공생을 원합니다.

우리 3040세대는 불공정과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더 유능하고 공정한 국가지도자를 뽑 아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 복한 8월15일, 815명이 한뜻을 모아 공정사회실현과 양극화해소, 민주사 회개척의 길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지와 뜻을 더 널리 알리고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 사가 남아있는 녹두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녹두관은 김계 남 장군이 처형되신 초록바위, 관지산에 위치해 있으며 무명동학농민지도자가 안치된 곳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1989년 함께 공산치 는 대동세상 구현'을 위해 앞장섰던 동학농민군의 항쟁을 가슴속에 기억 하며 청년두거민고, 청년소득빈곤, 부 동신(동계,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를 광적으로부 터의 해방을 염원합니다.

그 실행을 위하여 공정사회, 광공정 가 장학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 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제과 기본소 득, 청년기본대를 관 찰을 책자 지지이며 더 많은 3040 세대의 정치선출과 정치개혁을 위하 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선 또는 폐 지와 청년사회개혁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재명후보가 상남시장을 경기지도자를 거각면서 반척과 복권 을 앞두고 원칙과 강만 추진책으로 일 론 선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적인 가치의 지향만 말하면 될 지 않고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영 능적 실천이 앞으로 한국사회 여러 온 상향을 전변시킬 수 있는 열등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후보자로서 동학농민혁명정 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 니다.

지난 8월 15일 전주 명문초 이재명후 보의 역경부락과 대동세상이라는 정 치지도자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같다 하였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사 식은 호산이며 이재명후보 평인의 본 째한 분별 능력이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화평적인 지 역개발정책에 앞장서고 역설함이 없 이 다짐해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 겠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전주에서 지지선언에 이어 시 도의 모든 3040세대들이 시대대 개혁의 건전한 행로를 담아 이재명후 보 지지선언에 동참하길 믿어, 앞장 서기를 호소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 다.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3040 세대 815명 일동

#공정사회
1235217308

<문화매일신문 2021년 8월 19일자 2면>



전주 3040세대 815명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3040세대들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8월15일을 맞이하여 전주에서 815명의 청년들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공정사회, 공정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3040세대 815명은 전주에서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공정사회 실현과 양극화해소, 민중사회 대개혁의 길을 만들고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개최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동세상’과 ‘억강부약(抑強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의 정신’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사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군 무명지도자가 안치된 전주 녹두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김개남 장군이 처형된 초록바위로 이동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번 선언은 ‘더불어 함께 잘 살자(대동세상구현)’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시대가 흐른 2021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청년 주거빈곤, 청년 소득빈곤, 부동산문제,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진출 장벽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는 선언식”으로써 이재

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등을 적극 지지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청년 석패율제 등을 포함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들도 제안하였다.

지지 선언문에는 “이재명 후보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로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선언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들 815명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지향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호남이기에 차별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고 대동세상을 만들어갈 것임을 확신하며 호남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동학농민혁명처럼 전국의 모든 3040세대들이 함께 지지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문]

우리 3040세대는 정권교체와 사회제도개혁을 통해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라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탄생을 지켜보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하였습니다. 여전히 30대와 40대의 40%이상이 집권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민주화운동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지지하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가치와 개혁을 존중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깊어져야 할 경제적, 사

회적 무게는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자산불평등을 만들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양산했고 코로나19 팬데믹사태는 거대 자본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며 '각자도생'으로 몰린 청년들은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증가, 청년 실업 문제 등 3040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든 YOLO, 우리는 live once가 아니라 live well을 원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공생을 원합니다.

우리 3040세대는 불공정과 사회적불평등이 개선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더 유능하고 공정한 국가지도자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8월 15일, 815명이 한뜻을 모아 공정사회실현과 양극화해소, 민주사회대개혁의 길을 만드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지와 뜻을 더 널리 알리고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사가 남아있는 녹두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녹두관은 김개남 장군이 처형되신 초록바위 곤지산에 위치해 있으며 무명동학농민지도자가 안치된 곳입니다.

우리 815명은 1894년 '함께 잘살자는 대동세상 구현'을 위해 앞장섰던 동학농민군의 합성을 가슴속에 기억하며 청년 주거빈곤, 청년 소득빈곤, 부동산문제,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진출 장벽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합니다.

그 실현을 위하여 공정사회, 공정국가 정책

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더 많은 3040세대의 정치진출과 정치개혁을 위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선 또는 폐지와 청년석패율제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재명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원칙과 강한 추진력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적인 가치와 지향에만 몰입하지 않고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한 행동적 실천이야말로 한국사회가 어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실력 있는 후보자로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지난 8월 1일 전주 방문 시 이재명 후보는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이라는 정치적 지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같다 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호남이며 이재명후보 정신의 본향은 분명 호남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차별 없이 지역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억울함이 없이 다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만들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전주에서의 지지선언에 이어서 전국의 모든 3040세대들이 사회대개혁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재명 후보 지지운동에 들붙처럼 일어나 앞장서기를 호소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3040세대 815명 일동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6

언론사

주식회사 경북신문사(경북신문)

심의대상

경북신문 8월 2일자 18면 「윤석열, 인천상륙작전2」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외부 기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신문

특별기고

2021년 8월 2일자
18면 (오리나간)

윤석열, 인천상륙작전2



최성덕

윤서교 중앙회 회장·공학박사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가 큰 사고(?)를 쳤다. 국민의 힘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전격 입당하자 모두들 혀를 찰라고 호박집에 불 난 것 마냥 야단법석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총격의 품질을 알고 있다.

특히 여당의 총격은 도를 넘고 있다.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 기지개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독재자 후예의 품에 안겼다"고 독심을 퍼붓고 있다. 윤 후보의 국민의 힘 입당은 성공확률 5000분의 1이라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원수를 연상하게 한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인천상륙작전2 성공에 문 정권과 여당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은 맥아더 원수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혼란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김일성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사실 좌파 쪽에서는 맥아더 원수를 욕하지만 그가 없었다라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한 지도자의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역사책 사실들이 음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 보이지 않는 땅국의 지류길에 불세출의 윤석열이란 큰 바위 일곱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한국 정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정치관 인천상륙... 그의 결행은 정말로 통쾌하다. 이는 국운이 아직도 국민의 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혹자들은 중도보수들의 지지는 물 건너가서 차기 대선은 실패한다고 낙담하는 이들도 많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번 윤 후보의 결행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합했다고 욕을 언어하면서도 민정당

에 들어가서 자기 정치를 한 것과 다름없다.

법을 잡으려면 법 골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번엔 윤 후보가 조건 없이 국민의 힘에 전격 입당한 것은 원으로 박수를 받을 만하다. 대권후보로 낙점받으면 그때 가서 자기 정치를 하면 된다.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국민의 힘을 대수술하면 집 나왔던 표기들은 저절로 돌아 올 것이다. 이번 윤 후보의 결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사실 국민의 힘은 이상한 당이다. 아들을 낳지 못해 대(代)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여야 하는 집에서는 양자될 사람에게 온갖 호(污) 조건을 제시하고 잘 보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정당의 생령은 정권 창출이다. 정권 창출을 하지 못

하면 시체다. 즉, 감시들이다. 하지만, 대통령감이 없어 바깥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양자 들여야 할 국민의 힘이 온갖 배짱을 부리고 큰 소리치면서 윤석열 후보를 온박하는 것을 보고 상식이 있는 당인가 귀를 의심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사내 대장부답게 양자의 조건은 하나도 없다. 대를 이어주겠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경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얼마나 당당한가. 이것이 정의·공정·상식의 철학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감동하고 열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국민의 마지막 선택이다. 윤 후보를 흔들지 마라, 흔들면 민을 나라가 흔들린다. 문 정권에서는 아만한 인물을 배출하였으면 감동하고 밀어주어 아끼 왜 못살게 구는가. 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노래와 같이 윤 후보 결행은 양행나개 밀어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키고 있다. 또한 시은2을 준비하고 있는 윤서교(윤석열을 사명하는 모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윤 후보는 혼자가 아니다.

국민 모두는 윤 후보야말로 국민이 원해서 나온 인물임을 주목하고 힘을 실어주자. 한국정치 역사를 새롭게 쓰고 나라를 구할 인천상륙작전2는 역사책 대사건이다. 이는 국운이 아직도 국민의 힘에 남아 있다고 말리는 전령사이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023-017-0000

<경북신문 2021년 8월 2일자 18면>

윤석열, 인천상륙작전2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가 큰 사고(?)를 쳤다. 국민의 힘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전격 입당하자 모두들 혀를 찼다고 호떡집에 불 난 것 마냥 야단법석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충격의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여당의 충격은 도를 넘고 있다.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 거지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독재자 후예의 품에 안겼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 윤 후보의 국민의 힘 입당은 성공확률 5000분의 1이라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원수를 연상하게 한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인천상륙작전2 성공에 문 정권과 여당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은 맥아더 원수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혼줄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김일성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사실 좌파 쪽에서는 맥아더 원수를 욕하지만 그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한 지도자의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들이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망국의 지름길 앞에 불세출의 윤석열이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한국 정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정치판 인천상륙, 그의 결행은 정말로 통쾌하다. 이는 국운이 아직도 국민의 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혹자들은 중도 보수들의 지지는 물 건너가서 차기 대선은 실패한다고 낙담하는 이들도 많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번 윤 후

보의 결행은 김영삼 대통령이 야합했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민자당에 들어가서 자기 정치를 한 것과 다름없다.

범을 잡으려면 범 굴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번에 윤 후보가 조건 없이 국민의 힘에 전격 입당한 것은 참으로 박수를 받을 만하다. 대권후보로 낙점 받으면 그때 가서 자기 정치를 하면 된다.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국민의 힘을 대수술하면 집 나갔던 토끼들은 저절로 돌아올 것이다. 이번 윤 후보의 결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사실 국민의 힘은 이상한 당이다. 아들을 낳지 못해 대(代)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여야 하는 집에서는 양자 될 사람에게 온갖 호(好) 조건을 제시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정당의 생명은 정권 창출이다. 정권 창출을 하지 못하면 시체다. 즉, 강시들이다. 하지만, 대통령감이 없어 바깥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양자 들여야 할 국민의 힘이 온갖 배짱을 부리고 큰 소리치면서 윤석열 후보를 겁박하는 것을 보고 상식이 있는 당인가 귀를 의심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사내대장부답게 양자의 조건은 하나도 없다. 대를 이어주겠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경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얼마나 당당한가. 이것이 정의·공정·상식의 철학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감동하고 열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국민의 마지막 선택지다. 윤 후보를 흔들지 마라. 흔들는 만큼 나라가 흔들린다. 문 정권에서는 이만한 인물을 배출하였으면 감동하고 밀어주어야지 왜 못살게 구는가.

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노래와 같이 윤 후보 곁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키고 있다. 또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윤 후보는 혼자가 아니다.

국민 모두는 윤 후보야말로 국민이 원해서 나온 인물임을 주목하고 힘을 실어주자. 한국 정치 역사를 새롭게 쓰고 나라를 구할 인천상륙작전²는 역사적 대사건이다. 이는 국운이 아직도 국민 편에 남아 있다고 알리는 전령사이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7 |
| 언론사 | 주식회사 일요시사신문사(일요시사) |
| 심의대상 | 일요시사 7월 25일자 제1333호 5면 「홍준표에게 기회를!」 제하의 칼럼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외부 기고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일요시사 2021년 7월 25일자 5면>



홍준표에게 기회를!

조선 후기 문신인 윤기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하지 말아야 할 금기를 제시해 후손들로 하여금 화를 면하고 참된 사대부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남긴 글인 ‘집안의 금계(家禁)’ 중 일부를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한 곳에 오래 살다보면 그 곳의 이점은 잊고 폐단만 자꾸 눈에 띄기 마련이다. 이리므로 어디 어디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너를 버리고 저 낙토로 가리라. (逝將去汝 適彼樂土)’하는 마음이 들어 고대 결행해 떠나간다. 하지만 옮겨가고 나면 반드시 어딘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리저리 찾아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약간의 가산과 집기를 남김없이 모조리 탕진하고 생계는 끝내 여유롭지 못하며, 필경에는 파산하고 낭패를 보아 다시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내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쫓대가 없어 혹 여기보다 저기가 나을까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천하에는 살 수 없는 곳도 없고, 또한 폐단이 전혀 없는 곳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는 짓이다.』

상기 글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흡사 작금에 국민의힘 아니, 속칭 보수 세력들의 쫓대 없는 행동에 일침을 가하는 듯 보인다. 가까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멀리서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경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다. 그를 살펴보면 이 나라 보수 세력들은 심지어 ‘수척하고 초라한 모

습으로 여기 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것만 찾아다닌다는 의미를 지닌 상가지구(喪家之狗, 상갓집 개)를 연상시킬 정도다.

각설하고, 2주 전 <일요시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홍 의원에게 지고 있는 부채, 그에 대한 적극적 거부 세력의 미미함, 그리고 재도전의 이점이라는 세 가지 세세한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는 본질적 이유 두 가지 들겠다. 먼저 한 집안의 대표자는 그 집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대목, 국민의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다. 홍 의원은 필자가 신한국당 중앙 사무처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1996년 입당한 이후 불청객의 등장으로 잠시 집을 비운 적은 있었으나 국민의힘과 동고동락했다. 짧지 않은 기간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에 머물렀던 필자가 지난 시간을 회고해보고 또 현재 국민의힘 구성원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건대 홍 의원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그가 언급한, 자신이 국민의힘의 주인이라는 말처럼 그곳 주인은 홍 의원이다.

다음은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중 한 사람으로 결정되리라 예상된다. 필자는 역선택의 함정으로 인해 이 지사가 될 확률이 더 크다 판단한다.

여하튼 그 두 사람 중 누가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홍 의원의 승리가 예상된다. 후보로 결정되면 곧바로 문재인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리라 예견되는 이 지사는 개인 역량으로 살필 때 모든 면에서 홍 의원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이

전 총리의 경우 차기 대선의 중대 변수인 지역 주의의 뒷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있다.

다시 부연한다. 정치 특히 한 국가의 지도자는 평생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 판따라 류의 몫

이 아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옳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갓집 개처럼 추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집적대지 말고 그 곳의 주인인 흥 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9 |
| 언론사 | 주식회사 호남제일신문(호남제일신문) |
| 심의대상 | 호남제일신문 9월 10일자 11면 「공정한 세상' 과 '지방분권 실현' 위한 익산 시민 8,336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공정한 세상’과 ‘지방분권 실현’ 위한

익산시민 8,336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익산시민 8,336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호남선의 한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및 뿌리산업 약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날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가 시급한 형편이지만, 미흡한 국가 지원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들은 국회의원 지역구마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함께, 인구가 불리는 수도권은 과대 대표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과소대표 되는 차별적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활한 농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 시절에는 호남자벌로 인하여,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전북 소외로 인해 지역발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이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균형성장을 가장 선두에서 외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의 소상권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고 지역민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과 강원-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을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는 소외된 약자와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현장행정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과 청년, 지역의 서민들이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앞서 실천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립 의료원 건립, 시장실 CCTV 설치를 통한 무명 행정 실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외버스 무료 Wi-Fi 설치, 중고등학교 무상상복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다 잡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산후조리비와 무상교복 지원,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실 CCTV 설치, 재난기본소득 최초 시행, 금융약자에 대한 기본대출, 불법 사금융 근절, 계곡 불법사설물 철거, 어린이 건강과일 지급, 공공배달업을 도입하는 등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했습니다.

전라북도도 인구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인구 과소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익산시 인구는 28만이 무어져 호남 3대 도시의 위상도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차별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된 기본국가를 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호남

안에서의 전북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정치인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돌아보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시절부터 경기도지사에 이르기까지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위해 초지일관 노력해왔으며,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외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 8336명은 노동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청렴한 행정이 이재명, 명확한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기후위기 대응, 복지확충과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되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고, 분배와 복지강화를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지난 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별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국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21-09-10) 1307



‘공정한 세상’과 ‘지방분권 실현’ 위한

익산시민 8,336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익산시민 8,336인과 함께 더불어민 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호남선의 한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및 뿌리산업 약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날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가 시급한 형편이지만, 미흡한 국가 지원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들은 국회의원 지역구마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함께,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은 과대 대표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과소대표 되는 차별적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농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 시절에는 호남차별로 인하여,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전북 소외로 인해 지역발전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이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균형성장을 가장 선두에서 외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들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고 지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과 강원-호남을 연결하는 강호 축을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는 소외된 약자와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현장행정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과 청년, 지역의 서민들이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앞서 실천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시장실 CCTV 설치를 통한 투명행정 실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내버스 무료 Wi-Fi설치,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다 잡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산후조리비와 무상 교복 지원,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술실 CCTV 설치, 재난기본소득 최초 시행, 금융약자에 대한 기본대출, 불법 사금융 근절,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어린이 건강과일 지급,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는 등 공약 이행을 96%를 달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구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인구 과소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익산시 인구는 28만이 무너져 호남 3대 도시의 위상도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된 기본국가를 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호남 안에서의 전북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정치인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에 이르기까지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위해 초지일관 노력해왔으며, 역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외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 8336명은 노동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청렴한 행정가 이재명, 명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 기득권 세

력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기후위기 대응, 복지확충과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고, 분배와 복지강화로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지난 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별 선거인단 투표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1 |
| 언론사 | 주식회사 중앙신문(중앙신문) |
| 심의대상 | 중앙신문 9월 3일자 2면 「홍준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제목을 사용하였고,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특정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중앙신문

2021년 09월 03일
02면 (종합)

홍준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

지난달 조사 때보다 무려 7%p 상승

윤석열 후보, 3%p ↓ '그레도 1위'

진보 이재명 후보 31% 여전히 1위

보수 윤석열 후보 7% 앞서 1위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4개 여론조사기관, 1012명 조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말 조사 때보다 무려 7%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9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홍 후보는 8월 3주차 조사보다 7%p 오른 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22%로 1위를 기록했지만, 8월 3주 때와 비교하면 3%p가 하락했으며, 유승민 후보는 10%로 3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진보진영에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로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이낙연 후보는 변함없는 16% 대를 유지해 위치변동이 없었고, 박용진·심상정·정세균·추미애 후

보는 각각 3%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33%) ▲윤석열 후보(24%) ▲이낙연 후보(7%) ▲홍준표 후보(5%) 순으로 나타나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가장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42%에 이어 윤 후보 35%를 앞서 2주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가장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38%, 윤 후보는 35%를 지지율을 보여 이 후보가 8월 4주차 조사 대비 6%p 상승

하며 윤 전 총장을 추월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대답이 43%,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답은 46%, 모름·무응답 1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1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상대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1%(총 3734명과 통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남주기자

(22.5×9.6cm)

<중앙신문 2021년 9월 3일자 2면>

홍준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

지난달 조사 때보다 무려 7%p 상승
 윤석열 후보, 3%p↓ ‘그래도 1위’
 진보 이재명 후보 31% 여전히 1위
 보수 윤석열 후보 7% 앞서 1위권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
 4개 여론조사기관, 1012여명 조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말 조사 때보다 무려 7%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9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홍 후보는 8월 3주차 조사보다 7%p 오른 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22%로 1위를 기록했지만, 8월 3주 때와 비교하면 3%p가 하락했으며, 유승민 후보는 10%로 3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진보진영에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로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이낙연 후보는 변함없는 16% 대를 유지해 위치변동이

없었고, 박용진·심상정·정세균·추미애 후보는 각각 3%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33%) ▲윤석열 후보(24%) ▲이낙연 후보(7%) ▲홍준표 후보(5%) 순으로 나타나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 42%에 이어 윤 후보 35%를 앞서 2주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38%, 윤 후보는 35%를 지지율을 보여 이 후보가 8월 4주차 조사 대비 6%p 상승하며 윤 전 총장을 추월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대답이 43%,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답은 46%, 모름·무응답 1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1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상대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1%(총 3734명과 통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3 |
| 언론사 | 주식회사 광전매일신문(광전매일신문) |
| 심의대상 | 광전매일신문 10월 27일자 11면 「윤석열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제하의 칼럼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은퇴 지지서명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광전매일신문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지 않았다. 값비싼 피가 댓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끊임 없는 망발을 일삼아온 윤석열이 급기야 전두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다. 불꽃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한 날, 광주에 대한 사과를 자신의 개새끼에게 쥐버렸다.

윤석열에게 우리 광주시민은 게, 돼지보다 못한 것이다. 암울했던 전두환 통치 시절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학우들을 뒤로하고 고시촌 뒷골목에서 어슬렁거리며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다, 천신만고 끝에 불잡은 검창이라는 권력의 끈을 지렛대로 대한민국을 넘보는 자리까지 왔으니, 그가 보여준 천박한 역사 인식과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동네 뜰마니 수준의 사내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치지도자로서 자질이 함량미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윤석열을 대권후보경선에 참여시키고 있는 국민의 힘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토착예구를 옹호

칼럼
조영무
공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윤석열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하고 재벌의 위치다꺼리하는 정당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없어야 할 정당과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품에 안겨있는 황색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권력을 찬탈하고자 쫓고 쫓쟁긴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갖은 교연영색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윤석열은 이러한 거대한 기득권 플랫폼으로 성장한 권력찬탈세력에 편승

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벼락 오바마의 말이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서야, 권력이란 속성은 꼬리를 내린다.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였을 때, 그 나라 백성이 받는 고통은 항상 우려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바로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험난한 미래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 윤석열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남의 불행은 자신의 불행으로 똑같이 인식할때에 이루어진다. 눈과 발을 같은 정기를 녹여 만든 칼과 죽창으로 썩은 조정과 그 관료 그리고 조총으로 무장한 의세에 맞선 동학의 정신으로 이 일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 우리 모두 윤석열을 은퇴시키기 위한 지지서명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11면 (오표니언)

Q4_1-11_01cm



윤석열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지 않았다. 값비싼 피가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끊임없는 망발을 일삼아온 윤석열이 급기야 전두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다. 들끓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한 날, 광주에 대한 사과를 자신의 개새끼에게 쥐버렸다.

윤석열에게 우리 광주시민은 개, 돼지보다 못한 것이다. 암울했던 전두환 통치시절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학우들을 뒤로하고 고시촌 뒷골목에서 어슬렁거리며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다, 천신만고 끝에 붙잡은 검찰이라는 권력의 끈을 지렛대로 대한민국을 넘보는 자리까지 왔으나, 그가 보여준 천박한 역사인식과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동네 뜰마니 수준의 사내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치지도자로서 자질이 함량미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윤석열을 대권후보경선에 참여시키고 있는 국민의 힘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토착왜구를 옹호하고 재벌의 뒤치다꺼리하는 정당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없어져야 할 정당과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품에 안겨있는 황색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권력

을 찬탈하고자 쫓고 잘생긴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갖은 교언영색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윤석열은 이러한 거대한 기득권 플랫폼으로 성장한 권력찬탈세력들에 편승하여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 못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 재벌과 외세의 먹잇감으로 넘겨주고, 자신은 십상시들보다 더한 아부쟁이들과 놀아날 사악한 통치만 바라고 있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역사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내 몸에 오물 묻지 않기를 바랄수는 없는 것이다. “권력은 싸우지 않고서는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는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말이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고서야, 권력이란 속성은 꼬리를 내린다.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였을 때, 그 나라 백성이 받는 고통은 항상 우려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바로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험난한 미래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 윤석열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남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똑같이 인식할 때에 이루어진다. 논과 밭을 갈던 쟁기를 녹여 만든 칼과 죽창으로 썩은 조정과 그 관료 그리고 조총으로 무장한 외세에 맞선 동학의 정신으로 이 일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 우리 모두 윤석열을 은퇴시키기 위한 지지서명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9 |
| 언론사 | 부천신문 |
| 심의대상 | 부천신문 11월 11일자 3면 「부천시을 서영석, 윤석열 후보선출에 ‘공정과 상식’의 재건...」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지역 당협위원장이 당내 경선 결과를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천신문
정치
제 1354호 •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3

부천시을 서영석, 윤석열 후보선출에 ‘공정과 상식’의 재건...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입장문 발표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윤석열 집권 일출을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에 대해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이 8일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영석입니다. 먼저, 저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당협들과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성명해주신 데 대하여 당협위원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협은 물론 많은 국민의 사랑과 지지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18선에 실사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21의 지난 11월의 토론과 정치적 캠페인에서 찾아낸 호 · 불호와 찬 · 반을 통한 윤 후보의 역정은 정치 신인으로서는 손수 힘으로, 그보다는 후원의 지지한 사례와 양지에

오로지 잘못된 법치를 바로잡겠다는 후보의 열정에 대한 당협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이 전경성에 대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결정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의 재건을 위한, 윤석열 정부 비전간의 무한과 무치에 대한 중대한 승인과 혁신을 위한 헌신의 열정과 성취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공천 과정에서 사외의 곱씹을 필요 없고, 대한민국과 국민과 재건을 위한 국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에, 새롭 다시 시작한다는 충성을 잃지 않고 전 임원들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진행하기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50여 일만에 걸친 코로나 19가 아직도 국민과 생명의 재산의 훼손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탄과 생명의 질곡에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의료, 경제지침의 하루 누척과 함께들음으로 지친 국민

을 위한 헌명한 등대 역할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당과 당협들의 책입니다.

이제, 그 최前的 사명을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이끌라는 당원과 국민의 열망으로, 당원들과 함께 같이 가슴에 새기고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그 날까지 재의 당원들은 헌신할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를 지지 해주시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정권 교체에 위한 대선 승리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함께할 것을 찾아 더욱 철저한 개인위생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대표
부천신문, '부천행자' 서영석

※이 기사 bucheonews@gmail.com



〈부천신문 2021년 11월 11일자 3면〉

부천시을 서영석, 윤석열 후보선출에 ‘공정과 상식’의 재건…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입장문 발표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에 대해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이 8일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영석입니다.

먼저, 저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당원들과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당협위원장으로서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당원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내년에 실시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지난 10번의 토론과 정치적 행보에서 벗어난 호·불호와 찬·반을 통한 윤 후보의 역정은 정치 신인으로서의 순수함으로, 그보다는 후보의 진지한 자세와 열정이, 오로지 잘못된 법치를 바로잡겠다는 후보의 열망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의 진정성에 대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금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결정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의 재건은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무능과 무법, 무치

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혁신을 위한 민심의 열망과 성원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시비와 갈등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의 구국과 재건을 위한 국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전 당원들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50여 일간에 걸친 코로나 19가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훼손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탄과 절망의 질곡에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료 관계자들의 피로 누적과 힘겨움으로 지친 국민을 위한 분명한 등대 역할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당과 당원들의 몫입니다.

이제, 그 희망의 시작을 윤석열 후보가 감당해달라는 당원과 국민의 여망으로, 당원들과 함께 깊이 가슴에 새기고 대통령으로 선택받는 그날까지 저와 당원들은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 승리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환절기를 맞아 더욱 철저한 개인위생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윤석열 국민캠프 정무특보
부천의힘, ‘부천청지기’ 서영석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20 |
| 언론사 | 주식회사 세계타임즈(세계타임즈) |
| 심의대상 | 세계타임즈 11월 26일자 2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3자 정책토론 제안」, 11월 29일자 3면 「심상정 대통령 후보, 청년정의당 출범식 인사말」, 12월 6일자 2면 「국가혁명당, 여론조사 지지도 3위, 허경영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제공한 정책토론 제안문이나 입장문, 출범식 인사말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1년 11월 26일
32면 (종합)

세계타임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3자 정책토론 제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25일 오전, "지난 22일 김영삼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예비후보군에서 이제는 3자 대통령 후보 구도로 굳혀질 허경영 대통령 후보 본인과 정책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허경영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님은 취임후 100일 안에 50조원을 투자하여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님은 1인당 30~5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였습니다.

두 후보님 모두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님은 자영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고 이재명 후보님 또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좋지만, 실상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허경영은 지난 총선에 출마해 코로나로 인해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을 쥐어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허무맹랑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현재 2021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블루로 인해 자살율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철에선 코로나가 안걸리고 영업장에서만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빨리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고, 지금이라도 18세 이상 1억씩을 쥐서, 2천조의 가계부채를 없애고 그 빚을 국가가 떠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는 가계부채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

비 고작 45%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일본은 정부부채가 238%이고 미국은 128% 나 됩니다.

프랑스는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지원금으로 8만 2천유로 (1억 1300만원)을 지급했고 일본또한 1770만엔 (1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24만 5천 달러(2억 8500만원)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허경영의 정책이 아직도 허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각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기자

(20.3.15.1cm)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3자 정책토론 제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25일 오전, “지난 22일 김영삼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예비후보군에서 이제는 3자 대통령 후보 구도로 굳혀질 허경영 대통령 후보 본인과 정책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허경영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님은 취임후 100일 안에 50조원을 투자하여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님은 1인당 30~5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줘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였습니다.

두 후보님 모두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님은 자영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또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좋지만, 실상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허경영은 지난 총선에 출마해 코로나로 인해 돈 때문에 힘들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긴

급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허무맹랑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현재 2021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블루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철에선 코로나가 안걸리고 영업장에서만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빨리 위드코로나로 전향하고, 지금이라도 18세 이상 1억씩을 줘서, 2천조의 가계부채를 없애고 그 빚을 국가가 떠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는 가계부채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고작 45%입니다.

반면에 옆 나라 일본은 정부부채가 235%이고 미국은 128%나 됩니다.

프랑스는 자영업자에게 코로나지원금으로 8만 2천유로 (1억 1300만원)을 지급했고 일본 또한 1770만엔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24만 5천달러(2억 8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허경영의 정책이 아직도 허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각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 청년정의당 선대위 출범식 인사말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예요. 먼저, 우리 청년정의당 선대위 출범 축하드리고

요. 오늘 이 선대위 출범하기까지 애 많이 쓰신 우리 강민진 대표님, 또 여러 제안을 했을 텐데, 그 제안을 선뜻 수용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이제 대선 D-100이거든요. 그 전날 청년정의당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은 '심상정으로의 정권교체' 100일 승리를 청년정의당이 주도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모든 후보들이 지금 2030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2030이 결정

할 거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34년간의 양당정치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청년들이고, 빼앗긴 청년들의 미래를 되찾는 것이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다. (양당 후보가) 대충 고쳐 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봐주실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물러 섯거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러분 함께 외쳐 봅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요즘 세계의 석학들이 이 시대를 '위대한 리셋 시대'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듯이,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산업, 경제, 개인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2030에게 전환의 세대되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이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제를 만나야 시대교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변화는 유력한 정치인들, 후보들 허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직된 시민의 힘, 우리 청년들의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86세대, 이분들도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펼쳐나가서 독재와 노동탄압에, 그리고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격렬하게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2030세대가 기성세대들이 대상화시키고,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MZ세대만 단호히 때어 버리고, 대한민국의 100년의 기준을 세우는 위대한 리부트 세대, 전환의 세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상실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대학을 가도 학교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등록금만 파박파박 냅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은 입자

리가 없어서 집에서 시간을 죽여야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학교에 못 가니까 사실상 생활의 전부를 빼앗긴 겁니다.

커대 양당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청년들의 확장실업률이 최고 27%가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4명 중의 1명이 사실상 실업입니다. 연간 840만 원 이상 되는 월세에 대해서는 임싹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집주자들 연간 270만 원 증부세는 쥘아주는 데 월안이 되어 있다 뭐서 답답했습니다. 성폭력 근절하겠다고 말로는 떠돌아 다니고,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가는 우리 여성들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280억입니다. 이 양당이 가진 의석이 280석은 이 대한민국을 280번이나 고치고도 남을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대책도 개선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영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영진 기자
(02-9-121)cm

<세계타입즈 2021년 11월 29일자 3면>

📖 보도내용

심상정 대통령 후보, 청년정의당 선대위 출범식 인사말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예요. 먼저, 우리 청년정의당 선대위 출범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선대위 출범하기까지 애 많이 쓰신 우리 강민진 대표님, 또 여러 제안을 했을 텐데, 그 제안을 선뜻 수용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이제 대선 D-100이거든요. 그 전날 청년정의당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은 '심상정으로의 정권교체' 100일 승리를 청년정의당이 주도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모든 후보들이 지금 2030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2030이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34년간의 양당정치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청년들이고, 빼앗긴 청년들의 미래를 되찾는 것이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다. (양당 후보가) 대충 고쳐 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봐주실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물러 섯거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러분 함께 외쳐 봅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요즘 세계의 석학들이 이 시대를 '위대한 리셋 시대'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듯이,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산업, 경제, 개인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2030에

게 '전환의 세대'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이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를 만나야 시대교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변화는 유력한 정치인들, 후보들 허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직된 시민의 힘, 우리 청년들의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86세대. 이분들도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독재와 노동탄압에, 그리고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격렬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2030세대가 기성세대들이 대상화 시키고,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MZ세대란 딱지를 단호히 떼어버리고, 대한민국의 100년 기준을 세우는 '위대한 리부트 세대, 전환의 세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상실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대

학을 가도 학교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등록금만 따박따박 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시간을 죽여야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학교에 못가니까 사실상 생활의 전부를 빼앗긴 겁니다.

거대 양당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청년들의 확장실업률이 최고 2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4명 중의 1명이 사실상 실업입니다. 연간 840만 원 이상 되는 월세에 대해서는 입 뺨긋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집부자들 연간 270만 원 종부세는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되어 앞다투어 담합했습니다. 성폭력 근절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어 대면서,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가는 우리 여성들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280석입니다. 이 양당이 가진 의석이. 이 280석은 이 대한민국을 280번이나 고치고도 남을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대책도, 개선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국가혁명당, 여론조사 지지도 3위, 허경영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 즉각 중단하라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위로 안철수, 심상정 등을 제치고 이재명, 윤석열 양당 후보와 3자 대결 구도를 굳히고 있으며 특히, 20~30 연령층에서 양당 후보를 위협하자 '허경영 죽이기' 각종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

허경영 후보를 음해하는 공작정치는 공정선거를 심각히 위협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12월 4일 11시 45분부터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허



경영 죽이기'는 공중파 방송의 공공성을 역행하고, 국민 지지도 3위로 치솟고 있는 허 후보에

대한 불공정 방영에 대하여 '정정보도·재방영 금지'를 요구한다.

허경영은 많은 정치인들을 통틀어 세금을 최고 고액을 납부하고 있고 여·야 거대정당의 두 후보에 비하면, 너무 투명해서 속이 다 비칠 정도이다. 대장동을 비롯한 여·야 후보들의 끊임없는 의혹들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프로는 취재/보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묻고 싶다.

또한, 중앙선거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허경영 대선 후보 죽이기 등, 각종 음모를 선거법 위반으로 발본색원하기를 촉구한다.

이재룡 기자

(20.3*13.2cm)

<세계타임즈 2021년 12월 6일자 2면>



보도내용

국가혁명당, 여론조사 지지도 3위, 허경영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 즉각 중단하라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위로 안철수, 심상정 등을 제치고 이재명, 윤석열 양당 후보와 3자 대결 구도를 굳히고 있으며 특히, 20~30 연령층에서 양당 후보를 위협하자 '허경영 죽이기' 각종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

허경영 후보를 음해하는 공작정치는 공정선거를 심각히 위협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12월 4일 11시 45분부터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허경영 죽이기'는 공중파 방송의 공공성을 역행하고, 국민 지지도 3위로 치솟고 있는 허 후보에 대한 불공정 방영에 대하여 '정정보도·재방영 금지'를 요구한다.

허경영은 많은 정치인들을 통틀어 세금을 최고 고액을 납부하고 있고 여·야 거대정당의 두 후보에 비하면, 너무 투명해서 속이 다 비칠 정도이다. 대장동을 비롯한 여·야 후보들의 끊임없는 의혹들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는 취재/보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묻고 싶다.

또한, 중앙선거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허경영 대선 후보 죽이기 등, 각종 음모를 선거법 위반으로 발본색원하기를 촉구한다.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27 |
|------|---|
| 언론사 | 주식회사 열린순창(열린순창) |
| 심의대상 | 열린순창 12월 1일자 23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생각하며」 제하의 칼럼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 항원경으로 본 세상 -

내년 대선(大選)과 지선(地選)을 생각하며 표(票)를 찍는 당신은 올바른 유권자입니까?

김인성 사무이사(7만경병호연구회)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해다. 대선은 3월9일, 지선은 6월 1일 실시한다. 못바라나 반박되는 대선은 이보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후반기다. 지르는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군·구, 도의원, 군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할까

마련 없이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남 시장 재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거쳐,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단 한 번의 국회의원 경력도 없는 원외인사가 대선후보가 된 것은 특별한 행운을 받을 일장받은 걸까?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기도 했다. 총선거에서 우리 쪽에 유리한 입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는데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예 더 이상 더 민주 국회의원을 뽑을 수 없는 반갑의 발로였다. 그래서 이재명은 당내 열세를 일관 국민의 입도적인 지자로 여겼사했다.

이재명은 다른 후보들과 격이 다르다. 지금까지 거기에 남아있는 대통령 후보들과 견주어볼 때 총력전에서 단연 최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다. 연설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된다. 금강이나면 유망에서 잠깐이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의 이러한 유년시절은 생략한다. 검정고시를 거쳐 정학생으로 법대를 진학해 사법고시를 통과해 연수원 생제로는 검판사할 수 있었지만 인권변호사를 택한 것에 주목한다. 그 길을 계속 걸어왔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이 되었고, 도지사가 되었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인 이상 일신상의 명예도 얻을 수 없었지만 그의 핵심은 불공정성을 바꾸어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大同世)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 윤석열은 자격이 되는가. 그런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님 현애한테 물어 보면 된다. 한마디로 완전 자격이다. 무식한 발언만 줄줄이 쏟아내고 써온 원고나 읽는 그런 후보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재명이 역대 최고의 후보라면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후보다. 평생 결사로 검찰총장으로 살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엄청난 특혜를 논감아주고, 본인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고 신드립으로 거소하고 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바꾼 사람이 대통령인 된다는 것이 온당할까. 이것은 그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가장 맞지 않다. 그런 대 윤석열은 적반하장으로 공정과 상식을 포장

하고 있으니 불만을 금할 수가 없다. 그 심적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으니 지켜보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누가 되어야 할까

군수는 사리사욕이 없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 개인과 몇몇 특정집단 지지자들의 실리를 챙기는 것보다 공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군수는 죽지 않은 권력의 자리다. 공적인 자리를 위해 입후보하고 당선이 됐으면 공적인 책무를 다려도 꼭 부당한 노력해야 한다. 자신 없으면 애초부터 그런 자리를 생각지도 말라. 그런데 초심이 흔들리면서 변질되니 골짜기 열보를 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비극이니 처음부터 각별한 사명감을 소유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반문해야 한다.

의원은 지역발전형 의원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현상과 현상에서 잠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지역에 사는 사람과 통교통학하는 마음으로 활동해야 한다. 부당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써지 않는다. 그곳에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대안도 나온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지역 사람들에겐 멀어선 안된. 의원의 생애도 총리원을 기어해야 한다. 당을 떠나 할 일은 해야 한다. 군수 군 의원 전체가 민주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죽은 의원이다. 그 권과 이익은 짧은 여한가. 임기 마지막 대모암 문제가 승정을 휩쓸지 않거나.

표를 행사하는 당신은 올바른 유권자인가

무표권이 있는 유권자인 당신은 후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후보를 일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기준에 맞는 후보를 찍는가 알맞게 맞는 후보를 찍는가. 선거법을 지키며 양심적인 후보를 선택하는가. 온 불투를 건네는 사람을 찍는가. 계약제나 인감제나 없이 아파야하면 권력을 위임하면서 대통령과 도지사나 군수와 의원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선택하는가.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한다. 의원, 군수, 도지사, 대통령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으로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행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암히 없다. 후대에게도 마는 없다.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듯이 우리 유권자도 한 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대한민국이 선거가 촉매가 될 것이다.



내년 대선(大選과) 지선(地選)을 생각하며

표(票)를 찍는 당신은 올바른 유권자입니까?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해다. 대선은 3월 9일, 지선은 6월 1일 실시한다.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은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요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할까

미련 없이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성남시장 재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거쳐,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단 한 번의 국회의원 경력도 없는 원외인사가 대선후보가 된 것은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기도 했다. 총선거에서 무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는데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제 더 이상 더민주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다는 반감의 발로였다. 그래서 이재명은 당내 열세를 일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역전시켰다.

이재명은 다른 후보들과 격이 다르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대통령 후보들과 견주어봤을 때 능력 면에서 단연 최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다. 연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다.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잠깐이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의 어려운 유년시절은 생략한다. 검정고시를 거쳐 장학생으로 법대를 진학해 사법고시를 통과해 연수원 성적으로는 검판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인권변호사를 택한 것에 주목한다. 그 길을 계속 걸어왔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이 되었고, 도지사가 되었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인 이상 일신상의 명예도 없을 수 없겠지만 그의 핵심은 불공정을 바꾸어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 윤석열은 자격이 되는가. 그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님 혐의)한테 물어보면 된다. 한마디로 완전 자격미달이다. 무식한 발언만 줄줄이 쏟아내고 써준 원고나 읽는 그런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재명이 역대 최고의 후보라면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후보다. 평생 검사로 검찰총장으로 살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엄청난 특혜를 눈감아주고, 본인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봐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온당한가. 이것은 그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가장 맞지 않다. 그런데 윤석열은 적반하장으로 공정과 상식을 포장하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으니 지켜보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누가 되어야 할까

군수는 사리사욕이 없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개인과 몇몇 특정집단 지지자들의 실리를 챙기는 것보다 공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군수는 작지 않은 권력의 자리다. 공적인 자리를 위해 입후보하고 당선이 됐으면 공적인 책무를 다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자신 없으면 애초부터 그런 자리를 생각지도 말라. 그런데 초심이 흔들리면서 변질되니 같지자 행보를 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접어든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비극이니 처음부터 각별한 사명감을 소유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반문해야 한다.

의원은 지역밀착형 의원이 되어야 한다. 답은 현장과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지역에 사는 사람과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활동해야 한다. 부단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썩지 않는다. 그곳에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대안도 나온다.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지역 사람들에게 떨어진 순간, 의원의 생명도 종료됨을 기억해야 한다. 당을 떠나 할 말은 해야 한다. 군수 군 의원 전체가 민주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죽은 의원이다. 그 결과 이곳 순창은 어떤가. 임기 마지막 대모암 문제가 순창을 휩쓸지 않은가.

표를 행사하는 당신은 올바른 유권자인가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인 당신은 후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후보를 알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기준에 맞는 후보를 찍는가 입맛에 맞는 후보를 찍는가, 선거법을 지키며 양심적인 후보를 선택하는가, 돈 봉투를 건네는 사람을 찍는가, 계약서나 인감하나 없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위임하면서 대통령과 도지사 와 군수와 의원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선택하는가.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짐을 기억해야 한다.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한다. 의원, 군수, 도지사, 대통령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으로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데 하찮게 행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없다. 후대에게도 미래는 없다.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듯이 우리 유권자도 한 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대한민국의 선거가 축제가 될 것이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42 |
| 언론사 | 주식회사 뉴영남매일(뉴영남매일) |
| 심의대상 | 뉴영남매일 1월 7일자 15면 「윤석열의 줄탁동시(啐啄同時)」 제하의 칼럼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외부 필진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희망의 여동행(幸中有幸)

윤석열의 출타동시(啖啄同時)



최성덕

윤서도 중앙회 회장
공해박사

신묘한 것이 자연의 이치다. 공짜란 것이 없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목을 매달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뒤를은 어떤가. 심중팔구 폐기장산이다. 시련과 고난이 없이 얻어진 것은 가치가 없다.

"처음 윤석열로 돌아가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포효는 이제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징조의 울림 아닐까. 병아리의 알생은 참으로 재미있다. 병아리가 부화 되는 시간은 21일이 소요된다. 어미닭은 21일 간 달걀을 품는다. 처음 일주일간은 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생사를 건다. 어떠한 천적이 행방을 허더라도 꿈쩍하지 않는다.

어미닭은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에 나오려고 껍질을 깨는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린다. 먼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발바닥 힘 때 비로소 어미닭은 껍질을 깨준다. 이것을 출타동시(啖啄同時)라 한다.

어미닭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기 전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린다. 그 이유는 병아리가 스스로 나오려고 껍질을 깨는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어미가 나오게 하면 쉽게 세상을 본 병아리는 면역력이 약해 곧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닭과 병아리 새끼와의 약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구할

영웅이 태어나는데도 출타동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이란 달 같은 온 국민들이 오랜 동안이나 품어왔다. 그 동안 무수한 방해물이 나타났으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젠 때가 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윤석열 후보의 "처음 윤석열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고 어미닭에게 보내는 신호와 다름없다.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출로서기를 선언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미닭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영웅의 서막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한 소식이 들릴 때 윤 후보가 출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바로 국민과 윤석열 후보와의 출타동시이다. 이것은 윤석열을 아끼는 예국시민들의 뜻이다. 이제 국민들은 병아리 암수감별법과 유무정란 감별법만 터득하면 된다. 일반 사람들은 유정란과 무정란의 식별을 잘하지 못한다. 알을 깨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배아가 크고 흐릿한 것은 유정란이고 배아가 아주 작고 흰색이 진한 경우가 무정란이다. 그리고 알을 알일이 깨어놔야 안 다면 어느 천 년에 병아리 한 마리라도 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달걀이 외형적으로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껍질 색이 흐리고 크기가 작다. 알을 낳지 못하는 무정란은 용도파가다. 현재 유력 대권후보 중 누가 유정란이고 무정란에 해당하는지 금방 식별 할 방법이 있다. 인격, 품격, 살아온 역경, 비전, 무게감, 역사의식, 인생철학, 약속이행, 말 뒤집기, 거짓말 능력 등으로 비교해 보면 금방 식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향후 100년의 국운을 결정할 선택의 순간이 다가

오고 있다.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제 2 김대업을 수없이 앞세워 윤 후보의 배우자 신상 털기에 여념이 없지만 인과응보가 닥쳐 줄 것이라 믿는다. 생사할 점으면 천벌을 받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대통령은 하늘의 짐지기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지존의 자리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3일 모 신문사에 칼럼을 통해 예언(?) 한 바 있다.

자난태 경찰과 시민들이 오리를 호위(?)한 기사가 시중의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어미오리와 새끼오리 12마리가 차도를 건너 냇가로 가는 광경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천적을 피해 아파트 베란다에 알을 낳고 부화한 오리새끼들이 어사할 날이 다가오자 어미오리는 절대로 거들어 주지 않고 그 높은 곳에 있는 새끼들이 뛰어내려 따라 올 것을 강권(?)했다.

죽음의 공포와 떨기 날 정도의 높은 곳에 있는 새끼들은 선뜻 용기를 내어 뛰어내리기를 망설이지 어미새의 호통소리에 놀란 새끼들은 우왕좌왕 했다. 그런데 그 중 용기있는 새끼 한 마리가 사육생(死再生)의 마음으로 뛰어내려자 나머지 새끼들도 낙하해서 어미의 품으로 돌아와 품중결음으로 차도를 건너는 광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도 남을 일이다.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어미오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는데서도 한 번 더 뛰어내려라고 하는 백학간 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용기를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 길을 결정했다. 이것은 국민의 품으로 오라는 국민의 함성에 답을 한 것이다. 정말 잘했다고 박수 치고 싶다. 초심을 잃은 감지사 행보에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열성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이다. 필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일명 대구 팔공산 지킴이라고 부르는 채 모 회장이 있는데 이 분은 99세의 정모늬를 모시고 있다. 지난해 5월 초순에 자신의 정모늬에서 98세인 채 모가 다 녹아 병원에서 머슴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집에서 간호한다고 했다. 이승과 저승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부 정모늬의 소원은 "윤 총장에게 투표를 하라고 들어주시겠다. 꼭 윤 총장이 대통령 되는 것을 보고 죽는 것 뿐이다. 그 전에는 영라대왕의 호종이 있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죽은 듯이 계시다라도 TV에 윤 총장 말이 나오면 눈을 떠서 쳐다보고 미음을 자시지 않으면 윤 총장 이야기를 하면 조급이라도 드신다고 하였다. 얼마 전 참모들이 들어갔는지를 물어오니까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말에 저승사자의 호종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윤 후보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확신을 더 들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할머니까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데 윤 후보에게 두리뭉실 무었이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지구를 떠나겠다. 5% 정도 예언 할 만나니 같은 정권교체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준석은 국민의 배신자로 대역적이라 단언한다. 미꾸라지 한 두 마리가 온 나라를 흠뻑물로 만들고 있는데 미꾸라지의 목숨약은 메기다.

온 국민이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하자. 모두가 윤핵관이 되면 정와공정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리라 확신한다. 우리 모두 윤석열의 출타동시(啖啄同時)에 동참하면 어떨까.

G24-0-24-0cm



윤석열의 줄탁동시(啐啄同時)

신묘한 것이 자연의 이치다. 공짜란 것이 없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목을 매달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뒤끝은 어떤가. 심중팔구 패가망신이다. 시련과 고난이 없이 얻어진 것은 가치가 없다.

“처음 윤석열로 돌아가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포효는 이제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징조의 울림 아닐까. 병아리의 일생은 참으로 재미있다. 병아리가 부화 되는 시간은 21일이 소요된다. 어미닭은 21일 간 달걀을 품는다. 처음 일주일간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생사를 건다. 어떠한 천적이 훼방을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는다.

어미닭은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려고 껍질을 깨는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린다. 먼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어미닭은 껍질을 깨준다. 이것을 줄탁동시(啐啄同時)라 한다.

어미닭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기 전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린다. 그 이유는 병아리가 스스로 나오려고 껍질을 깨는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어미가 나오게 하면 쉽게 세상을 본 병아리는 면역력이 약해 곧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닭과 병아리 새끼와의 약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구할 영웅이 태어나는 데도 줄탁동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이란 달걀은 온 국민들이 2년 동안이나 품어왔다. 그 동안 무수한 방해물이 나타났으나 이 모

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 때가 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윤석열 후보의 “처음 윤석열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고 어미닭에게 보내는 신호와 다름없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홀로서기를 선언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미닭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영웅의 서막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한 소식이 들릴 때 윤 후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바로 국민과 윤석열 후보와의 줄탁동시다. 이것은 윤석열을 아끼는 애국시민들의 몫이다. 이제 국민들은 병아리 암수감별법과 유·무정란 감별법만 터득하면 된다. 일반 사람들은 유정란과 무정란의 식별을 잘하지 못한다. 알을 깨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배아가 크고 흐릿한 것은 유정란이고 배아가 아주 작고 흰색이 진한 경우가 무정란이다. 그리고 알을 일일이 깨어봐야 안다면 어느 천 년에 병아리 한 마리라도 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달걀이 외형적으로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껍질 색이 흐리고 크기가 작다. 알을 낳지 못하는 무정란은 용도폐기다. 현재 유력 대권후보 중 누가 유정란이고 무정란에 해당하는지 금방 식별할 방법이 있다. 인격, 품격, 살아온 역정, 비전, 무게감, 역사의식, 인생철학, 약속이행, 말 뒤집기, 거짓말 능력 등으로 비교해 보면 금방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향후 100년의 국운을 결정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제2 김대업을 수없이 앞세워 윤 후보의 배우

자 신상 털기에 여념이 없지만 인과응보가 답해 줄 것이라 믿는다. 생사람 잡으면 천벌을 받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대통령은 하늘의 짐지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지존의 자리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3일 모 신문사에 칼럼을 통해 예언(?) 한 바 있다.

지난해 경찰과 시민들이 오리를 호위(?)한 기사가 시중의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어미오리와 새끼오리 12마리가 차도를 건너 냇가로 가는 광경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천적을 피해 아파트 베란다에 알을 낳고 부화한 오리새끼들이 이사할 날이 다가오자 어미오리는 절대로 거들어주지 않고 그 높은 곳에 있는 새끼들이 뛰어내려 따라 올 것을 강권(?) 했다.

죽음의 공포와 멀미가 날 정도의 높은 곳에 있는 새끼들은 선뜻 용기를 내어 뛰어내리기를 망설이자 어미새의 호통소리에 놀란 새끼들은 우왕좌왕 했다. 그런데 그 중 용기있는 새끼 한 마리가 사즉생(死即生)의 마음으로 뛰어내리자 나머지 새끼들도 낙하해서 어미의 품으로 돌아와 쫑쫑걸음으로 차도를 건너는 광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도 남을 일이다.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어미오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는데서도 한 번 더 뛰어내리라고 하는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용기를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 길을 결정했다. 이것은 국민의 품으로 오라는 국민의 함성에 답을 한 것이다. 정말 잘했다고 박수 치고 싶다. 초심을 잃은 갈지자 행보에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일성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필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일명 대구 팔공산 지킴이라고 부르는 채 모 회장이 있는데 이 분은 99세의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 지난해 5월 초순에 자신의 장모님이 98세인데 폐가 다 녹아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집에서 간호한다고 했다. 이승과 저승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시한부 장모님의 소원은 “윤 총장에게 투표를 하고 돌아가시겠다. 꼭 윤 총장이 대통령 되는 것을 보고 죽는 것 뿐이다. 그 전에는 염라대왕의 호출이 있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죽은 듯이 계시다가도 TV에 윤 총장 말이나 오면 눈을 떠서 쳐다보고 미음을 자시지 않으면 윤 총장 이야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드신다고 하였다. 얼마 전 장모님이 돌아가셨는지를 물으니까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말씀에 저승사자의 호출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윤 후보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확신이 더 들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할머니까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데 윤 후보에게 두려움이 무엇이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지구를 떠나겠다. 5% 진다고 예언한 망나니 같은 정권교체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준석은 국민의 배신자요 대역적이라 단언한다. 미꾸라지 한 두 마리가 온 나라를 흙탕물로 만 들고 있는데 미꾸라지의 특효약은 메기다.

온 국민이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하자. 모두가 윤핵관이 되면 정의·공정·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리라 확신한다. 우리 모두 윤석열의 줄탁동시(擘啄同時)에 동참하면 어떨까.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44

언론사

주식회사 국제신문(국제신문)

심의대상

국제신문 1월 7일자 18면 「윤석열 후보 승리의 마지막 선택은?」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제신문

한글음파이름학



윤석열 후보 승리의 마지막 선택은?

단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통해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길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글음파이름학

한글음파이름학에서 개명할 사람들

프로야구선수 개명할 최 NC 야구선수 아섭

Table with 2 columns: Name and Nickname. Includes names like 강로한, 나규안, 한우성, 오태근, 이도겸, 박태준, 김정은, 김재현.

요즘 많이 힛드서지요 = 무엇이는 불어보세요

상담예약: 웹강조서목박사 010-2941-6766

YouTube 한영 한효성 TV로 더 볼 수 있습니다. 한영 한효성 TV는 유일한 내용으로 보실수있습니다. 부산 한영 한효성 유튜브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강력한 선거캠프로 구성하여 그만의 강력한 참모습과 지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내의 이정무로 낙선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마...

합을 발휘해야 한다. 때로는 정치권력의 조만간 흔들리고 있고 당력을 고사하는 오모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윤석열 후보의 승리의 마지막 선택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경쟁과 상대 당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음해와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있다. 정책이 실종되고 포퓰리즘(populism)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승리에 대한 선거 방향을 오랜 경험과 한글음과 이름학으로 분석하여 한효섭칼럼으로 설명한 바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전략은 필자가 한글음과 이름학으로 분석한 결과대로 실천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제1야당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전략의 대응단이 없는 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공약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공약과 실천에 더 현혹되기 쉽다. 유권자의 선택은 미래보다 현재, 국가보다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투표하고 그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와 자칭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경쟁하는 후보나 국민의힘 당직자나 관계자 혹은 지지자들이 행하는 언어와 행동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엔 충분하다. 윤석열 후보의 지도력과 능

력도 평가절하되고 있기에 국민의힘보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마저도 등을 돌리거나 망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는 꿈마저 상실할 수 있다. 즉,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후보를 포기하든지 타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야권 후보의 득표 분산으로 결선 투표가 없는 민주주의 맹점에 따라 또다시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나라의 대표성이 없는 대통령은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편 가르기와 집단 이기주의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되고 국민은 갈기갈기 찢겨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기득권과 정치꾼의 욕심으로 결선 투표를 없애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망국과 패망과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강력한 선거캠프로 구성하여 그만의 강직한 참모습과 지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내의 이전 투구로 낙선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방법을 말한다면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열광하고 지지했던 강점을 되살리는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에 있다.

사람은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으면 절

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총괄위원장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하다면 윤석열 후보는 과감하게 선대위를 해체하고 상임선대위 위원장직을 사퇴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당 대표 경선에 차선으로 낙선한 나경원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중심으로 또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원희룡 지사와 장기표 후보 등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구성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편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으로 재편하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강력한 선거캠프로 구성하여 힘을 발휘해야 한다. 때 묻은 정치권의 조언에 흔들리지 말고 당락을 고사하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위했던 강직한 윤석열 후보의 참모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진정한 지도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난번 국제신문 한효섭칼럼(2021.

12.30.)에서 조언한 바 있지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님의 문제는 여사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사님이 남편을 사랑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대결단을 내린다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고 확실하다. 그다음의 문제는 대통령 선거 후에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먼 곳에서 사심 없이 보면 그 길이 보이는데 쉽고도 어려운 평범한 선거전략이 윤석열 후보 측근과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애국시민을 위하여 필자의 생각을 조언해 본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85%에 달하는 한글음파이름학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85%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태어나면서 뻗속 깊이 조국과 민족만을 외치며 80을 바라보는 필자로서 여야 후보들이 비난과 비방없이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54 |
| 언론사 | 주식회사 새만금일보(새만금일보) |
| 심의대상 | 새만금일보 1월 10일자 11면 「마스크에 감춘 이재명의 실체를 벗기다」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특정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도서를 소개하면서, 별도의 근거 제시나 설명 없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출판서 서평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 **심간/안내**

마스크에 감춘 이재명의 실체를 벗기다

지우출판 <굿바이, 이재명>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책

사람이 갖는 집착은 참 무섭다. 누군가를 향해 일단 의심을 품게 되면 처음에는 '절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럴 리가 없지'로 살짝 마음을 쓴다.

그러다가 '혹시 그럴 수도'하는 셋길로 빠지는가 싶다 하면 어느새 '아니, 분명히 그래, 분명히 그럴 걸!'로 확신 쪽에 무게를 둔다. 아니, 아예 그쪽으로 돌아붙어 버린다.

대선 후보 이재명의 형 이재선 회계사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 속엔 이런 그림자가 있다.

"세상 모든 존경보다 값진 것은 아들·딸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했던 소박한 꿈을 가졌던 가장들 향해 권력자 이재명의 지속적인 '거짓말'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사람들을 집착하게 했다.

주문을 걸 듯 '아니지, 그럴리가, 혹시? 아니 분명히!'라고 하며 어느 순간 스스로를 집착에 사로잡히게 했을 터였다.

그렇게 권력이 휘두른 거듭된 거짓말은 단순치가 않았다.

거짓말에 의한 한 사람의 억울함은 그 개인의 삶만 왜곡하고 매장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함께하는 또 다른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도 왜곡되고 매장당한 일이 다반사였다.

권력이 휘두른 한 개인에 대한 삶의 왜곡과 매장시킴은 실로 참혹하고 끔찍했다.

조리돌림과 명석말이에서 끝나지 않았다.

권력 앞에 줄을 선 군중들의 집착 심리를 이용해 타겟이 된 개인을 극한의 코너로 몰아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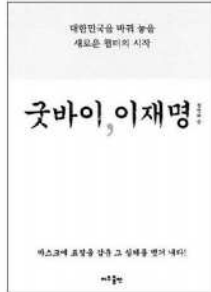
그리고 끝내 한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왔다.

권력자와 그 앞에 줄을 선 이들은 그렇게 공범자가 됐다.

겨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라, 그것이 진실이다!

사건의 시작은 회계사였던 이재선이 성남시에 민원 글을 올리면서부터였다. 온갖 협박을 받았다. 협박에서 그친 것이 아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됐다.

패륜자로 몰렸고 정신병자로 몰렸다.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



리로 진행됐다.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처럼.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실을 알리는 일뿐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쫓긴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권력자의 욕망은 더더욱 거셌다.

이재선이 사실을 알리면 알릴 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휘돌았다.

급기야 40여일간 정신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 지난한 싸움은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거짓으로 잠멸된다.

그리고 그 거짓의 중심에 여권 대선 후보 그가 서 있다.

이 책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 복잡하게 배배 꼬아 놓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 진실을 찾아서 그 위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록이다.

다만 한사람의 억울함과 그 개인의 삶이 왜곡되고 매장된 이야기들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삶이 결코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으로 사회가 어떻게 뒤엉켰는지를 알려 주며 뒤엉킨 것을 풀어내고자 했다.

그러한 의미로 배우 김부선의 변호사로 유명한 판사 출신의 장영하 변호사는 이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쓰기 시작했다.

단테의 신곡처럼 화려한 꽃밭 어느 틈새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현실을 가장 리얼하게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이민행 기자

(11.8×30.5cm)



마스크에 감춘 이재명의 실체를 벗기다

지우출판 <굿바이, 이재명>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책

사람이 갖는 집착은 참 무섭다. 누군가를 향해 일단 의심을 품게 되면 처음에는 ‘절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럴 리가 없지로 살짝 마음은 튜다.

그러다가 ‘혹시 그럴 수도……’하는 셋길로 빠지는가 싶다 하면 어느 새 ‘아니, 분명히 그래. 분명히 그럴 걸!’로 확신 쪽에 무게를 둔다. 아니, 아예 그쪽으로 몰아붙여 버린다.

대선 후보 이재명의 형 이재선 회계사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 쏠림이 그러했다.

“세상 모든 존경보다 값진 것은 아들·딸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했던 소박한 꿈을 가졌던 가장을 향해 권력자 이재명의 지속적인 ‘거짓말’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사람들을 집착하게 했다.

주문을 걸 듯 ‘아니지, 그럴 리가, 혹시? 아니 분명히!’라고 하며 어느 순간 스스로를 집착에 사로잡히게 했을 터였다.

그렇게 권력이 휘두른 거듭된 거짓말은 단 순치가 않았다.

거짓말에 의한 한 사람의 억울함은 그 개인의 삶만 왜곡하고 매장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함께하는 또 다른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도 왜곡되고 매장당한 일이 다반사였다.

권력이 휘두른 한 개인에 대한 삶의 왜곡과 매장시킴은 실로 참혹하고 끔찍했다.

조리돌림과 멍석말이에서 끝나지 않았다. 권력 앞에 줄을 선 군중들의 집착 심리를 이용해 타겟이 된 개인을 극한의 코너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끝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왔다.

권력자와 그 앞에 줄을 선 이들은 그렇게 공범자가 되었다.

겨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라, 그것이 진실이다!

사건의 시작은 회계사였던 이재선이 성남시에 민원 글을 올리면서부터였다. 온갖 헐박을 받았다. 헐박에서 그친 것이 아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었다.

패륜아로 몰렸고 정신병자로 몰렸다.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처럼.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실을 알리는 일뿐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꽃힌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권력자의 옥죄음은 더더욱 거셌다.

이재선이 사실을 알리면 알릴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휘둘렸다.

급기야 40여 일간 정신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 지난한 싸움은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거짓으로 점철된다.

그리고 그 거짓의 중심에 여권 대선 후보 그 가 서 있다.

이 책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

말을 보태 복잡하게 배배 꼬아 놓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 진실을 찾아서 그 위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록이다.

다만 한 사람의 억울함과 그 개인의 삶이 왜곡되고 매장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삶이 결코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으로 사회가 어떻게 뒤엉켰는지를 알려 주며, 뒤엉킨 것

을 풀어내고자 했다.

그러한 의미로 배우 김부선의 변호사로 유명한 판사 출신의 장영하 변호사는 이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쓰기 시작했다. 단테의 신곡처럼 화려한 꽃밭 어느 틈새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현실을 가장 리얼하게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진영 대선후보단일화를 촉구한다”

1. 문재인정권의 실정들

지난 4년 8개월 동안의 문재인정권의 실정은 너무나도 많아 그 모든 것을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정권은 사회주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정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온갖 분야에서 정부개입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들을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둘째, 세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지원과 실질적인 생산성향상과는 무관한 공공일자리의 증가. 셋째, 시장의 수요와 반대되는 부동산정책, 넷째, 코로나19에 대한 정치방역, 다섯째, 가장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의 폐쇄. 여섯째, 북한핵에 대한 무방비. 일곱째,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북한에 매달리는 외교노선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수많은 실정들이 있으나 이 점만 하더라도 이 정권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정권인 것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2. 이재명정권이 등장한다면?

지난 4년 8개월 동안의 실정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망가졌는데 또다시 그들이 집권한다면 -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해 버릴

것입니다. 몇 가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진자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을 1대 9로 나누어 1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부자에게 무자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을 강탈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눈치 빠른 가진자는 재산을 정리하여 외국으로 도피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폭망해 버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이 사실상 국유화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국선이사를 파견하고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어 세계 시장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대기업은 노조천국이 되어 차츰 소멸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더욱 매달릴 것입니다. 가진자가 해외로 빠져 나가고 대기업이 노조천국이 되면서 정부가 거두어 들인 세금을 누가 먼저 배분받을 것인지가 생존의 제1조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부의 권한이 더욱 커지면서 배급권력을 거머쥔 완장찬이들이 설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대리인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북한은 핵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정권의 핵심부로 등장한 주사파는 북한에 더욱 굴종적 자세를 보이면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와 외교 분야를 북한의 뜻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만 이 외에도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몇몇 인사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나 북한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는 자유진영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진영내에서도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힘모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작은 차이와 흠결에 집착하여 내부에서 총질을 해대는 일부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사들로는 이준석, 홍준표, 정규재, 조원진, 김경재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는 20,30의 젊은이들을 대변하면서 정권교체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어느 정도 기대하였는데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정권교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윤석열후보와 접전을 이루면서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그 이후 경선불복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면서 정권교체를 위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재는 자유진영내에서 역사와 이념에 대한 학습의 수준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공로는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정된 후보를 교체하라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선거보이코트를 하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원진은 박근혜대통령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정권과 치열하게 투쟁한 점은 높이 인정되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윤석열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대선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염원에도 맞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재는 국민혁명당의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내부적인 문제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완주할 것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현재의 입장을 바꾸어 후보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의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자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저들은 뭉치고 있는데 여기 자유진영은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승리를 위한 전략적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 우리의 결의

첫째,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집단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로 변할 것임을 예측한다.

둘째,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소멸되는 낙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예측한다.

셋째,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자유진영의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다.

넷째, 자유진영에 속한 모든 이들은 현재의

작은 차이와 흠결을 문제삼기보다는 정권교체를 위한 대동단결을 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다섯째, 이준석, 홍준표, 정규재, 조원진, 김경재 등은 자유진영인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승리를 위한 전략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고 후보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고성국TV 등 정권교체를 원하는 자유진영의 유튜브방송들은 개별 활동에만 그치

지 말고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동회견 및 오프라인 조직구축 등 자유진영의 승리를 위한 연대활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윤석열후보와 안철수후보를 비롯한 자유진영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지 말고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8일

자유시민부산연합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61 |
| 언론사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동아일보) |
| 심의대상 | 동아일보 1월 26일자 27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하의 광고 |
| 주문 |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자질과 주요 공약 등을 비교·평가하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심의대상광고가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했거나 직접적인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관련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심의대상광고의 내용과 표현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적인 의견광고의 수준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타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고 있는 바,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2022년 1월 2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 | |
|---|--|
| <p>정권교체 자유시장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의 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과의 불협화 반인, 위선과 부능에 맞서 싸운 대통령이 범죄와 공갈, 자유와 인권, 전권과 국정운영으로 자유와 장치를 활짝 꽃 피우는 나라, 굳건한 한미동맹과 동지 위한 대북 평화 ○ 시장을 존중한 규제 200만호 공급정책, 민간 영변과 재민수·재정비를 통한 달성, 1주해리에 대한 일도세·재신세 완화 총합부담선내 전환 제임드 등 부유층에게 형평성, 부유층 거제도 시장 자유 ○ 탈원전 부담을 국민에 떠넘긴 정기로 인상 백지화, 현금 뿌리기 아닌 어려운 재출 우선 지원, 도매랜드 확대도 철근과 여성 잘살자 지원, 추후권 최철한 연구개발 장담단기, 약속지 실천, 따뜻한 복지 ○ 행정 사안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교관계를 상대로 공평과 정의를 관철시킨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 부인세 대한 여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2030여성의 직자가 으뜸은 후보가 대통령인 나라. ○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불로로 정치하는 사익집단의 수단, 남성을 강제적 일파자로 취급하는 후보 시절에 양성평등 정책 지향하고 속여유지 확대. ○ 소와 대를 공중을 위한 정책과 아니라 강력한 일파에 정책, 북한과 핵 미사일을 한 번에 국민 수백만명이 희생되는 것을 친제적으로 막기 위해 ‘길’ 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제 구축, 당당할 외교의 근본한 안보의 한미동맹을 재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대화의 실현 가능. | <p>정권유지 국민을 갈라치고 쪼리쪼리 이권 나눠먹는 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보유세, 송지침 허가제 등으로 국민 생활과 사민주의를 통해 국민, 가족과 이웃에 대한 배려적 역할과 상습적인 거짓말 횡행, 국가 권력 남용 일삼고, 불치난 이념에 의한 커리커리 이권 사리 ○ 부동산 규제 남발로 가버린 폭동사건 국민들의 재산소득 폭락에 국민,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보상에 도입, 공시지가 폭등 등의 세금폭탄으로 일파에 활용 기업은 폐사, 국민은 갈라지기. ○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50조원이나 되는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민수세 등 부가, 스위스에서는 국민이 거부한 단선 과부기 정책 시행, 국/시가 일일이 재검토는 전횡주의적 경제정책 ○ 전과 4범(무고 및 공무불 사정, 도로교통법위반 승주유전, 특수공공감행방에 공출된 손상, 선거법 위반)에다 가족에 대해 배려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 ○ 여성가족부 정책가공부 등으로 각종 공약했으나 여론 비판이 제지 전성(1,30~11리얼미터),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공약했으나 2030세대 60%가 반대(1,19~19유리미터) ○ 극조속속 미사일 시험 등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과 원인이 되어 강한 안보문제를 전횡할아니 하는 나라, 우리민 당정에서한 ‘한민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윤원선선으로 비교불수를 실행, 대외 대응 불공평으로 계속. |
|---|--|

『동아일보』 2022년 1월 26일 27면
 010-3620-5142(기자)

자유민주당 대표 : 고경두 변호사

이 글은 『대한민국』 2022년 1월 26일호에 실린 글입니다.
 발행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운동본부
 후원처: 『대한민국』 100-024-68000 자유민주주의 운동본부

133-13-001

〈동아일보 2022년 1월 26일자 27면〉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62

언론사 주식회사 문화일보(문화일보)

심의대상 문화일보 1월 26일자 31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자질과 주요 공약 등을 비교·평가하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심의대상광고가 특정 정당·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했거나 직접적인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하더라도,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관련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심의대상광고의 내용과 표현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적인 의견광고의 수준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타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고 있는 바,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화일보 2022년 1월 26일자 31면〉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69 |
| 언론사 | 경북도민일보 주식회사(경북도민일보) |
| 심의대상 | 경북도민일보 2월 8일자 15면 「말(言)의 오염」 제하의 칼럼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대를 유도하는 취지의 외부 필진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북도민일보

2022년 02월 08일
15면 (호파니판)

말(言)의 오염

2022년 02월 08일
15면 (호파니판)

寄稿

김종호
호서대 교수
법학박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우리말과 글이 오염처럼 오염된 적이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들이 너무 거칠어졌다. 거센 소리, 뾰 소리 등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극적으로 알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 스마트폰 영향으로 표기법 또한 과장하며 외국이나 우리말 할 것 없이 축약이 되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대별로 즐겨 쓰는 단어들은 세대 간의 소통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말과 표기법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대선 정국에 여당 후보의 형수욕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사실 욕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 그런 생각을 하면

으로 내뱉는 후보의 친박한 인성도 문제다. 물론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분석해 보면 분노와 증오와 공포의 표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후보의 형수욕실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정점을 담고 있다.

첫째,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가족 그것도 자신보다 뒷사람인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증오 섞인 욕설을 내뱉었다는 점. 그러한 인사의 반복성, 또 상대방에 사용한 단어가 갖는 증오와 인격관상의 함의, 여성에 대한 비하의 정도가 정신적 살인에 해당되는 발언이다.

둘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법률가라는 점이다. 아주 실성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극한의 욕설을 할 지게 할 수 있는지 알이 될런다. 애당초 범조인의 윤리를 강 그리 무시한 발언이다. 하기사 그의 저주 섞인 폭언은 호모 포비아(homophobic)들이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언사이다.

셋째, 이런 수준의 욕설은 폭력적인 표현으로서 분노, 공포, 미움을 퍼붓는 싸움할 때나 쓰는 이른바 파이팅 워드(fighting words)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이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이런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한 마디로 인격파탄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성이 형성되기까지의 유아기와 청소년기 때 그가 받은 가정교육이 어떠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선악의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괴박한 인성의 소유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됐을 때 정적이나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발원 증오의 배설은 상상하기도 싫다.

현대 문명국가의 법은 공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행한 언설 등 다양한 언어 표현이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서 그 출신이나 민족, 국민, 인종, 성별 또는 특정 종교의 소속 유무를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로 명예를 손상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후보의 욕설은 상대방을 공격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그 증상이 혐오스러우며 강렬하고 분명하게 적의가 결합된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한 욕설을 직접 들은 형수의 입장에서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보는 자신의 욕설을 단순히 경솔한 발언이나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 욕설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인본과 인간의 존엄성을 공개 버린 그의 욕설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면책될 수 없다.

기본권을 침해했고 선명한 풍속과 공공 도덕의 한계를 벗어난 그의 욕설은 오히려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그의 욕설은 허탈한 단순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으나 그것 자체가 언어폭력인 동시에 물리적 폭력을 증폭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은 위험성을 가진 행위이다. 폭력의 일부로서 설명되어야 마땅하다. 형수의 대응에서도 나왔지만 그의 발언은 타인의 심신에 위해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이미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 형수는 공포감에서 비롯된 투근거림, 호흡곤란, 야망, PTSD, 과도한 정신적 긴장, 정신이상에 이르기까지 생리적 증상과 감정적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여성 혐오와 증오에 가득 찬 그의 욕설이 유권자들의 엄청난 반발과 개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선거에서 이후보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도덕적 책무에 해당된다. 이런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모두가 공범자일 뿐이다.

(24.2×18.5cm)



말(言)의 오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우리말과 글이 요즘처럼 오염된 적이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들이 너무 거칠어졌다. 거센 소리, 된 소리 등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국적도 알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 스마트폰 영향으로 표기법 또한 괴상하며 외국어나 우리말 할 것 없이 축약이 되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대별로 즐겨 쓰는 단어들은 세대 간의 소통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말과 표기법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대선 정국에 여당 후보의 형수욕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사실 욕설이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정작 그런 생각을 밖으로 내뱉는 후보의 천박한 인성도 문제다. 물론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분석해 보면 분노와 증오와 공포의 표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후보의 형수욕설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쟁점을 담고 있다.

첫째,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가족 그것도 자신보다 윗사람인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증오 섞인 욕설을 내뱉었다는 점, 그러한 언사의 반복성, 또 상대한테 사용한 단어가 갖는 증오와 인격말살의 함의, 여성에 대한 비하의 정도가 정신적 살인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둘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법률가라는 점이다. 아주 실성한 사

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극혐의 욕설을 차게 할 수 있는지 살이 떨린다. 애당초 범조인의 윤리를 깡그리 무시한 발언이다. 하기사 그의 저주 섞인 폭언은 호모 포비아(homophobic)들이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언사이다.

셋째, 이런 수준의 욕설은 폭력적인 표현으로서 분노, 공포, 미움을 퍼붓는 싸움할 때나 쓰는 이른바 파이팅 워드(fighting words)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이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이런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한마디로 인격파탄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성이 형성되기까지의 유아기와 청소년기 때 그가 받은 가정교육이 어떠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선악의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괴악한 인성의 소유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됐을 때 정적이나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벌일 증오의 배설은 상상하기도 싫다.

현대 문명국가의 법은 공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행한 연설 등 다양한 언어표현이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서 그 출신이나 민족, 국민, 인종, 성별 또는 특정 종교의 소속 유무를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로 명예를 손상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후보의 욕설은 상대방을 공격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그 증상이 혐오스러우며 강렬하고 분명하게 적의가 결합된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한 욕설을 직접 들은 형수의 입장에서는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보는 자신의 욕설을 단순히 경솔한 발언이니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

하는 모양이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 욕설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인륜과 인간의 존엄성을 뒤흔개 버린 그의 욕설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면책될 수 없다.

기본권을 침해했고 선량한 풍속과 공공 도덕의 한계를 벗어난 그의 욕설은 오히려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그의 욕설은 하찮은 단순한 메시지 일 수 있겠으나 그것 자체가 언어폭력인 동시에 물리적 폭력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은 위험성을 가진 행위이다. 폭력의 일부로서 설명되어야 마땅하

다. 형수의 대응에서도 나왔지만 그의 발언은 타인의 심신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이미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 형수는 공포감에서 비롯된 두근거림, 호흡곤란, 악몽, PTSD, 과도한 정신적 긴장, 정신이상에 이르기까지 생리적 증상과 감정적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여성 혐오와 증오에 가득 찬 그의 욕설이 유권자들의 엄청난 반발과 개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선거에서 이후보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도덕적 책무에 해당된다. 이런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모두가 공범자일 뿐이다.

3. 주의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3 |
|------|---|
| 언론사 | 종합일보 주식회사(경인종합일보) |
| 심의대상 | 경인종합일보 7월 21일자 1면 「이재명 “정치가 천직이라 느낀다”」, 7월 21일자 1면 「이재명 “통통 불은 간호 공무원 손, 잊지 않겠다”」, 7월 23일자 1면 「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7월 23일자 1면 「이재명 “윤석열, 구태 정치인의 전형...안타깝다”」, 7월 26일자 1면 「이재명 “사학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할 적폐”」, 7월 27일자 1면 「이재명 “법사위 포기할 이유 없다”」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예정인 현직 지자체장의 주요 공약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만을 1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이재명 “정치가 천직이라 느낀다”

20일 후원금 22억원 돌파... 소액 기부자가 95.7%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원금이 22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 지사는 “보내 주신 소망에 최선을 다해 부응하는 것이 제가 반드시 다해야 할 소임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제가 지구를 구할 영웅은 못되지만 주어진 힘을 방기하거나 남용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시국에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다. 그만큼 절박하니 잘하라는 무거운 뜻으로 듣고 있다”며 “사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권력을 누리 고자 하면 한없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으면 꽤 고달픈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같이 후광도 계 파도 없는 정치인이면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이라며 “좋은 삶든 변화를 만들려는 정치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치가 제 천직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바로 같은 길을 걷는 동지를 발견할 때”라며 “컴컴한 어둠에서 빛을 만난 듯 가슴이 뛰고 힘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택시기사님의 10만원, 건설 노동자의 5만 원, 주부의 5만 원. 제발 좀 잘해달라고 따끔하게 호소하신 분도 많다”며 “어느 하나 허투루 들을 말씀이 없다. 22억이라는 큰 돈 안에 주권자의 간단치 않은 기대와 염원이 모두 담겨있는 셈”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왜들 그렇게 금액이 적다고는 죄송해 하시는지 이 글을 빌려 애뜻한 감사의 말씀을 거듭 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기자 / jonghapnews.com

(11.3*12.4)cm



이재명 “정치가 천직이라 느낀다”

20일 후원금 22억 원 돌파…
소액 기부자가 95.7%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원금이 22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 지사는 “보내주신 소망에 최선을 다해 부응하는 것이 제가 반드시 다해야 할 소임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제가 지구를 구할 영웅은 못되지만 주어진 힘을 방기하거나 남용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시국에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다. 그만큼 절박하니 잘하라는 무거운 뜻으로 듣고 있다”며 “사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권력을 누

리고자 하면 한없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으면 꽤 고달픈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같이 후광도 계파도 없는 정치인이라면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이라며 “좋은 삶은 변화를 만들려는 정치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치가 제 천직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바로 같은 길을 걷는 동지를 발견할 때”라며 “검검한 어둠에서 빛을 만난 듯 가슴이 뛰고 힘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택시기사님의 10만원, 건설 노동자의 5만 원, 주부의 5만 원. 제발 좀 잘해달라고 따끔하게 호소하신 분도 많다”며 “어느 하나 허투루 들을 말씀이 없다. 22억이라는 큰돈 안에 주권자의 간단치 않은 기대와 염원이 모두 담겨있는 셈”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왜들 그렇게 금액이 적다고는 죄송해 하시는지, 이 글을 빌려 애뜻한 감사의 말씀을 거듭 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통통 붙은 간호 공무원 손, 잊지 않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SNS에 통통 붙은 간호직 공무원의 손 사진을 첨부해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폭염에 땀으로 흥건히 젖은 방역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고생하고 있을 의료진과 공무원들 생각에 마음이 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임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이 자랑스럽고 그 무거운 임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안할 따름”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 6개월째다. 유례없는 위기가 닥치고, 그동안 술한 고비가 있었지만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잘 헤쳐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의 불편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국민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해온 일선의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성과는 그 모든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총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들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긴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 모든 이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겠다 다시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통 붙은 손가락에 담긴 그 마음 잊지 않겠다”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충분한 보답이 이뤄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기자 / jonghapnews.com

(11.3*11.9)cm



이재명 “통통 불은 간호 공무원 손, 잊지 않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SNS에 통통 불은 간호직 공무원의 손 사진을 첨부해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폭염에 땀으로 흥건히 젖은 방역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고생하고 있을 의료진과 공무원들 생각에 마음이 짝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임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이 자랑스럽고, 그 무거운 임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안할 따름”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 6개월째다. 유례없는 위기가 닥치고, 그동안 술한 고

비가 있었지만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잘 헤쳐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의 불편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국민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해온 일선의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성과는 그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총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들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긴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 모든 이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겠다 다시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통 불은 손가락에 담긴 그 마음 잊지 않겠다”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충분한 보답이 이뤄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로 재원 확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중세 동반’은 국민 동의 후 가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권역별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일부 계층이 지원받

을 받지 못하는 25인 이하 세대부터 1호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해진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임수세 판매로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나는 세금보다 받은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

에 따라 동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조 원”이라며 “이 개념 중 일부는 산업발전 차이에 사용하고 일부는 불가항력에 의한 국민들이 균등 지급하면 복할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용이 증대될 국민적 합의와 정부가 만들어낸 자치가 정부에서는 일관적인 기본소득 목적에 도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태양광 및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정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0여년 전 박정호 장관에서 불관심하게 만들어낸 필요함만 지급은 최고의 부패해결로 발전했듯이 각종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인종합일보 2021년 7월 23일자 1면>

보도내용

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로 재원 확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중세 동반’은 국민 동의 후 가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

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

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제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윤석열, 구태 정치인의 전형... 안타깝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최근 윤석열 후보의 발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본인 말씀대로 ‘정치 경험’이 없고, 공부를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의혹과 발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공직윤리의식의 실종을 봅니다. 삼부토건 접대의혹, 유우진 전 서장 중언 등은 전형적인 유착관계를 보여줍니다. 조남욱 전 회장과 식사, 골프, 명절선물 등이 통상적이었던 해명은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윤 후보가 강조해온 청렴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는지요, 26년간 이런 공직윤리를 가지고 검사 생활을 해온 것 인지요.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의 실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주의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은 구태 정치인의 전형”이라며 “정치인이라면 대통령 후보라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한준 기자/janghapnews.com
04-11051531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야권 대선 주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최근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정치를 하시겠다는니, 대통령이 되시겠다는니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정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윤석열 후보의 발언 내용이 충격적이다. 본인 말씀대로 ‘정치 경험’이 없고, 공부를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제기된 의혹과 발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부토건 접대 의혹, 유우진 전 서장 중언 등은 전형적인 유착관계를 보여준다. 조남욱 전 회장과 식사, 골프, 명

절선물 등이 통상적이었던 해명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윤 후보가 강조해 온 청렴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는가, 26년간 이런 공직윤리를 가지고 검사 생활을 해온 것인가,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의 실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말실수로 넘기기엔 그 인식이 너무 위험하다. 국민의 대리인이 되겠다고 나섰다면서 고용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기업에 차별이 존재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구-민란” 발언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도 모자랄 판에

<경인종합일보 2021년 7월 23일자 1면>

보도내용

이재명 “윤석열, 구태 정치인의 전형... 안타깝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야권 대선 주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정치를 하시겠다는니, 대통령이 되시겠다는니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정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윤석열 후보의 발언 내용이 충격적이다. 본인 말씀대로 ‘정치 경험’이 없고, 공부를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제기된 의혹과 발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부토건 접대 의혹, 유우진 전 서장 중언 등은 전형적인 유착관계를 보여준다. 조남욱 전 회장과 식사, 골프, 명절선물 등이 통상적이었던 해명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윤 후보가 강조해 온 청렴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는가, 26년간 이런 공직윤리를 가지고 검사 생활을 해온 것인가,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의 실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말실수로 넘기기엔 그 인식이 너무 위험하다. 국민의 대리인이 되겠다고 나섰다면서 고용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기업에 차별이 존재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구-민란” 발언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역주의에 편

승해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은 구태 정치인의 전형"이라며 "정치인이라면, 대통령 후보라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그동안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분열의 정치라는 '구태정치'를 먼저 배워버린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인종합일보
2021년 7월 26일
이문 (종합)

이재명 “사학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폐”

“노무현식 사학개혁, 용기와 결단으로 끝내 해결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사학 개혁은 민주정부의 발자취가 담긴 개혁,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개혁이다'라며 "4기 민주정부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더 멀리,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공정채용' 개혁에 나섰던 것이 계기가 됐던 사건의 전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18억 원이 오갔고 미리 문체나 답을 건네받은 13명만 합격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 지사는 "이것은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아무리 '공정'을 외쳐봐야 소용없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립학교 공정채용 협약'은 채용의 전 과정, 1차 서류부터 면접, 수업 실기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이다"라며 "이제 밀실채용 하지 말고 공정하게 채용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가득권의 거센 저항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 그러나 기득권 반발로 스리슬쩍 넘어가는 문제, 용기와 결단으로 끝내 해결하는 것이 이재명식 개혁"이라고 다짐하며 글을 맺었다.

경정자기자 | jinghapnews.com

이재명
2시간 · 1천

<당신의 발자취 따라, 사학 개혁, 이재명은 합니다>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공정채용' 개혁에 나섰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의 전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8억 원이 오갔고 미리 문체나 답을 건네받은 13명만 합격했습니다.

자코지국한 사학 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폐입니다.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아무리 '공정'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사립학교 공정채용 협약'은 채용의 전 과정, 1차 서류부터, 면접, 수업 실기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밀실채용 하지 말고 공정하게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사학 개혁은 민주정부의 발자취가 담긴 개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개혁입니다. 4기 민주정부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더 멀리,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129.3x11.51cm

<경인종합일보 2021년 7월 26일자 1면>



보도내용

이재명 “사학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폐”

“노무현식 사학개혁, 용기와 결단으로 끝내 해결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사학 개혁은 민주정부의 발자취가 담긴 개혁,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개혁이다”라며 “4기 민주정부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더 멀리,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서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공정채용' 개혁에 나섰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사건의 전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18억 원이 오갔고 미리 문체나 답을 건네받은 13명만 합격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 지사는 “이것은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아무리 '공정'을 외쳐봐야 소용없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립학교 공정채용 협약'은 채용의 전 과정, 1차 서류부터 면접, 수업 실기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이다”며 “이제 밀실채용 하지 말고 공정하게 채용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 그러나 기득권 반발로 스리슬쩍 넘어가는

문제, 용기와 결단으로 끝끝내 해결하는 것이 이재명식 개혁”이라고 다짐하며 글을 맺었다.

경인종합일보

이재명 “법사위 포기할 이유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 간곡히 요청”
“전진 위한 양보 아닌 개혁 의지 후퇴”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 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에 대해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은 늘 국정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라며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들이 모르실 리 없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정도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빛을 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사회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 손 잡고 민주당에 투표했고 지

지를 호소해주시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지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경선후보님들께 법사위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한준 기자/jonghapnews.com
(24.11.10.03cm)

<경인종합일보 2021년 7월 27일자 1면>

📄 보도내용

이재명 “법사위 포기할 이유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 간곡히 요청”
“전진 위한 양보 아닌 개혁 의지 후퇴”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 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에 대해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

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은 늘 국정

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라며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들이 모르실 리 없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정도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빛을 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사회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 손 잡고 민주당에 투표했고 지지를 호소해주신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경선후보님들께 법사위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5 |
| 언론사 | 주식회사 펜그리고자유(사건의내막) |
| 심의대상 | 사건의내막 제1140호 8월 15일자 3면 「후보 역량·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 통해 국민께 희망 드러야」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긴급기자회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회견문 전문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기자회견문 등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중대선언(연방)

후보 역량·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 통해 국민께 희망 드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8월8일 기자회견을 통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아래는 이 회견문의 전문이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우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광풍에 대해 담판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우리 당 삼일교단에서 당 지도부를 만나 네거티브 광풍 과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정책 결정으로 국민께 감동을 드려야 한다는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에게도 실망감을 비치고 계십니다. 지역 순회 중에 "민주당이 정안싸움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걱정을 끼치고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 국민께 송구합니다.

무엇보다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희망을 드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경선보다 중요한 본선 승리를 위해 네거티브 공세에도 반격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특색선전에 가까운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서 진심에 기초한 문제 제

지인 2017년 대선 경선은 원팀 정신의 보편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민주당 대선 경선 목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잇는 민주정부 창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름 앞에 늘 한뜻 한마음"

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국민들 보시기에 불만하신 것 같습니다.

당원들중지 여러분! 민주당 대선 경선의 목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 창출입니다. 이 정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경선은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민생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후보의 역량과 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러야 합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모든 후보와 당원들이 단단한 원팀이 되어 본선 승리를 일궈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은 원팀 정신의 보편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자 저를 비롯한 경선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로 하나가 되었고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도 문재인 후보로 뭉쳤습니다.

저는 선거법 제약을 받는 성남 시장 신분이라서 직접 뛰지는 못했지만 이재명 캠프 구성원 모두 선대위에 합류했고, 제 아내도 김경숙 여사님을 모시고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

다. 우리는 다시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름 앞에 늘 한뜻 한마음이었습니다.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동지에게 상처를 주고 당에 실망을 키우는 네거티브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당과

후보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 당 후보님들께 캠프 상황실장 등 직렬한 수준의 상시 소통채널 구성을 제안합니다. 후보 간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론이 아닌 캠프 간 소통채널에서

민중 확인과정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제기와 공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타 후보 측이 소통채널 개설에 응하지 않더라도 저와 관련된 어떤 의문도 우리 캠프 상황실장에게 질의하면 모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이나 의혹제기를 빚지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행위이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당에 끝까지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중단선언문 <전문>

후보 역량·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 통해 국민께 희망 드려야

민주당 대선 경선 목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있는 민주정부 창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름 앞에 늘 한뜻 한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8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아래는 이 회견문의 전문이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입니다. 우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
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우리 당 상임고문단께서 당 지도
부를 만나 네거티브 공방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전하시면서 정책 경쟁으로 국민께 감동을 드
려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
민들께서도 실망감을 비치고 계십니다. 지역
순회 중에 “민주당이 집안싸움 너무 심하게 한
다”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국민
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걱정을
끼치고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후보
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 송
구합니다.

무엇보다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
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
을 되돌리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새 희망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경선보다
중요한 본선 승리를 위해 네거티브 공세에도
반격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흑색선전에 가
까운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조치로서 진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를 했
지만 이마저도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당 대선 경선의 목표
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
주정부 창출입니다. 이 점은 누구도 이견이 없
을 것입니다. 경선은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맡겨
도 좋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어야 합
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민생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후보의 역량과 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
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모든 후보와
당원들이 단단한 원팀이 되어 본선 승리를 일
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은 원팀 정신의 모범
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자 저를 비롯한 경선 후보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로 하나
가 되었고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도 문재인
후보로 뭉쳤습니다.

저는 선거법 제약을 받는 성남시장 신분이
라서 직접 뛰지는 못했지만 이재명 캠프 구성
원 모두 선대위에 합류했고, 제 아내도 김정숙
여사님을 모시고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최

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님의 이름 앞에 늘 한뜻한마음이었습니다.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동지에게 상처를 주고 당에 실망을 키우는 네거티브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당과 후보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 당 후보님들께 캠프 상황실장 등 적절한 수준의 상시 소통채널 구성을 제안합니다. 후보 간의 신상이나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론이 아닌 캠프 간 소통채널에서 먼저 확인과정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제기와 공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타후보 측이 소통채널 개설에 응하지 않더라도 저와 관련된 어떤 의문도 우리 캠프 상황실장에게 질의하면 모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이나 의혹제기를 방자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행위이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답게 끝까지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8

언론사

경북도민일보 주식회사(경북도민일보)

심의대상

경북도민일보 9월 27일자 15면 「개그정치를 막으려면」 제하의 기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만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거나,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외부 기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도민일보

2021년 9월 27일
15면 (보좌기나임)

개그정치를 막으려면

寄稿



김상진
세명대학교수
법학박사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그렇다"라고 답한다.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느냐?"고 다시 묻는다면 답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필자의 답은 주시파 세력에게 또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견강한 시장경제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더불어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위선, 그리고 독선을 배격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동안 보수정당의 지리멸렬로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1대 총선 등 선거에서 연패하면서 좌파 20년 집권, 영구집권권이 나올 정도로 야권에게 미

래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좌파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조국사건은 정국의 변곡점이었다. 집권세력은 조국수호로 맞섰다.

그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윤석열 검찰을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 압박, 압박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불법행위를 수사하였다.

그 결과 드루킹과 경남지사의 불법선거가 밝혀졌고, 충남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의 여비사 성추문 사건으로 민주당 좌파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후미애와 박범계로 이어진 전횡적 법무부장관의 독선은 검찰을 정권의 주구(走狗)로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자유우파, 보수진영의 단결과 중도층의 우클릭, 일부 좌파진보 인사들의 이탈로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지금 대선 후보 경선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느닷없이 조국수사 과정을 문제 삼는 홍준표 후보는 대체 무슨 이유인가? 민주당정권에서 그렇게 조국수사를 방해했다면 민

주당 사람이란 말인가? 어이없게도 다음 야권 대선후보가 어떤 주장을 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는 더 나아가 집권시 민주당인사를 국무총리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국민의 힘 대선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노리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한 윤석열 후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상징으로 비치는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본선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여겨서인지 일방적으로 지지를 몰아주는 것이다. 마침내 국민의 힘 경선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하는 예과된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전언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개그이다.

이러한 왜곡된 경선결과를 막기 위해 경선투쟁을 합력적으로 조정해야 했으나 이미 지난 일이다.

그래서 향후 2차 컷오프와 최종 후보선출 과정에서 역선택이라는 불합리성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지지자들은 말로만 지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국민의 힘 단원이 되자. 그리하여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선출에 적극 참여하자. 이미 당원이라면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로 지지를 모

으라고 감히 제안한다.

우리는 야권 후보를 위하여 국민의 힘 단원이 되어 후보보수 스스로의 힘으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내야 하는 숙명 앞에 놓여 있다. 실제 투표에서 유효표로 연결될 수 없는 역선택과 같은 정치개그 늪을 조성할 자유우파 후보를 제외시키려는 집권야당의 전략에 넘어가는 안 된다. 이것이 자유우파 국민이 '국민의 힘' 단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윤석열 후보는 온갖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뜻심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초지일관하는 후보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대권경쟁이 치열한 야권 본인과 가족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불쌍한 처사이다.

정치세력 간 경쟁 중에 일방적으로 수사나 고소나 고발이니 하는 정치탄압에 국민들은 서상할 뿐이다. 물론 후보자 검증의 칼날은 언제나 선명하고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는 말에 참된 후보로서의 자질이 묻어난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플라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9.15.30cm)



개그정치를 막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없이 “그렇다”라고 답한다.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느냐?”고 다시 묻는다면 답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필자의 답은 주사파 세력에게 또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건강한 시장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더불어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위선, 그리고 독선을 배격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동안 보수정당의 지리멸렬로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1대 총선 등 선거에서 연패하면서 좌파 20년 집권, 영구집권론이 나올 정도로 야권에게 미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좌파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조국사건은 정국의 변곡점이었다. 집권 세력은 조국수호로 맞섰다.

그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윤석열 검찰을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 핍박, 겁박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불법행위를 수사하였다.

그 결과 드루킹과 경남지사의 불법선거가 밝혀졌고, 충남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의 여비서 성추문 사건으로 민주당 좌파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미애와 박범계로 이어진 전현직 법무부장

관의 독선은 검찰을 정권의 주구(走狗)로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자유우파, 보수진영의 단결과 중도층의 우클릭, 일부 좌파진보 인사들의 이탈로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지금 대선후보 경선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느닷없이 조국수사 과잉을 문제 삼는 홍준표 후보는 대체 무슨 이유인가? 민주당정권에서 그렇게도 조국수사를 방해했는데 민주당 사람이란 말인가? 어이없게도 다른 야권 대선후보가 이런 주장을 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는 더 나아가 집권시 민주당인사를 국무총리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국민의 힘 대선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노리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한 윤석열 후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상징으로 비치는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본선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여겨서인지 일방적으로 지지를 몰아주는 것이다. 마침내 국민의 힘 경선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하는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전언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개그이다.

이러한 왜곡된 경선결과를 막기 위해 경선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했으나 이미 지난 일이다.

그래서 향후 2차 컷오프와 최종 후보선출과

정에서는 역선택이라는 불합리성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지지자들은 말로만 지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국민의 힘 당원이 되자. 그리하여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선출에 적극 참여하자. 이미 당원이라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로 지지를 모으자고 감히 제안한다.

우리는 야권 후보를 위하여 국민의 힘 당원이 되어 우파보수 스스로의 힘으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내야하는 숙명 앞에 놓여 있다. 실제 투표에서 유효표로 연결될 수 없는 역선택과 같은 정치개그 놀음으로 진정한 자유우파 후보를 제외시키려는 집권여당의 전략에 넘어가는 안 된다. 이것이 자유우파 국민이 ‘국민의 힘’ 당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윤석열 후보는 온갖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뜻심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초지일관

하는 후보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대권경쟁이 치열한 이때 본인과 가족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불량한 처사다.

정치세력 간 정쟁 중에 일방적으로 수사나 고소나 고발이니 하는 정치탄압에 국민들은 식상할 뿐이다. 물론 후보자 검증의 칼날은 언제나 선명하고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는 말에 참된 후보로서의 진심이 묻어난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플라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0 |
| 언론사 | 주식회사 중앙신문(중앙신문) |
| 심의대상 | 중앙신문 7월 15일자 14면 「윤석열 파일 검증 중...」만평 외 19건 [별첨] '심의대상기사 목록' 참조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만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거나, 여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만평을 반복하여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과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0조(사진게재)제1호·제2호·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첨] '심의대상기사 목록'

| No. | 보도일자 | 지면 | 제목 |
|-----|--------|----|--|
| 1 | 7월 15일 | 14 | 윤석열 파일 검증 중... |
| 2 | 7월 20일 | .. | 책임이 크신 분이 무슨 대선...?! |
| 3 | 7월 23일 | .. | 차기 이재명 정부 청년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 |
| 4 | 8월 4일 | .. | 100% 재난지원금도 마음대로 못하면 그게 지방분권이야? 말로만... |
| 5 | 8월 6일 |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금메달 |
| 6 | 8월 10일 | .. |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했는데... |
| 7 | 8월 13일 | .. | 이낙연 |
| 8 | 8월 19일 | .. | 이낙연과 황교익 대권 경쟁?! |
| 9 | 8월 20일 | .. | 상황이... |
| 10 | 8월 24일 | .. | 역쉬! |
| 11 | 8월 25일 | .. | 대세... |
| 12 | 9월 1일 | .. | 민주당 대권 경선 |
| 13 | 9월 2일 | .. | 접종하니 힘이 더 생깁니다! |
| 14 | 9월 6일 | .. | 이렇게?! |
| 15 | 9월 8일 | .. | 어쩌나~ 국민은 경기도 차베스를 좋아하는데... |
| 16 | 9월 14일 | .. | 주거문제가 해결 안되면 말짱 두루묵! |
| 17 | 9월 15일 | .. | 김종인의 파리 발언의 뜻?! |
| 18 | 9월 16일 | .. | 사퇴소가 아니라면 타후보에게 공직사퇴 요구는 절대 안돼!! |
| 19 | 9월 17일 | .. | 나머지 민주당 국회의원 대권후보들... |
| 20 | 9월 27일 | .. | 흥행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



<중앙신문 2021년 7월 15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7월 20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7월 23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4일자 14면>

중앙만평

김진호 화백 jinosi@hanmail.net



(11.6*12.1)cm

<중앙신문 2021년 8월 6일자 14면>

중앙만평

김진호 화백 jinosi@hanmail.net



(11.6*12.1)cm

<중앙신문 2021년 8월 10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13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19일자 14면>

중앙만평

김진호 화백 jinosi@hanmail.net



(11.6*12.1)cm

<중앙신문 2021년 8월 20일자 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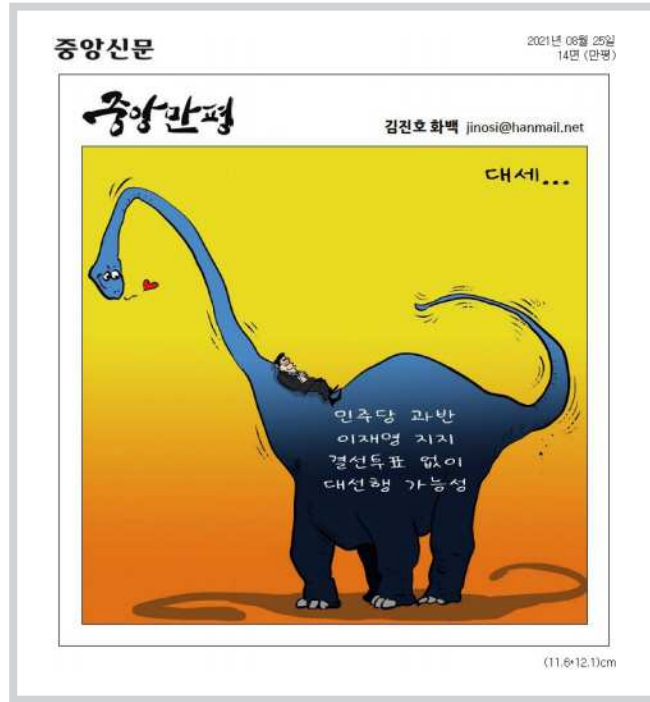
중앙만평

김진호 화백 jinosi@hanmail.net



(11.6*12.1)cm

<중앙신문 2021년 8월 24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25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1일자 14면>

중앙만평

김진호 화백 jinosi@hanmail.net



(11.6*12.1)cm

<중앙신문 2021년 9월 2일자 14면>

중앙만평

김진호 화백 jinosi@hanmail.net



(11.6*12.1)cm

<중앙신문 2021년 9월 6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8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14일자 14면>

중앙만평

김진호 화백 jinosi@hanmail.net



(11.6*12.1)cm

<중앙신문 2021년 9월 15일자 14면>

중앙만평

김진호 화백 jinosi@hanmail.net



(11.6*12.1)cm

<중앙신문 2021년 9월 16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17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27일자 14면>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2 |
| 언론사 | 주식회사 헤럴드(헤럴드경제) |
| 심의대상 | 헤럴드경제 9월 3일자 1면 「“대선, 결국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전문가 10인 전망」 및 3면 「“李 7·李 1 vs 尹 6·洪 2·劉 1 … 대선 승리는 민주당 우세”」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평가단 선정기준 등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한 정치전문가 10인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별 전망을 합산하고, 그 합산결과를 바탕으로 ‘압도적’, ‘우세’ 등과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주요 정당의 최종 후보와 승리 정당 등을 예측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제7호·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대선, 결국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전문가 10인 전망

“각각 여야후보로” 예측 대다수

제 21대 대통령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학 교수와 평론가 등 유력 정치전문가 10명에게 전망을 물었더니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여야 후보로 선출돼 대결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압도적이었다.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보는 질문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치전문가들의 예상은 여당의 승리 가능성쪽에 더 기울었다.

▶관련기사 3면

헤럴드경제가 국내 정치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최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모두 5명이 ‘이재명-윤석열’

쌍(雙)을 내년 대선 최종 대결 후보로 꼽았다. ‘이재명-홍준표’ ‘이재명-유승민’ ‘이낙연-홍준표’가 각각 1명씩으로 ‘소수의견’ 이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직 재직시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난 2일 이전에 이뤄졌다.

여야별로 각각 보면 민주당에서 이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7명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뽑은 전문가는 1명, 무응답은 2명이었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선 3일 현재 모두 6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고, 첫 투표 결과 1위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상위 2명끼리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전문가 10명 중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고 보

는 이는 4명,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명이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결선투표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그것이 대세를 뒤집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10명 중 6명이었다. 2명은 홍준표 의원을, 1명은 유승민 전 의원을 꼽았으며 무응답은 1명이었다. 이번 전문가 대선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난 2일부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 논란은 향후 전문가들의 예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대선 승리 정당 전망에선 민주당이 이길 것이란 응답자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란 전망은 1명, 무응답은 4명이었다. **홍석희 기자**

(16.2*12.0)cm

“대선, 결국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전문가 10인 전망

“각각 여야 후보로” 예측 대다수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학 교수와 평론가 등 유력 정치전문가 10명에게 전망을 물었더니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여야 후보로 선출돼 대결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압도적이었다.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치전문가들의 예상은 여당의 승리 가능성쪽에 더 기울었다.

헤럴드경제가 국내 정치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최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모두 5명이 ‘이재명-윤석열’ 쌍(雙)을 내년 대선 최종 대결 후보로 꼽았다. ‘이재명-홍준표’ ‘이재명-유승민’ ‘이낙연-홍준표’가 각각 1명씩으로 ‘소수의견’이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직 재직시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난 2

일 이전에 이뤄졌다.

여야별로 각각 보면 민주당에서 이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7명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뽑은 전문가는 1명, 무응답은 2명이었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선 3일 현재 모두 6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고, 첫 투표 결과 1위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상위 2명끼리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전문가 10명 중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 이는 4명,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명이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결선투표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그것이 대세를 뒤집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10명 중 6명이었다. 2명은 홍준표 의원을, 1명은 유승민 전 의원을 꼽았으며 무응답은 1명이었다. 이번 전문가 대선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난 2일부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 논란은 향후 전문가들의 예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대선 승리 정당 전망에선 민주당이 이길 것이란 응답자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란 전망은 1명, 무응답은 4명이었다.

“李 7·李 1 vs 尹 6·洪 2·劉 1...대선 승리는 민주당 우세”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 |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
일러스트: 박지영

전문가 10인 대선 전망

| 이행(가나다) | 김유은 | 김홍은 | 박수영 | 박해라 | 신용 | 이준찬 | 최정진 | 이정 | 황태순 | 이영 |
|------------|--------|--------|------|-------|--------|-----|--------|------|------|---------|
| 당파 | 통합의 교수 | 정치학 교수 | 정치학자 | 국민의 힘 | 정치학 교수 | 이준찬 | 통합의 교수 | 정치학자 | 정치학자 | 정치학자 |
| 민주당 후보 보좌 | 이재명 | 이재명 | 이재명 | 이재명 | 유승민 | 이낙연 | 이재명 | 이재명 | 유승민 | 이재명 |
| 민주당 승리 전망 | 무응답 | O | X | O | O | 무응답 | X | X | O | 무응답 |
| 국민의힘 후보 전망 | 홍준표 | 윤석열 | 윤석열 | 윤석열 | 홍준표 | 유승민 | 윤석열 | 윤석열 | 윤석열 | 윤석열 |
| 유권자 전망 | 민주당 | 민주당 | 국민의힘 | 무응답 | 민주당 | 무응답 | 무응답 | 민주당 | 무응답 | 19명중 1명 |

민주당 지지 O·홍준표 지지 X·유승민 지지 O·국민의힘 지지 X·무응답

각 당의 명선 경쟁이 전례없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전망 결과가 나왔다. 당파의 지지를 뛰어 후보가 최종 2명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는 현재 지지를 190만 아래로 경계치 사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종 국민 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전망이 성공한다면 이는 '검찰의 그림 사자' 시대가 끝나기 전 마지막 대선 결과 전망을 담은 절판엔 전문가 10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의 승리를, 1명은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무응답은 4명이었다.

▶민주당 이재명-10명 중 7명 =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라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7명이 이재명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1명, 무응답은 2명이었다. 김영춘 후보는 "이 지사가 영남 후보로서 호남의 지지를 받아 지지세가 견고하다. 이 전 대표가 본 위기를 뒤집으면 호남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2명도 있었다. 본선 경쟁도 이 지사가 강하다"고 말했다.

박성병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를 압도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춘 민주당 후보들이 갖기가 어렵다. 이 전 대표도 인물은 훌륭하다. 그러나 이 지사만큼의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리 대실 측면에서도 이 지사가 앞는다. 김부선이나 홍수 욱선은 변수가 안된다. 이미 과거에 다 제기했던 문제점이 때론"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이낙연 후보가 자신이 왜 지도자가 돼야 하는지와 함께 국정 청사진을 국민을 과부와 딱하게 설득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받을 뛰어나는 것은 이 지사가 아니라 전 총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찬 인턴대 교수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는 발언한 오이이 경쟁력 없다. 홍수 욱선을 한

현재 1위 후보가 각 당 대선후보 가능성 1 민주당은 이재명-국민의힘은 윤석열 결말 민주당 승리 5명-국민의힘 1명-기권 4명 3차대 변수 작아-여야 일대일 각축전 예상

것이 상당히 치명적이다. 예상들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들이 본선 승리가가능성을 본다면 이 지사를 따지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100퍼센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한 것 역시 단독적으로 한 것이다. 여러 면에서 '불안하다'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홍준표도 불망-김영춘 명지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후보가 지고 올라오고 있지만 정통 보수지지층이 최대 관심사는 정권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후보보다도 정권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윤 전 총장을 보는 것"이라며 "보수층에서 보면 여전히 윤 전 총장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내다봤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결선 투표가 없기에 국민의힘 경선은 변수가 제한적이다. 현재의 지지율대로 윤 전 총장이 무난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며 "당첨위원장이 윤 전 총장 곁에 있을 때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선훈이 이미 형성돼 있다. 홍준표 후보가 젊은층과 호남에서 표가 나온다는데 이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놓고 여론세가 개입된 것이다. 최종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김유은 학양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은 토론을 하면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할 것 같다. 화려한 전 관리행진이 나왔지만 지금 나와서 보니까 정말 '어느날' 하는 인상이 강해지고 있다. 전 총리와의 전 검찰총장이 더 이상한 말을 하고 선거가 될 때는 인상이 강하다. 결국은 시위 시합하게 할 때는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박유리 국민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윤석열 이변이 없다면 윤석열이 없는 것이다. 보수층의 최대 관심은 누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 윤의 지금만 다른 사람이 이변이기에 윤석열도 '필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결정적으로 본론을 발표해보 바구면서 '본론을 두려워한다'는 인상이 되어 버렸다. 세상천하에 토론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정진 중앙대 교수는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 유 전 의원의 포텐셜은 상당하다. 관건은 대중적인 호소력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에서 호소력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차지하려면 민주당처럼 경선 흥행을 위해 서면도 민주당처럼 경쟁을 세게 풀어야 하는데 지금 본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석희 신매한 기자

©2021 헤럴드경제



“李7·李1vs尹6·洪2·劉1…대선 승리는 민주당 우세”

현재 1위 후보가 각 당 대선 후보 가능성
민주당은 이재명·국민의힘은 윤석열 전말
민주당 승리 5명·국민의힘 1명…기권 4명
3지대 변수 적어…여야 일대일 각축전 예상

각 당의 ‘경선 전쟁’이 진행 중인 20대 대통령선거의 큰 틀이 굳어지고 있다는 전망 집계가 나왔다. 현재의 지지율 1위 후보가 최종 각 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는 현재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이 불거지기 전 실시됐다. 대선 결과 전망 질문에 전문가 10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 승리’를, 1명은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무응답은 4명이었다.

▶**민주 후보 이재명…10명 중 7명**=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7명이 이 지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낙연 전 대표가 될 것이란 응답은 1명, 무응답은 2명이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 지사가 영남 후보면서 호남의 지지를 받아 지지세가 견고하다. 이 전 대표가 분위

기를 뒤집으려면 호남에서 지지율을 앞서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본선 경쟁력도 이 지사가 강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를 압도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다른 민주당 후보가 갖기가 어렵다. 이 전 대표도 인물은 출중하다. 그러나 이 지사만큼의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이 지사가 ‘위’다. 김부선이나 형수 욱설은 변수가 안 된다. 이미 과거에 다 제기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이낙연 후보가 자신이 왜 지도자가 돼야 하는지와 함께 국정 청사진을 국민들 피부에 딱딱 꽂히게 설득을 해야 판을 흔들 수 있다. 판을 뒤바꾸는 힘은 이 지사가 아니라 이 전 총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는 불안한 요인이 굉장히 많다. 형수 욱설을 한 것이 상당히 치명적이다. 여성 표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들이 본선 승리 가능성을 본다면 이 지사를 밀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 역시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여러 면에서 ‘불안하다’는 인식이 유권자 사이에서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홍준표도 물망**=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정통 보수 지지층의 최대 관심사는 ‘정권교체할 수 있는 사

람이 누구냐다. ‘누가 후보냐보다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윤 전 총장을 꼽는 것’이라며 “보수층에서 보면 여전히 윤 전 총장 지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내다봤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결선투표가 없기에 국민의힘 경선은 변수가 제한적이다. 현재의 지지율대로 윤 전 총장이 무난하게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협위원장들이 윤 전 총장 곁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세론’이 이미 형성돼 있다.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과 호남에서 표가 나온다는 데 이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놓고 역선택이 개입된 것이다. 최종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주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2명이었다. 김유은 한양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은 토론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나왔지만 직접 나와서 보니까 점점 ‘아닌데’ 하는 인상이 강해지고 있다. 전 감사원장과 전 검찰총장이 다 이상한 말을 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인상이 강하다. 결국은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홍

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윤석열, 이분이 워낙 콘텐츠가 없는 분이다. 보수층의 최대 관심은 ‘누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안 보이기에 윤석열로 ‘묻지 마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결정적으로 토론회를 발표회로 바꾸면서 ‘토론을 두려워한다’는 인상이 돼버렸다. 세상천지에 토론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의 포텐셜은 상당하다. 관건은 대중적인 호소력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에서 ‘호소력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차지하려면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처럼 경쟁을 세계 불여야 하는데 지금 분열이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4 |
| 언론사 | 주식회사 투데이충남(투데이충남) |
| 심의대상 | 투데이충남 10월 14일자 9면 「대선 판세와 주역 점괘」 제하의 기고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다른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기고

대선 판세와 주역 점괘



김종호
호서대 교수, 법학박사

여야는 지금 대장동을 사이에 두고 백척간두 대회전을 벌이는 중이다. 악신(惡神) 아수라와 선신(善神) 제석천의 아수라장 싸움터에서 과연 누가 웃을까? 패를 살피건대, 이재명은 뇌산소과(雷山小過)이고 지화명이(地火明夷)이나, 윤석열은 뇌택귀매(雷澤歸妹)의 형국이다.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일은 한번 지나가면

무엇으로도 바로잡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미 결론이 나고 결정이 된 일은 어떤 경우라도 변경시킬 수 없으니 이재명은 뇌산소과요, 밝음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득세하니 지화명이 아닌가?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는데, 밑에는 연못이 있다. 용이 연못에서 승천하는 형국이니 윤석열은 뇌택귀매의 패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힘 내지 권력감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한 사람의 현명함이 다수의 심리를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여췌든 선거에 나선 사람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잘 간파해야 한다.

사람들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심리는 여전히 위력을 떨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대개문(문과)과 같은 특정 정파 사람들의 집합은 흔히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는 거의 적응하지 못한다. 반면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사에는 번개같이 움직인다. 지금도 매일 쏟아져 나온 윤석열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충분히 그런 집착을 할 수 있다. 상식적인 비율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이버폭력 수준의 댓글과 '좋아요'가 달린다. 여론 조작을 위한 키크랩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심증을 떨칠 수가 없다.

누구나 고립된 개인은 반사회적 행동을 자제할 능력을 보유한 반면 집단에 속한 개인은 그런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른바 집단 히스테리를 보인 패거리 문파를 보면 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파가 북돋는 것은 좌파 언론이 제공하는 다양한 충동들이다. 윤석열을 비난하는 좌파언론의 기사에 문파는 그들을 자극한 원인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잔인하게 활귀고 영웅이라도 되는 양 우쭐거린다. 참으로 비겁하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극의 원인들은 아주 변화무쌍하며 윤석열에 대한 모든 반응은 이성을 잃은 거의 발광수준이다.

문파는 언제나 그런 자극원들에 이유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변덕스럽다. 야만인과 같은 문파는 자신들의 욕망의 실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애나 간섭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과민반응하고 의심할 나위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흔히 그렇듯 암시에 걸린 모든 개인은 일단 두뇌로 진입한 사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질러 놓고 본다. 논리적 연관성은 필요 없다. 감염력이 작용한 결과 집단화된 모든 개인이 사실을 곡해하는 방식도 같은 모양새를 띠기 마련이다. 집단화된 문파의 개인들 중 한 명이 먼저 진실을 곡해하는 순간 감염력을 지닌 암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른바 좌표 찍기가 그것인데 조국이나 김어준 같은 인물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양인이든 무지한 자든 누구나 문파에 합세하는 순간부터 객관적인 관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암시의 출발점은 언제나 교주의 막연한 기억이나 회상이 만든 착각과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진단이 유발하는 감염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전염을 피하려면 관련 사건을 순수한 상상력의 소신들로 고찰하면 안 된다. 가짜뉴스는 잘못 관찰한 사실에 대한 공상과 그것들을 관찰하여 얻은 주관적 설명들로 버무린 희망사항들이다.

문파는 분화하여 일부는 이재명파가 되었다. 명심하라. 이재명은 결코 자유로운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빈민의 친구였던 나폴레옹이 피에 굶주린 독재자로 탈바꿈하여 권력을 찬탈하고, 자유를 타락해 가면서 오직 자신의 야망을 증폭시키기 위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물로 변해가듯 이재명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권력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윤석열을 대항마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17.7×25.9)cm



대선 판세와 주역 점괘

여야는 지금 대장동을 사이에 두고 백척간두 대회를 벌이는 중이다. 악신(惡神) 이수라와 선신(善神) 제석천의 이수라장 싸움터에서 과연 누가 웃을까? 패를 살피건대, 이재명은 뇌산소과(雷山小過)이고 지화명이(地火明夷)이나, 윤석열은 뇌택귀매(雷澤歸妹)의 형국이다.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일은 한번 지나가면 무엇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결론이 나고 결정이 된 일은 어떤 경우라도 변경시킬 수 없으니 이재명은 뇌산소과요, 밝음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득세하니 지화명이 아닌가?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는데, 밑에는 연못이 있다. 용이 연못에서 승천하는 형국이니 윤석열은 뇌택귀매의 패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힘 내지 권력감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한 사람의 현명함이 다수의 심리를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선거에 나선 사람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잘 간파해야 한다. 사람들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심리는 여전히 위력을 떨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대개문(문과)과 같은 특정 정파 사람들의 집합은 흔히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는 거의 적용하지 못한다. 반면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사에는 번개같이 움직인다. 지금도 매일 쏟아져 나온 윤석열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충분히 그런 집작을

할 수 있다. 상식적인 비율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이버폭력 수준의 댓글과 '좋아요'가 달린다. 여론 조사를 위한 키크랩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심증을 떨칠 수가 없다.

누구나 고립된 개인은 반사적 행동을 자제할 능력을 보유한 반면 집단에 속한 개인은 그런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른바 집단 히스테리를 보인 패거리 문과를 보면 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과가 복종하는 것은 좌파 언론이 제공하는 다양한 충동들이다. 윤석열을 비난하는 좌파언론의 기사에 문과는 그들을 자극한 원인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잔인하게 활취고 영웅이라도 되는 양 우쭐거린다. 참으로 비겁하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극의 원인들은 아주 변화무쌍하며 윤석열에 대한 모든 반응은 이성을 잃은 거의 발광수준이다.

문과는 언제나 그런 자극원들에 이유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변덕스럽다. 야만인과 같은 문과는 자신들의 욕망의 실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애나 간섭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과민반응하고 의심할 나위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흔히 그렇듯 암시에 걸린 모든 개인은 일단 두뇌로 진입한 사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질러 놓고 본다. 논리적 연관성은 필요 없다. 감염력이 작용한 결과 집단화된 모든 개인이 사실을 곡해하는 방식도 같은 모양새를 띠기 마련이다. 집단화된 문과의 개인들 중 한 명이 먼저 진실을 곡해하는

순간 감염력을 지닌 암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른바 좌표 찍기가 그것인데 조국이나 김어준 같은 인물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양인이든 무지한 자든 누구나 문과에 합세하는 순간부터 객관적인 관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암시의 출발점은 언제나 교주의 막연한 기억이나 회상이 만든 착각과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진단이 유발하는 감염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전염을 피하려면 관련 사건을 순수한 상상력의 소신들로 고찰하면 안 된다. 가짜 뉴스는 잘못 관찰한 사실에 대한 공상과 그것

들을 관찰하여 얻은 주관적 설명들로 버무린 희망사항들이다.

문과는 분화하여 일부는 이재명파가 되었다. 명심하라. 이재명은 결코 자유로운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빈민의 친구였던 나폴레옹이 피에 굶주린 독재자로 탈바꿈하여 권력을 찬탈하고, 자유를 타락해가면서 오직 자신의 야망을 증폭시키기 위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물로 변해가듯 이재명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권력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윤석열을 대항마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5 |
| 언론사 | 주식회사 경상일보(경상일보) |
| 심의대상 | 경상일보 10월 19일자 4면 「이재명, 양자대결서 윤석열·홍준표에 다 밀려」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제목에서 특정 후보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경상일보

이재명, 양자대결서 윤석열·홍준표에 다 밀려

KSOI 대선 지지도 조사
尹 37.1% vs 李 35.4%
洪 35.9% vs 李 34.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에게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5일-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7.1%로 35.4%의 지지율을 보인 이 후보를 오차범위(±3.1%p) 내에서 앞섰다. 지난주에 비해 이 후보가 0.4%p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3.9%p 상승했다.

이 후보와 홍 의원간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34.6%, 홍 의원은 35.9%를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1.3%p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0.6%p 하락한 반면, 홍 의원은 2.9%p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을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32.9%로 이 후보(32.0%)를 근소하게 앞서며 초반빙의 점전을 벌였다. 안 대표는 3.5%였다.

윤 전 총장 대신 홍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가정했을 경우엔 이 후보가 31.5%의 지지율로 홍 의원(27.5%)을 앞섰다. 심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범보수권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 29.1%, 홍 의원 28.5%,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1.7%,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 4.8%, 안 대표 3.4% 등으로

2021년 10월 19일
(4면 (정치))

조사됐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모두 지난주보다 각각 3.6%p, 1.0%p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이 41%로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5일 전국 18세 이상 2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전보다 2.0%p 오른 41.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23.1·8.3cm)

<경상일보 2021년 10월 19일자 4면>



이재명, 양자대결서 윤석열·홍준표에 다 밀려

KSOI 대선 지지도 조사

尹 37.1% vs 李 35.4%

洪 35.9% vs 李 34.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에게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5일~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7.1%로 35.4%의 지지율을 보인 이 후보를 오차범위(± 3.1%p) 내에서 앞섰다. 지난주에 비해 이 후보가 0.4%p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3.9%p 상승했다.

이 후보와 홍 의원간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34.6%, 홍 의원은 35.9%를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1.3%p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0.6%p 하락한 반면, 홍 의원은 2.9%p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

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을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32.9%로 이 후보(32.0%)를 근소하게 앞서며 초박빙의 접전을 벌였다. 안 대표는 3.5%였다.

윤 전 총장 대신 홍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가정했을 경우엔 이 후보가 31.5%의 지지율로 홍 의원(27.5%)을 앞섰다. 심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범보수권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 29.1%, 홍 의원 28.5%,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1.7%,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 4.8%, 안 대표 3.4% 등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모두 지난주보다 각각 3.6%p, 1.0%p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이 41%로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5일 전국 18세 이상 2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전보다 2.0%p 오른 41.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6 |
| 언론사 | 주식회사 뉴영남매일(뉴영남매일) |
| 심의대상 | 뉴영남매일 10월 27일자 4면 「홍준표만 이재명 앞섰다…양자대결 洪 45.1%, 李 40.6%」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제목에서 특정 후보가 우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1년 10월 27일 13:00

·영남매일

홍준표만 이재명 앞섰다…양자대결 洪 45.1%, 李 40.6%

이 43.7%, 윤 40.6% 접합...3.1%p 앞서
보수 야권 적합도 조사 홍 27.3%, 윤26.9%



국민위원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후보와의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26일 정치코리아연설행이 아시아경제에 의뢰해 지난 23~24일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와 홍 의원의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40.6%, 홍 의원은 45.1%로 홍 의원이 오차범위 내(4.5%p)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주와 조사 대비 이 후보는 2.0%p 상승한 반면, 홍 의원은 0.8% 하락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이 후보는 40~50대 연령층,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였다

홍 의원은 남성, 30~50대, 60대 이상 연령층, 서울, 영남권(TK/PK)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77.4%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위원 지지층에서는 75.4%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지지대상 없음+찬보름)에서는 홍 의원(40.5%)이 이 후보(32.2%)보다 8.7%p 더 높은 지지를 받으며 두원한 우위를 보였다.

이 후보와 윤 전 총장 간 가상대결에선 이 후보 43.7%, 윤 전 총장 40.5%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내(3.1%p)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주와 조사 대비 윤 전 총장은 5.0% 하락하고 이 후보는 4.1%p 상승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이 후보가 윤 전 총장을 누르고 우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남성, 30~40대 연령층, 경기/인천,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였고,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 연령층, 영남권(TK/PK)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83.7%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위원 지지층에서는 75.5%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후보(41.5%)가 윤 전 총장(24.1%)보다 17.4%p 더 높은 지지를 받으며 두원한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간 가상대결에선 이 후보 38.9%, 유 전 의원 36.1%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2.8%p)에서 유 전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여인, 40대 이상 연령층, 경기/인천, 호남권에서 우세를 보였고, 유 후보는 20~30대 연령층, 강원/제주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73.6%가 이 후보

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위원 지지층에서는 83.2%가 유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유 전 의원(32.3%)이 이 후보(27.5%)보다 4.8%p 차이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와 권혁용 전 새누리당 간 가상대결에선 이재명 40.3%, 권 전 후보 38.6%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내(1.6%p)에서 권 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40~50대 연령층, 경기/인천,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윤 전 총장은 20대와 60대 이상과, 대구/경북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78.1%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위원 지지층에서는 67.4%가 윤 전 후보를 응원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후보 32.6%, 유 전 후보 32.8%로 두 후보 간 지지세가 분할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수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홍 의원(27.3%)과 윤 전 총장(26.9%)가 선두권이었으며 양자대결에선 홍 의원(45.1%)과 윤 전 총장(40.6%)의 격차가 4.5%p로 좁혀졌다.

이 후보는 20~30대 연령층,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였다.

국민위원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4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 의원 36.7%, 유 전 의원은 6.6%, 윤 전 후보 4.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코리아연설행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결과와 함께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news@news1.com

2021.10.27

<뉴영남매일 2021년 10월 27일자 4면>



홍준표만 이재명 앞섰다…

양자대결 洪 45.1%, 李 40.6%

이 43.7%, 윤 40.6% 접전…3.1%p 앞서
보수 야권 적합도 조사 洪 27.3%, 윤 26.9%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후보와의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26일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지난 23~24일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와 홍 의원의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40.6%, 홍 의원은 45.1%로 홍 의원이 오차범위 내(4.5%p)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주차 조사 대비 이 후보는 2.0%p 상승한 반면, 홍 의원은 2.9%p 하락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이 후보는 40~50대 연령층,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였고, 홍 의원은 남성, 20~30대, 60대 이상 연령층, 서울, 영남권(TK/PK)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77.4%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5.4%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잘 모름)에서는 홍 의원(40.9%)이 이 후보(32.2%)보다 8.7%p 더 높은 지지를 받으며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이 후보와 윤 전 총장 간 가상대결에선 이 후보 43.7%, 윤 전 총장 40.6%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3.1%p)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주차 조사 대비 윤 전 총장은 5.0%p 하락하고 이 후보는 4.1%p 상승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이 후보가 윤 전 총장을 누르고 우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남성, 30~40대 연령층, 경기/인천,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였고,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 연령층, 영남권(TK/PK)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83.7%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5.1%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후보(41.5%)가 윤 전 총장(24.1%)보다 17.4%p 더 높은 지지를 받으며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 간 가상대결에선 이 후보 38.9%, 유 전 의원 36.1%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2.9%p)에서 유 전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여성, 40대 이상 연령층, 경기/인천, 호남권에서 우세를 보였고, 유 후보는 20~30대 연령층, 강원/제주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73.6%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3.3%가 유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유 전 의원(32.3%)이 이 후보(27.5%)보다 4.8%p차이로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40.2%, 원 전 지사 38.6%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1.6%p)에서 원 전 지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40~50대 연령층, 경기/인천,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였고 원 전 지사는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 서울, 대구/경북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78.1%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7.4%가 원 전 지사를 응원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후보 32.6%, 원 전 지사 32.3%로 두 후보 간 지지세가 팽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수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 의원(27.3%)과 윤 전 총장(26.9%)가 선두권이었고 이어서 유 전 의원(15.7%), 원 전 지사(5.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9%)순으로 나

타났다.(없음/잘모름 13.9%)

지난 10월2주차 조사 대비 홍 의원(-0.8%p)보다 윤 전 총장(-2.1%p)이 더 큰 하락 폭을 보이며 두 후보 간 순위가 엇갈렸다.

홍 의원은 남성, 20~30대 연령층에서 우세를 보인 반면, 윤 전 총장은 여성,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4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 의원 36.7%, 유 전 의원 5.6%, 원 전 지사 4.5%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원지코리아컨설팅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7 |
| 언론사 | 주식회사 전국매일신문(전국매일신문) |
| 심의대상 | 전국매일신문 10월 15일자 4면 「이재명, 與野 4자 가상대결서 모두 앞섰다」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특정 후보가 우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국매일

2021년 10월 15일
04면 (정치)

이재명, 與野 4자 가상대결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34.0% · 윤석열 33.7% · 심상정 4.2% · 안철수 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등과의 4자 가상대결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2027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 윤 전 총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4자 가상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모두 앞섰다.

이 후보 34.0%, 윤 전 총장 33.7%, 심 후보 4.2%, 안 대표 4.0%의 지지율을 보였다.

윤 전 총장 대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가상 4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32.4%, 홍 의원 27.2%, 안 대표 5.1%, 심 후보 5.0%였다.

보수이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3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 의원 25.5%,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2.5%, 안 대표 4.2%, 원희룡 전 제주지사 3.8%, 김동연 전 총리 2.1%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18.2×9.4)cm



이재명, 與野 4자 가상대결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34.0% · 윤석열 33.7% ·
심상정 4.2% · 안철수 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등과의 4자 가상대결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2027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 윤 전 총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4자 가상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모두 앞섰다.

이 후보 34.0%, 윤 전 총장 33.7%, 심 후보 4.2%, 안 대표 4.0%의 지지율을 보였다.

윤 전 총장 대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가상 4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32.4%, 홍 의원 27.2%, 안 대표 5.1%, 심 후보 5.0%였다.

보수야권 대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3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 의원 25.5%,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2.5%, 안 대표 4.2%, 원희룡 전 제주지사 3.8%, 김동연 전 총리 2.1%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8 |
| 언론사 | 일간대구신문 주식회사(대구신문) |
| 심의대상 | 대구신문 10월 12일자 22면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천기와 미래운」, 11월 9일자 22면 「제 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의 천운」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판세를 분석하며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운세를 통해 후보자들의 당락을 예측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반복하여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천기와 미래운

류동학의 세상읽기

류동학
해당학술원 원장



이재명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도 경선에서 2위 이낙연 전 대표의 39.14%(56만392표)를 크게 따돌리고 50.29%(71만9905표)로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다만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62.37%로 28.30%를 얻은 이 지사를 더블스코어 넘게 이겨 무효표의 정통성 시비가 불가피하고 원팀 구축에 먹구름이 끼고 말았다. 앞으로의 행보도 가시밭길에 예상된다.

그는 경북 안동시에서 1963년 양력12월8일(음력10월29일)에 태어났다. 태어난 시는 그동안 필자도 병술시(丙戌時, 19시 30분~21시30분)로 보아 왔으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오후 15시에서 16시에 태어났다고 이동형 티비8월18일자 유튜브방송에서 본인의 입으로 언급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그의 타고난 천기로 그의 명과 미래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주는 대살이 지난 추위가 심하고 삭풍이 몰아치는 환경인 중동(中冬)이 지난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한다. 자평명리학의 3대 간법의 하나인 격국론(格局論)에 의하면 그의 격국은 ②자수(子水) 위단(位斷) ①을목(乙木)일간이 ⑤계수(癸水)편인으로 투출편인격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삭풍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인동초나 잡초와 같은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한 ①을목(乙木)이다. ①을목(乙木)일간은 치밀성과 수치계산이 정확하여 현실적 역량이 탁월하다. ①을목(乙木)일간임상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약하고 제도권의 교육적인 혜택이 약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그는 정규과정은 초졸로 소년공시절 중졸, 고졸의 경정고사로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천기적인 특징은 심성상 편인(偏印)의 특징이다. 편인은 직관력과 눈치가 빠르고 아이디어와 기획력 및 시대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기회 포착이 뛰어나고 집요하게 하점파악에 탁월하다. 부정적으로는 편인은 유양이 조화롭지 못해 표리가 부등하고 진실을 위장한 이중성격으로 기만, 위선, 의심, 배신, 남탓 등의 성격과 일차적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다.

②자수(子水)는 자오묘유(子午明暗)의 왕지(旺地)의 하나로 고집이 강하고, 배락이 쳐도 눈 하나 깜박거리지 않을 만큼의 기세가 있다. 다만 활력수인 ②자수(子水)가 ④묘목(卯木)과 자묘형하고 ③유금(酉金)과 자유파(子酉破)하여 활력수가 파도가 발생하고 남을 다치게 하는 속성과 인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수육설문제가 대표적이다. 자지가 자오묘유(子午明暗)의 도화살(桃花煞)이 강하여 이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가 2022년 3월9일 대선까지 남아야 할 작은 파도가 형수육설문제, 예배우와 인플루언서들이다.

이 사주의 특징은 을목이 년지의 ④묘목(卯木)비견으로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고 손재(財財)와 투기가 강한 ⑥갑목(甲木)집재로 인하여 부귀를 공유하는 자기세력을 형성하고 파이더 기질이 대단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지의 ③유금(酉金)편관은 권력의지의 상징으로 권모술수와 모험심이 대단하다. 사회적인 전무력기 강한 심성이 편관이다.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이자 심성은 생사의 ⑧미토(未土)편재(偏財)이다. 자평명리학은 계절의 조화를 이루는 조후운을 특별법으로 보아 대운과 사람의 그릇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적용한다. 이 사주는 추위를 녹이는 건조한 생사에 미토(未土)의 지장간에 정화, 을목, 기토가 암장되어 이 사주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 미토 편재는 이성과 경영적인 마인드와 종류심 및 일확천금의 재물창고이다. 이 사주의 대운은 2004년 42세 이후부터 10년간 기미(己未)대운으로 흘러 상당한 재산축적과 이성과의 인연이 좋은 시기였다. 2014년 10년간은 무오(戊午)대운의 정재대운으로 고정적인 수입창출이 좋고 사주에 강한 계수를 무계합(戊戌)으로 조절하여 현실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의 성남시장 재선과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시기이자 대장동개발시기와 맞물려 있는 시기이다. 을 산축년 무술월은 사주와 운이 축술미(丑戌未) 삼행으로 인하여 이번 대장동특혜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라 그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동이후인 11월 초순이후 천기가 불리하고 특히 12월 경자월과 2022년 1월 신축년의 산축월은 그의 청와대행과 고도소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보사퇴라는 한국정치사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무수저출신의 소년공의 성공신화는 어떤 결말을 맺을지 매우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 사주 | 일주 | 월주 | 년주 | |
|------------|------------|-------------------|------------|-----|
| ⑦계수(癸水) 편인 | ①을목(乙木) 일간 | ⑥갑목(甲木) 겁재 | ⑤계수(癸水) 편인 | 천간 |
| ⑧미토(未土) 편재 | ③유금(酉金) 편관 | ②자수(子水) 편인격 | ④묘목(卯木) 비견 | 지지 |
| 정물기(丁乙) | | ①임수(壬水) 정인(正印) 사행 | | 지장간 |

(13.7-30.5)cm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천기와 미래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도 경선에서 2위 이낙연 전 대표의 39.14%(56만 392표)를 크게 따돌리고 50.29%(71만 9905표)로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다만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62.37%로 28.30%를 얻은 이 지사를 더블스코어 넘게 이겨 무효표의 정통성 시비가 불가피하고 원팀 구축에 먹구름이 끼고 말았다. 앞으로의 행보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그는 경북 안동시에서 1963년 양력 12월 8일(음력 10월 23일)에 태어났다. 태어난 시는 그동안 필자도 병술시(丙戌時, 19시 30분~21시 30분)로 보아 왔으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오후 15시에서 16시에 태어났다고 이동형 티비(8월 16일자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의 입으로 언급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그의 타고난 천기로 그의 명과 미래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주는 대설이 지난 추위가 심하고 삭풍이 몰아치는 환경인 중동(仲冬)이 지난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한다. 자평명리학의 3대 간법의 하나인 격국론(格局論)에 의하면 그의 격국은 ②자수(子水, 쥐달)월 ①을목(乙木)일간이 ⑤계수(癸水)편인으로 투출하여 투출편인격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삭풍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인동초나 잡초와 같은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한 ①을목(乙木)이다. ①을목(乙木)일간은 치밀성과 수치계산

이 정확하여 현실적응력이 탁월하다. ①을목(乙木)일간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약하고 제도권의 교육적인 혜택이 약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그는 정규과정은 초졸로 소년공 시절 중졸, 고졸의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천기적인 특징은 십성상 편인(偏印)의 특징이다. 편인은 직관력과 눈치가 빠르고 아이디어와 기획력 및 시대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기회 포착이 뛰어나고 집요하게 허점과 약에 탁월하다. 부정적으로는 편인은 음양이 조화롭지 못해 표리가 부동하고 진실을 위장한 이중성격으로 기만, 위선, 의심, 배신, 남탓 등의 성정과 일차적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다.

②자수(子水)는 자오묘유(子午卯酉)의 왕지(旺地)의 하나로 고집이 강하고, 벼락이 쳐도 눈 하나 깜박거리지 않을 만큼의 기세가 있다. 다만 활력수인 ②자수(子水)가 ④묘목(卯木)과 자묘형하고 ③유금(酉金)과 자유파(子酉破)하여 활력수가 파도가 발생하고 남을 다치게 하는 속성과 인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수 욕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지가 자묘유(子卯酉)의 도화살(桃花殺)이 강하여 이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가 2022년 3월 9일 대선까지 넘어야 할 작은 파도가 형수 욕설 문제, 여배우와의 불륜스캔들이다.

이 사주의 특징은 을목이 년지의 ④묘목(卯木)비견으로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고 손재(損財)와 투기가 강한 ⑥갑목(甲木)겁재로 인하여 부귀를 공유하는 자기세력을 형성하고

파이터 기질이 대단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지의 ③유금(酉金) 편관은 권력의지의 상징으로 권모술수와 모험심이 대단하다. 사회적인 전투력이 강한 십성이 편관이다.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이자 십성은 생시의 ⑧미토(未土)편재(偏財)이다. 자평명리학은 계절의 조화를 이루는 조후용신을 특별법으로 보아 대운과 사람의 그릇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적용한다. 이 사주는 추위를 녹이는 건조한 생시에 미토(未土)의 지장간에 정화, 을목, 기토가 암장되어 이 사주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 미토 편재는 이성과 경영적인 마인드와 풍류심 및 일확천금의 재물창고이다. 이 사주의 대운은 2004년 42세 이후부터 10년간 기미(己未)대운으로 흘러 상당한 재산축적과 이성과의 인연이 좋은 시기였다. 2014년 10년간은 무오(戊午)대운의 정재대운으로 고정적인 수입창출이

좋고 사주에 강한 계수를 무계합(戊癸合)으로 조절하여 현실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의 성남시장 재선과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된 시기이자 대장동 개발시기와 맞물려 있는 시기이다. 을 신축년 무술월은 사주와 운이 축술미(丑戌未) 삼형으로 인하여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라 그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입동 이후인 11월 초순 이후 천기가 불리하고 특히 12월 경자월과 2022년 1월 신축년의 신축월은 그의 청와대행과 교도소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보 사퇴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무수저 출신의 소년공의 성공신화는 어떤 결말을 맺을지 매우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제 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의 천운

류동학의 세상읽기

류동학
해명학술원 원장



윤석열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의 흥준표후보를 따돌리고 제 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윤석열후보는 '적폐청산 캠페인'에서 '조국 수사'와 '추·윤 갈등' 사태로 반 문재인세력의 구심점으로 정치경험 없이 최단 기간 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또한 전과 4범의 이재명후보를 잡아 검사출신 대통령이 될지 관전 포인트이다.

윤후보가 국민들에게 회자된 사건은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원의 국정감사장이었다. 당시 윤석열 여주지정장은 검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항명 파동'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후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2019년 7월 16일 대한민국의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2021년 3월 4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사태로 문재인정부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의 명(命)과 운(運)을 가지고 향후 천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순대(960~1270)에 사자평에 의해서 탄생한 자명명리학(字明明理學)은 음양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의 원리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의 십성(十星)이론과 합형총파해(合刑總破害)의 원리를 기반으로 간명한다. 또한 월지와 일간을 기준으로 간명하는 격국(格局)이론, ①일간과 ②생월의 월지를 기준으로 사주체계의 기세를 분석하는 기세분석적인 관점인 역부(御部)이론이 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생월의 절기와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의 한냉조습(寒冷燥濕)을 조절하는 조후이론의 삼대간법을 중심으로 간명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으로 명(命)의 회기를 판정하고 사주의 균형을 잡는 중화(中和)이론에 의해서 사주의 균형수와 같은 용신(用神)과 희신(喜神)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대운과 세운 및 월운등을 분석하는 미래예측학이다. 일반적으로 자명명리학의 해석법이 어렵

다 보니 각종 12지신과 신상본과 12운성으로만 보는 명리학은 정통자명명리학에서 멀어지고 천운을 보는 것이 한계가 너무 많다.

먼저 타고난 명의 주변환경적인 변화와 삶의 지향점을 보는 10년마다 전개되는 대운(大運)은 주로 한난조습의 조절을 중심으로 일간의 강약을 참조하는 조후(調候)이론을 우선 적용한다.

현재 그의 천운인 대운은 2007년 이후부터 10년간은 계사(癸巳)대운의 상관운과 편관운으로 파란이 많고 자리변동수가 강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26일 이후부터 10년간은 갑오대운의 편재운과 정관대운으로 진입하였다. 즉 그의 현실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오후(午火)의 조후가 등장하니 천운이 도운다.

한편 격국이론에 의하면 그의 격국은 ①계수(癸水)가 천간에 나타나 투출한 금수상관격(金水傷官格)이다. 금수상관격은 다른 상관격과 다르게 금수상관의견관(金水傷官見官)이라 추위를 녹이는 조후가 사급하여 정화(丁火)와 오후(午火) 및 병화(丙火)와 사화(巳火)의 관살(官殺)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윤후보의 천운은 갑오대운이 매우 좋은 천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주는 상관의 자수(子水)가 자진합수(子辰合水)로 인하여 너무 과다하여 구설수와 시기비방이 극대화된다. 그와 참모진의 구설수와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관이 과다하면 상관을 제어하는 ⑥미토(未土)와 ③진토(辰土)에 뿌리를 둔 ⑥무토(戌土) 편인(偏印)이 수의 상관격을 조절하는 상관패인격(傷官配印格)의 상신(相神)이 된다.

기세의 강약을 보는 역부론으로는 수의 상관이 과다한 중화된 사주이다. 다만 조후상목화의 기운이 보완 되어야 한다. 그의 향후 천운은 2021년은 신축년운으로 겁재운과 축토의 정인의 천을귀인운으로 세력을 모으고 하늘이 돕는 운이다. 그러나 임춘전까지는 무수한 시비와 구설수 및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2022년 1월에서 2월초사이에 안철수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적이다. 내년 2022년 임년(壬寅)임인월의 선거기간은 그의 천운이 육일승천하는 운이다. 그의 대선 기간은 천운이 도와서 예상보다 더 좋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를 굳건하게 정립할 가능성이 높다.

| 사주 | 일주 | 월주 | 년주 |
|------------|------------|-------------|------------|
| ①계수(癸水) 상관 | ①경금(庚金) 일주 | ⑥무토(戌土) 편인 | ⑤경금(庚金) 비견 |
| ⑥미토(未土) 정인 | ③진토(辰土) 편인 | ②자수(子水) 상관격 | ④자수(子水) 상관 |
| ②정을기(丁乙) | 과감살 | | |
| 천을귀인(天乙貴人) | | | 지장간 |

(13.7:30.5)cm

제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의 천운

윤석열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의 홍준표 후보를 따돌리고 제 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적폐청산 칼잡이’에서 ‘조국 수사’와 ‘추·윤 갈등’ 사태로 반 문재인 세력의 구심점으로 정치 경험 없이 최단 기간 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또한 전과 4범의 이재명 후보를 잡을 검사출신 대통령이 될지 관전 포인트이다.

윤 후보가 국민들에게 회자된 사건은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이다.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검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항명 파동’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후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2019년 7월 16일 대한민국의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2021년 3월 4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조국사태’와 ‘추·윤 갈등’ 사태로 문재인정부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의 명(命)과 운(運)을 가지고 향후 천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송대(960~1270)에 서자평에 의해서 탄생한 자평명리학(子平明理學)은 음양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의 원리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의 십성(十星)이론과 합형충과해(合刑沖破害)의 원리를 기반으로 간명한다. 또한 월지와 일간을 기준으로 간명하는 격국(格局)이론, ①일간과 ②생

월의 월지를 기준으로 사주전체의 기세를 분석하는 기세론적인 관점인 억부(抑扶)이론이 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생월의 절기와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의 한냉조습(寒冷燥濕)을 조절하는 조후이론의 삼대간법을 중심으로 간명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으로 명(命)의 희기를 판정하고 사주의 균형을 잡는 중화(中和)이론에 의해서 사주의 균형추와 같은 용신(用神)과 희신(喜神)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대운과 세운 및 월운등을 분석하는 미래예측학이다. 일반적으로 자평명리학의 해석법이 어렵다 보니 각종 12지신과 신살론과 12운성으로만 보는 명리학은 정통자평명리학에서 멀어지고 천운을 보는 것이 한계가 너무 많다.

먼저 타고난 명의 주변환경적인 변화와 삶의 지향점을 보는 10년마다 전개되는 대운(大運)은 주로 한냉조습의 조절을 중심으로 일간의 강약을 참조하는 조후(調候)이론을 우선 적용한다.

현재 그의 천운인 대운은 2007년 이후부터 10년간은 계사(癸巳)대운의 상관운과 편관운으로 파란이 많고 자리변동수가 강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26일 이후부터 10년간은 갑오대운의 편재운과 정관대운으로 진입하였다. 즉 그의 현실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오화(午火)의 조후가 등장하니 천운이 도운다.

한편 격국이론에 의하면 그의 격국은 ⑦계수(癸水)가 천간에 나타난 투출한 금수상관격(金水傷官格)이다. 금수상관격은 다른 상관격과 다르게 금수상관희견관(金水傷官喜見官)이라 추위를 녹이는 조후가 시급하여 정화(丁

火)와 오화(午火) 및 병화(丙火)와 사화(巳火)의 관살(官殺)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윤후보의 천운은 갑오대운이 매우 좋은 천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주는 상관의 자수(子水)가 자진합수(子辰合水)로 인하여 너무 과다하여 구설수와 시기비방이 극대화된다. 그와 참모진의 구설수와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관이 과다하면 상관을 제어하는 ⑧미토(未土)와 ③진토(辰土)에 뿌리를 둔 ⑥무토(戌土)편인(偏印)이 수의 상관격을 조절하는 상관패인격(傷官佩印格)의 상신(相神)이 된다.

기세의 강약을 보는 역부론으로는 수의 상관이 과다한 중화된 사주이다. 다만 조후상 목화의 기운이 보완 되어야 한다. 그의 향후 천

운은 2021년은 신축년운으로 겁재운과 축토의 정인의 천을귀인운으로 세력을 모으고 하늘이 돕는 운이다. 그러나 입춘 전까지는 무수한 시비와 구설수 및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2022년1월에서 2월초사이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적이다. 내년 2022년 임인년(壬寅年)임인월의 선거기간은 그의 천운이 육일 승천하는 운이다. 그의 대선 기간은 천운이 도와서 예상보다 더 좋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를 굳건하게 정립할 가능성이 높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21 |
| 언론사 |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
| 심의대상 | 중앙일보 12월 1일자 35면 「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제하의 광고 |
| 주 문 |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후보자가 배임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것처럼 독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p> <p>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게재 등을 금지하는 광고로서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The JoongAng
2021년 12월 1일
35면 (광고)

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최소 3,318억원 배임의 공범”

대장동 비리「국민특검」, 11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장 전달! 화천대유 등이 출자액의 2천배가 넘는 8,571억원의 총수의 갖도록 배임!
“검찰이 국민의 이런 노력에도 전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직무유기죄’의 책임 져야 할 것” 경고 첨부!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민재판부가 구성될 것이며, 국민적 심판까지 피할 수 없을 것!”

| 대장동 국민특검 ‘국민 기소장’ | 공소사실 (범죄사실 요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신자 : 국민특검 ○ 수신자 : 국민재판부 ○ 피고인 : 이재명 ○ 죄 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적용법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366조, 제365조 제2항, 제303조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11월 30일 부동산비리 국민특검 (상임대표 고영주 전 남부지검 검사장, 공동대표 손기호)</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와 책임이 있다.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반주주(50%+1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독권자이며 최종 결정자이자 최고 책임자였다. 「대장동 개발계획」 성남의 물에 대한 출자 승인 등 최소한 12개 이상의 공문서 직접 관여하면서 사명을 불태웠다. 그 과정에서 ‘성남의 물’이란 민간 합작 시행사로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위해 가계 회고 임대주택 비율을 국토부 지침에 반하여 6.7%로 대폭 낮춰유량을 벌이 성인이 토지 강제수용의 정당성을 훼손하였으며, 용역받은 당초 계획보다 높은 분양 가구를 늘린으로써 막대한 이익이 나도록 하여 화천대유, 천호동원 등 민간 출자사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초과이익 배당과 환수를 포기하는 임무 위해 행위를 하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불균여 토지를 수용하여 비싸게 매각해도록 해 있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화천대유 등 민간인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 가도록 하기 위해 성남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유동규)에 대해 “이익을 고장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출자자분이 7%, 305원인원에 불과한 화천대유 민간 출자자들이 배당금 등 총수익이 2천배가 넘는 8,571억원을 갖도록 한 반면, 출자 자본의 절반 25억원을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시의 공사가 큰 손해가 나도록 했다. 피고인은 공사의 중요자형사 및 사업형사로서 배임 또는 배임하는 방법으로 위 유동규 등과 공모하여, 성남시와 공사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의 임무 위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제3자의 이익 취득 피고인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민배, 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대사업장 부차사업파트장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김민배의 요청에 따라 금융사 주도 컨소시엄으로 된 ‘성남의 물’ 사업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

‘문재인 중세좌파 정권 축적’

당첨 기입신청 : 02-717-1948,
010-3620-5142(문자)

자유민주당

대표 : 고영주 변호사

이 광고는 후원금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성원에 관계없이 국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홍보전화 : 신원호 100-034-948599 자유민주당중앙당홍보팀

(28.2-15) Kcm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22 |
| 언론사 | 주식회사 매일신문사(매일신문) |
| 심의대상 | 매일신문 12월 3일자 1면 「이준석 '잠수' 탄 사이 李 35.5% > 尹 34.6%」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 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 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역전당했다...수치로 드러난 국힘 위기

이준석 '잠수' 탄 사이 李 35.5% > 尹 34.6%

(이재명)

(윤석열)

내분 장기화에尹 지지율 하락
해법도 중재자도 찾기 힘들어
국면 깊어질수록 보수층 환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패싱 논란 끝에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업무를 보이콧하는 조유의 돌발 행동을 벌이는 등 국민의힘이 본선 시작부터 '집안싸움'에 골몰하자 정권교체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4·5면

게다가 2일 발표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든크로스(역전)를 이룬 결과마저 나왔다.

채널A가 여론조사회사 리서치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35.5%가 이 후보를 선택했다. 윤 후보는 34.6%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전례 없는 내분 양상을 장기간 보이면서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회사의 분석이다.

하지만 해법도, 중재자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이날도 윤 후보 측과 이 대표 측이 가시 돌친 말로 상대를 자극했다.

장예찬 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번 한 번만 형의 정치에서 주인공 자리를 후보에게 양보할 수 없느냐"며 "지금처럼 취중 페이스북으로 폭탄 발언을 하고, 갑자기 침거에서 부산-순천을 오가는 행보를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제1야당 대표다운 행동이 아니다"고 했다.



말문 연李大표

尹 후보 선출된 이후로 저는 당무를 한 적 없어

'윤핵관'의 모욕적 발언 지금 상황 악화시킨 것

이준석 대표는 2일 윤 후보가 자신을 사실상 '패싱'했다며 강력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당무 거부냐 얘기하시는데,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고 자심 발언을 했다.

이어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제 기억에 딱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당무 공백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의 출신(말)의 익명 인터넷 댓글 사태의 핵심 중 하나로 짚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발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그분은 심지어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본인 것 같다. 그분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데, 후보라고 통제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명은 당 대표이고, 다른 쪽은 당의 대선 후보인데 누구 한 명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면이 깊어질수록 보수 야권 지지층마저 정권교체 의지에 의문을 품고, 심지어 환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기자 pyoya@maeil.com

(11.6·31.4)cm



이준석 '잠수' 탄 사이 추 35.5% > 尹 34.6%

내분 장기화에 尹 지지율 하락
해법도 중재자도 찾기 힘들어
국면 길어질수록 보수층 환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패싱 논란 끝에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업무를 '보이콧' 하는 초유의 돌발 행동을 벌이는 등 국민의힘이 본선 시작부터 '집안싸움'에 골몰하자 정권교체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2일 발표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든크로스(역전)를 이룬 결과마저 나왔다.

채널A가 여론조사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며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35.5%가 이 후보를 선택했다. 윤 후보는 34.6%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전례 없는 내분 양상을 장기간 보이면서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회사의 분석이다.

하지만 해법도, 중재자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이날도 윤 후보 측과 이 대표 측이 가시돋친 말로 상대를 자극했다.

장예찬 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는 사회관계

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번 한 번만 형의 정치에서 주인공 자리를 후보에게 양보할 수 없느냐”며 “지금처럼 추중 페이스북으로 폭탄 발언을 하고, 갑자기 칩거에서 부산순천을 오가는 행보를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제1야당 대표다운 행동이 아니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2일 윤 후보가 자신을 사실상 '패싱'했다며 강력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당무 거부냐 얘기하시는데,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고 자식 발언을 했다.

이어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제 기억에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당무 공백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의 익명 인터뷰를 사태의 핵심 중 하나로 짚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발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그분은 심지어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분인 것 같다. 그분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데, 후보라고 통제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명은 당 대표이고, 다른 쪽은 당의 대선 후보인데 누구 한 명 손을 들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국면이 길어질수록 보수 야권 지지층마저 정권교체 의지에 의문을 품고, 심지어 환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23 |
| 언론사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서울신문) |
| 심의대상 | 서울신문 12월 2일자 4면 「이재명 35.5% vs 윤석열 34.6%… 李,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서울신문

2021년 12월 02일
04면 (정치)

이재명 35.5% vs 윤석열 34.6%… 李,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尹 지지율 하락
칸타코리아 조사선 尹 35.6%, 李 29.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널A·리서치앤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5.5%, 윤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4.6%였다. 비록 오차범위 내 박

빙이긴 하지만, 0.9% 포인트 차이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룬 것이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6.0%), 심상정 정의당 후보(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1.6%) 순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렸으며,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조선일보·칸타코리아가 이날 발표한 조사(지난달 29~30일, 전국 유권자 1013명)에서는 윤 후보가 35.6%로 이 후보(2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심 후보 4.2%, 안 후보 3.2% 순이었다. 해당 조사에서 윤 후보는 60세 이상과 20대 이하 젊은층에서, 이 후보는 40대에서 앞섰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13.7×9.8)cm



이재명 35.5%vs윤석열 34.6%...

李,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리서치앤리서치 조사...尹 지지율 하락
칸타코리아 조사선尹 35.6%,李29.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널A·리서치앤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5.5%, 윤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4.6%였다. 비록 오차범위 내 박빙이긴 하지만, 0.9% 포인트 차이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끝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룬 것이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6.0%), 심상정 정의당 후보(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1.6%) 순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렸으며,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조선일보·칸타코리아가 이날 발표한 조사(지난달 29~30일, 전국 유권자 1013명)에서는 윤 후보가 35.6%로 이 후보(2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심 후보 4.2%, 안 후보 3.2% 순이었다. 해당 조사에서 윤 후보는 60세 이상과 20대 이하 젊은층에서, 이 후보는 40대에서 앞섰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24 |
| 언론사 | 주식회사 세계일보(세계일보) |
| 심의대상 | 세계일보 12월 2일자 4면 「尹 컨벤션 효과 다했나… 李, 지지율 첫 역전」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 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 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계일보

2021년 12월 02일
04면 (정치)

尹 컨벤션 효과 다했나… 李, 지지율 첫 역전

李 35.5%·尹 34.6% 오차범위 내 접전
안철수 6% 심상정 4.9% 김동연 1.6%

이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1일 발표됐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 9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가 35.5%, 윤 후보가 34.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의 지지를 받았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두 후보의 격차는 0.9%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초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최근 대선 100일을 앞둔 조사까지도 이 후보에 앞서왔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와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악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일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와 국토보유세 철회 시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등 정책 노선 수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3.7·8.9)cm

<세계일보 2021년 12월 2일자 4면>



尹 컨벤션 효과 다했나... 李, 지지율 첫 역전

李 35.5% · 尹 34.6% 오차범위 내 접전
안철수 6% 심상정 4.9% 김동연 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1일 발표됐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 9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가 35.5%, 윤 후보가 34.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의 지지를 받았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두 후보의 격차는 0.9%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초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최근 대선 100일을 앞둔 조사까지도 이 후보에 앞서왔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와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악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일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와 국토보유세 철회 시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등 정책 노선 수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25 |
|------|--|
| 언론사 |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 |
| 심의대상 | 한국경제 12월 2일자 6면 「李 35.5% vs 尹 34.6% 지지율 첫 ‘골든크로스」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李 35.5% vs 尹 34.6%

지지율 첫 '골든크로스'

채널A, 대선 D-100 여론조사

이재명, 오차범위 내 尹 앞질러
윤석열, 당대표 패싱 등 악재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자 구도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정치권에선 줄곧 열세였던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추월하는 '골든크로스'가 실현될지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내년 3월 9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5.5%가 이 후보를 택했다.

윤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4.6%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0.9%포인트)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내년 대선 100일 즈음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윤 후보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컨벤션 효과'를 등에 업고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한때 오차

범위 밖으로 벌렸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에게 열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가 야당이 주장한 '대장동 특검'을 전격 수용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등 공약에 대해 유연한 방침을 내비치면서 중도층 표심이 이 후보 쪽으로 조금씩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두고 수주째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도 '패싱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20대 중 22.1%가 이 후보를, 14.6%가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30대에서는 이 후보가 35.7%, 윤 후보는 28.2%의 지지를 얻었다.

40대에선 이 후보(57.3%)와 윤 후보(19.6%)간 격차가 세 배 가까이 벌어졌다. 다만 50대와 60대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앞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9%,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의 지지를 받았다.

오형주 기자
(11.4·16.7)cm

李 35.5% vs 尹 34.6% 지지율 첫 '골든크로스'

채널A, 대선 D-100 여론조사
이재명, 오차범위 내 尹 앞질러
윤석열, 당대표 패싱 등 악재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자구도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정치권에선 줄곧 열세였던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추월하는 '골든크로스'가 실현될지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내년 3월 9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5.5%가 이 후보를 택했다.

윤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4.6%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가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0.9%포인트)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내년 대선 100일 즈음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윤 후보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컨벤션 효과'를 등에 업고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한때 오차범위 밖으로 벌렸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줄어들며 흐름이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에게 열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가 야당이 주장한 '대장동 특검'을 전격 수용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등 공약에 대해 유연한 방침을 내비치면서 중도층 표심이 이 후보 쪽으로 조금씩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두고 수주째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도 '패싱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20대 중 22.1%가 이 후보를, 14.6%가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30대에서는 이 후보가 35.7%, 윤 후보는 28.2%의 지지를 얻었다.

40대에선 이 후보(57.3%)와 윤 후보(19.6%) 간 격차가 세 배 가까이 벌어졌다. 다만 50대와 60대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앞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9%,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의 지지를 받았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26 |
| 언론사 | 주식회사 헤럴드(헤럴드경제) |
| 심의대상 | 헤럴드경제 12월 2일자 5면 「 ‘李,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까지...尹, 돌파구 있나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헤럴드경제

2021년 12월 02일
05면 (정치)

‘李,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까지...尹, 돌파구 있나

0.9%p차 열세...대진표 완성 이후 처음

李 대표와 갈등 여파...컨벤션 효과 퇴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긴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소폭 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후 윤 후보가 이 후보에 열세를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선대위 갈등을 빠른 시간 내 수습하지 못하면 윤 후보의 하락세가 지속하며 본격적인 ‘역전(골든크로스)’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달 27~29일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묻은 결과 이 후보는 35.5%, 윤 후보는 34.6%를 각각 기록했다. 두 사람 사이 격차는 불과 0.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95%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후보 선출 직후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 격차가 15%포인트 가량 났던 점을 고려하면 ‘컨벤

션효과’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보면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뒤진 조사는 아직 1건이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역전 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한 번 뒤집어질 것으로 보고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왔다”며 “골든크로스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지지탄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 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인선 갈등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패싱 논란’ 끝에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 내분으로 인해 역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윤희 기자
(14.6*11.1)cm



‘李,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까지… 尹, 돌파구 있나

0.9%P차 열세…대진표 완성 이후 처음 李 대표와 갈등 여파…컨벤션 효과 퇴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긴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소폭 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후 윤 후보가 이 후보에 열세를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선대위 갈등을 빠른 시간 내 수습하지 못하면 윤 후보의 하락세가 지속하며 본격적인 ‘역전(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달 27~29일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물은 결과 이 후보는 35.5%, 윤 후보는 34.6%를 각각 기록했다. 두 사람 사이 격차는 불과 0.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후보 선

출 직후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 격차가 15%포인트 가량 낮던 점을 고려하면 ‘컨벤션효과’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보면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뒤진 조사는) 아직 1건이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역전 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한 번 뒤집어질 것으로 보고, 뒤집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왔다”며 “골든크로스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지중지란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인선 갈등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패싱 논란’ 끝에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 내분으로 인해 역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는 반응도 나온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28 |
| 언론사 | 주식회사 더뉴스그룹(UPI뉴스통신) |
| 심의대상 | UPI뉴스통신 12월 16일자 정치면 「'골든크로스' 이재명 35.4% · 윤석열 33.3%」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UPI뉴스 > 정치

'골든크로스' 이재명 35.4%·윤석열 33.3%

■안재성 / 기사승인 : 2021-12-16 19:40: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 [UPI뉴스 자료사진]

SBS의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5.4%로 윤석열 후보(33.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그 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3.5%,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3.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7~28일 SBS·넥스트리서치 조사 때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2.7%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1.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당시 윤 후보의 지지율은 34.4%, 이 후보는 32.7%였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라는 물음에는, '영향을 준다'는 응답자가 60.4%를 기록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38.1%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87%, 유선 13%)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upinews.kr

<UPI뉴스 2021년 12월 16일자 정치면>



‘골든크로스’ 이재명 35.4% · 윤석열 3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SBS의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5.4%로 윤석열 후보(33.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그 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3.5%,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3.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7~28일 SBS · 넥스트리서치 조사 때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2.7%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1.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당시 윤 후보의 지지율은 34.4%, 이 후보는 32.7%였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라는 물음에는, ‘영향을 준다’는 응답자가 60.4%를 기록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38.1%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87%, 유선 13%)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29 |
| 언론사 |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강원도민일보) |
| 심의대상 | 강원도민일보 12월 10일자 8면 「대선 지지율 이재명 38%, 윤석열 36% ‘역전’」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1년 12월 10일
08면 (종합)

대선 지지율 이재명 38%·윤석열 36% ‘역전’

이 후보 5%·윤 후보 2% 각각 상승
한 달여 만 순위 역전... 역대 처음

다자대결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

부터 8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7.2*6.7cm)

<강원도민일보 2021년 12월 10일자 8면>



대선 지지율 이재명 38% · 윤석열 36% ‘역전’

이 후보 5% · 윤 후보 2% 각각 상승
한 달여 만 순위 역전… 역대 처음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부호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30 |
| 언론사 | 주식회사 광주매스컴(광주매일신문) |
| 심의대상 | 광주매일신문 12월 10일자 4면 「“ 李 38% 尹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李 38% 尹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당선 전망은 각각 39% 동률 기록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31 |
|------|---|
| 언론사 | 주식회사 대구일보사(대구일보) |
| 심의대상 | 대구일보 12월 10일자 3면 「이재명 38%-윤석열 36% 4자대결 지지율 '첫역전」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대구일보

2021년 12월 10일
03면 (정치)이재명 38%-윤석열 36%
4자 대결 지지율 '첫 역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가 38%, 윤 후보가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

연령·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30대에서 16% 포인트(29%→45%), 부산·울산·경남에서 12% 포인트(23%→35%)로 크게 올랐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6%포인트(35%→41%)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해림 기자 hlh@idaegu.com

(5.8*16.7)cm



이재명 38%-윤석열 36% 4자 대결 지지율 ‘첫 역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가 38%, 윤 후보가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

연령·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30대에서 16% 포인트(29%→45%), 부산·울산·경남에서 12% 포인트(23%→35%)로 크게 올랐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6% 포인트(35%→41%)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32 |
| 언론사 |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아시아뉴스통신) |
| 심의대상 | 아시아뉴스통신 12월 10일자 정치면 「‘한달 만에 역전’ 이재명 38%, 윤석열 36%」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한달 만에 역전' 이재명 38%, 윤석열 36%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기자) 송고일시 : 2021-12-10 07:01



'한달 만에 역전' 이재명 38%, 윤석열 36%/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38%, 윤 후보의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를 얻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조사 결과와 개요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oonjahee@naver.com

<아시아뉴스통신 2021년 12월 10일자 정치면>

📰 보도내용

'한달 만에 역전' 이재명 38%, 윤석열 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38%, 윤 후보의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를 얻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조사 결과와 개요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33 |
| 언론사 | 주식회사 연합뉴스(연합뉴스) |
| 심의대상 | 연합뉴스 12월 9일자 정치면 「“이재명 38% 윤석열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이재명 38% 윤석열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송고시간 | 2021-12-09 12: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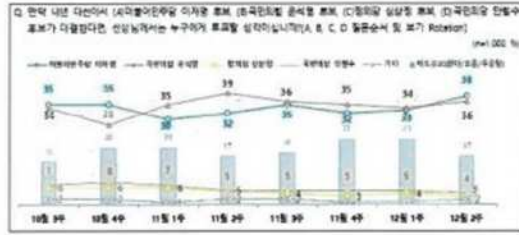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연합뉴스 2021년 12월 9일자 정치면>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 대선 후보 | 지지율 (%) | 사학수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국민의당 | 그 외 | 없다 | 표준 |
|-------|----------|--------|--------|------|-----|------|-----|----|----|
| 전체 | (1000) | 38 | 36 | 3 | 4 | 2 | 10 | 7 | |
| 연령별 | 13~29세 | (174) | 25 | 25 | 5 | 5 | 1 | 25 | 10 |
| | 30~39세 | (152) | 45 | 28 | 4 | 6 | 2 | 15 | 7 |
| | 40~49세 | (132) | 54 | 18 | 3 | 8 | 7 | 7 | 2 |
| | 50~59세 | (94) | 49 | 39 | 3 | 1 | 2 | 6 | 1 |
| | 60~69세 | (64) | 32 | 54 | 1 | 1 | 1 | 4 | 7 |
| 지역별 | 서울 | (1397) | 33 | 38 | 4 | 5 | 2 | 5 | 7 |
| | 인천/경기 | (214) | 41 | 35 | 5 | 3 | 2 | 10 | 5 |
| | 대전/세종/충청 | (100) | 33 | 38 | 2 | 4 | 2 | 15 | 5 |
| | 충청/전라 | (99) | 43 | 11 | 4 | 3 | 1 | 8 | 12 |
| | 대구/경북 | (97) | 15 | 58 | 3 | 0 | 2 | 15 | 6 |
| 이념 | 자유 | (152) | 33 | 37 | 1 | 4 | 3 | 12 | 5 |
| | 진보 | (48) | 40 | 33 | 7 | 2 | 5 | 2 | 12 |
| | 중도 | (215) | 64 | 11 | 8 | 4 | 3 | 8 | 4 |
| 성별 | 남성 | (223) | 34 | 35 | 5 | 4 | 2 | 12 | 8 |
| | 여성 | (282) | 15 | 45 | 0 | 2 | 2 | 12 | 4 |
| | 모름/무응답 | (37) | 24 | 29 | 0 | 6 | 0 | 18 | 23 |
| 지지 | 더불어민주당 | (544) | 64 | 3 | 3 | 1 | 2 | 4 | 4 |
| | 국민의힘 | (343) | 3 | 87 | 0 | 1 | 0 | 5 | 4 |
| | 정의당 | (194) | 25 | 18 | 2 | 7 | 4 | 33 | 18 |
| 합계 | 정의당 | (176) | 39 | 40 | 3 | 3 | 2 | 7 | 6 |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sk@yna.co.kr



“이재명 38% 윤석열 36%… 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 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34

언론사

주식회사 전국매일신문(전국매일신문)

심의대상

전국매일신문 12월 10일자 4면 「**李 38% · 尹 36%…李,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울러 여론조사보도 관련 심의기준을 재차 위반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가 상향될 수 있음을 유념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매일

2021년 12월 10일
(4면 (정치))

李 38%·尹 36%…李,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당선 전망 李·尹 39% 동률

다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표조사(NBS) 4차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0%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선거구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현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11.8*12.8)cm



李 38% · 尹 36%… 李,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당선 전망 李 · 尹 39% 동률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 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의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35 |
| 언론사 | 주식회사 덕천(전남매일) |
| 심의대상 | 전남매일 12월 10일자 5면 「이재명 38%·윤석열 36%…첫 역전」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남매일

2021년 12월 10일
05면 (정치)

이재명 38%·윤석열 36%…첫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11.4*6.6)cm

<전남매일 2021년 12월 10일자 5면>

이재명 38% · 윤석열 36%...첫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36 |
| 언론사 |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전북중앙신문) |
| 심의대상 | 전북중앙신문 12월 10일자 2면 「이재명 38%-윤석열 36%」… 누가尹 앞질러」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족중앙신문

한국리서처 등 저지율 여론조사 한달만에 역전 당선 전망 동ભ

‘이재명 38%-윤석열 36%’… 누가尹 앞질러

2021년 12월 10일
14면 (대면)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엘리펀트 퍼블리싱·케이스퍼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처가 지난 6일부터 8일 한국 1천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표조사(NBS) 4차 가산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중반 주 이준석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를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이상경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밝히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득표로 나란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결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민 안중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8%,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는 응답(39%)이 국민의힘(2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33.564.7324m

〈전북중앙신문 2021년 12월 10일자 2면〉



‘이재명 38%-윤석열 36%’ …

李가尹 앞질러

한국리서치등 지지율 여론조사 한 달 만에 역전 당선 전망 등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37 |
| 언론사 | 주식회사 천지일보(천지일보) |
| 심의대상 | 천지일보 12월 10일자 1면 「이재명, 6주 만에 지지율 역전」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천지일보

2021년 12월 10일
01면 (종합)

이재명, 6주 만에 지지율 역전

과오 오차 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6주 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12월 첫째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지난주 대비 2%p 떨어진 반면, 이 후보는 5%p 올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p로 좁혀졌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셈이다.

두 후보의 뒤를 이어 국민의당 안철

수 후보 4%, 정의당 심상정 후보 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 응답자 비율은 17%였다.

대선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고른 응답자는 각각 39%를 차지해 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최종 응답률은 28.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대경 기자
(10.8×10.5)cm

이재명, 6주 만에 지지율 역전

尹과 오차 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6주 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12월 첫째주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지난주 대비 2%p 떨어진 반면, 이 후보는 5%p 올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p로 좁혀졌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셈이다.

두 후보의 뒤를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 정의당 심상정 후보 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 응답자 비율은 17%였다.

대선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고른 응답자는 각각 39%를 차지해 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최종 응답률은 28.3%,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38 |
| 언론사 | 주식회사 광주일보사(광주일보) |
| 심의대상 | 광주일보 12월 10일자 3면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8%·윤석열 36%」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부제와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 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 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光州日報

2021년 12월 10일
03면 (종합)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8%·윤석열 36%

4개기관 조사... 한달만에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가 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13.5*11.3)cm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8% · 윤석열 36%

4개기관 조사…한달만에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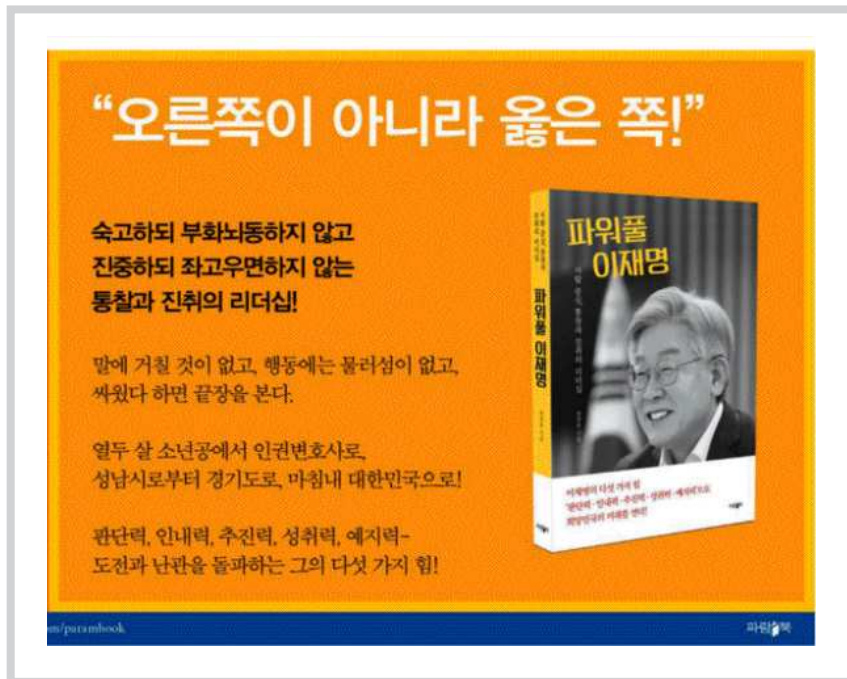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43 |
| 언론사 | 주식회사 한국뉴미디어(한국스포츠경제) |
| 심의대상 | 한국스포츠경제 12월 23일자 1면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및 1월 3일자 10면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제하의 광고 |
| 주문 |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국스포츠경제 2021년 12월 23일자 1면, 2022년 1월 3일자 10면〉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45 |
| 언론사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주간동아) |
| 심의대상 | 주간동아 12월 27일자 4-5면 「尹, 여론조사 6승 3패… 무능 이미지 고착 시 데드크로스」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조사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제여건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합산하여 후보자간 승패를 언급하였고, 인용한 9건의 여론조사 결과 모두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주간동아 2021년 12월 27일자 4-5면>



尹, 여론조사 6승 3패... 무능 이미지 고착 시 데드크로스

9개 조사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尹 하락세 가팔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좁혀진 국면이다.”

배종찬 인사이드케이연구소 소장의 한 줄 평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가 다수지만 이 후보 역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를 달성하며 바짝 따라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까지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유권자,尹 능력 의구심 갖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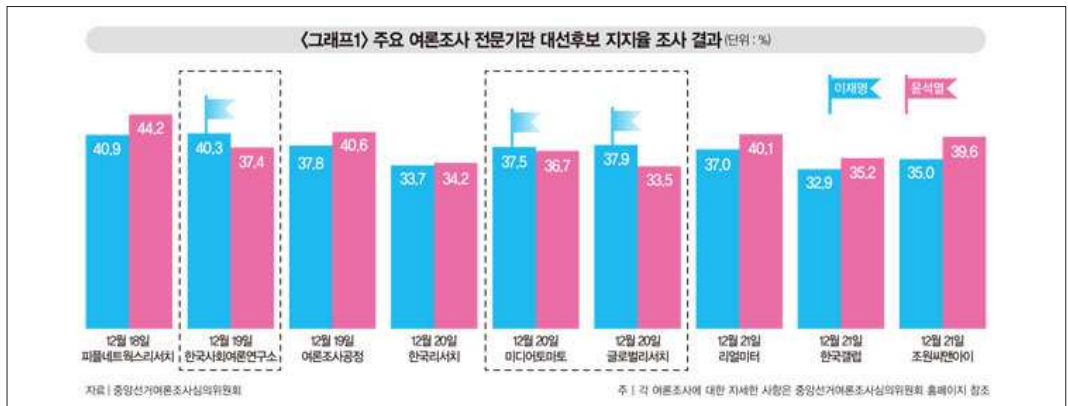
12월 18일부터 나흘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 등록된 9개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를 분석한 결과 윤 후보는 6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앞섰다(그래프1 참조). 두 후보는 9개 여론조사 모두에서 오차범위 내 공방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과반승’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9개 여론조사 모두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표 참조). 이 후보의 경우 7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관측됐다. 이 후보의 ‘아들 도박·성매매 의혹’과 윤 후보의 ‘배우자 허위 이력 의혹’이 부딪치면서 유권자의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의 하락세가 이 후보보다 가파르면서 곳곳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후보가 1위 자리를 탈환했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여야 대진표가 정해진 이래 처음으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질렀다.

김대현 정치평론가는 “대중이 보기에 향후 대통령 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의 문제와 자녀의 도박 문제는 무게감이 달랐다. 특히 윤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이나 운영 등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이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 다툼 역시 악재로 꼽힌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일부 언론인에게 이준석 당대표를 비방하는 영상이 첨부된 문자메



시지를 보낸 사실이 12월 20일 밝혀지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선대위 공보단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두 사람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대표가 12월 22일 선대위 내 모든 직을 내려왔고, 조 의원 역시 이후 공보단장직에서 물러났다.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김종인 총괄선대위 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2월 22일 “처음 선대위를 만들 때 거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는 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갈지는 앞으로 보면 알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대위 개편을 시사했다.

배 소장은 “윤 후보의 경우 이 대표와 관계에서 불화를 보인 가운데 정책 부문에서도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윤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교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반면 이 후보는 ‘행정 경쟁력’이 강점이다. 향후 윤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을 얼마나 부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먹고사는 문제 점차 중시될 듯”

이 후보가 민생 문제에 강세를 보이면서 향후 대선구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2월 12일부터 엿새간 전국 유권자 3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대응 적합 후보’ ‘코로나19 팬데믹 민생 대처 적합 후보’ 항목에서 모두 윤 후보를 앞섰다(그래프2 참조). 지지율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p.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전 여론조사 대비 대선후보 지지율 변동

| 여론조사기관 | 등록일 | 이재명 | 윤석열 |
|-----------|---------|---------|---------|
| 피플네트웍스리서치 | 12월 18일 | 3.4%p ↓ | 3.7%p ↓ |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12월 19일 | 0.3%p ↓ | 4.6%p ↓ |
| 여론조사공정 | 12월 19일 | 0.7%p ↓ | 1.7%p ↓ |
| 한국리서치 | 12월 20일 | 1.8%p ↓ | 1.3%p ↓ |
| 미디어토마토 | 12월 20일 | 1.3%p ↓ | 2.2%p ↓ |
| 글로벌리서치 | 12월 20일 | 7.1%p ↓ | 3.9%p ↓ |
| 리얼미터 | 12월 21일 | 0.1%p ↓ | 5.2%p ↓ |
| 한국갤럽 | 12월 21일 | 3.4%p ↓ | 1.2%p ↓ |
| 조원씨앤아이 | 12월 21일 | 3.3%p ↓ | 3.0%p ↓ |

자료 | 각 여론조사 전문기관



민생 문제 대응 기대가 이 후보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김 평론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권자들이 도덕적 가치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중시할 것이다. 윤 후보의 무능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향후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김종인 위원장 등 한 사람에게 권한을 일임하고 적극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약속했다. 디지털산업에 135조 원을 투자해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12월 6일 “2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민생 문제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46 |
| 언론사 | 대한미디어 주식회사(The대한일보) |
| 심의대상 | The대한일보 12월 21일자 3면 「이재명 40.3% 윤석열 37.4%… 李, 2.9%p 차로 역전」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일보 2021년 12월 21일

이재명 40.3% 윤석열 37.4%… 李, 2.9%p 차로 역전

부인·아들 논란에 윤 4.6%p, 이 0.3%p 동반 하락
이재명, 윤석열에 오차범위 내 격차 2.9%p로 앞서
후보 선택에 배우자 영향… 있다 68.3% 없다 29.3%
이·윤 동시 특검 해야 52.2%… 대장동 특검만 24.8%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 여론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서 이 후보가 선두를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Q)가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0.8%p포인트 하락한 40.3%, 윤석열 후보는 4.6%p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다.

두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0%, 심상정 4.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3.7%, 부동층(지지 후보 없음-응답률)은 8.4%였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혐위 수상-전시정변 및 이회 진안으로,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으로 공위 가족 문제가 불거졌으나 윤 후보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1.4%p포인트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2.9%p포인트 제차에 역전했다.

배우 정혜적으로 삼시각되는 이 조사에서 지난달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윤 후보를 앞섰다.

지난 3주간 추이를 보면 11월 29일 윤석열 41.8%·이재명 39.0%, 12월 6일 윤석열 41.2%·이재명 37.9%, 12월 13일 윤석열 42.0%·이재명 40.6%로 오차범위 내 초광역 양상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경찰권 남용 의혹 부당 도입에 대해 불응 결과, 두 건 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 ‘대장동 의혹만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34.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9%, 국민의힘 30.1%, 국민의당 8.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3.1%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3일 윤석열 42.0%·이재명 40.6%로 오차범위 내 초광역 양상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경찰권 남용 의혹 부당 도입에 대해 불응 결과, 두 건 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 ‘대장동 의혹만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34.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9%, 국민의힘 30.1%, 국민인 8.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3.1%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S-11E Top

〈The대한일보 2021년 12월 21일자 3면〉



이재명 40.3% 윤석열 37.4%... 李, 2.9%p차로 역전

부인·아들 논란에 윤 4.6%p,
이 0.3%p 동반 하락
이재명, 윤석열에 오차범위 내 격차
2.9%p로 앞서
후보 선택에 배우자 영향...
있다 68.3% 없다 29.3%
이·윤 동시 특검 해야 52.2%...
대장동 특검만 24.8%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서 이 후보가 선두를 탈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0.3%, 윤석열 후보는 4.6%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다.

두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6%, 심상정 4.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3.7%, 부동산(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은 8.4%였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전시경력 및 이력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으로 공히

가족 문제가 불거졌으나 윤 후보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1.4%포인트로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2.9%포인트로 제치며 역전했다.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지난달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윤 후보를 앞섰다.

지난 3주간 추이를 보면 11월 29일 윤석열 41.8%·이재명 39.0%, 12월6일 윤석열 41.2%·이재명 37.9%, 12월13일 윤석열 42.0%·이재명 40.6%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두 건 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 ‘대장동 의혹만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3%, 국민의힘 30.1%, 국민의당 8.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47 |
| 언론사 | 주식회사 에이치애프레스(호남신문) |
| 심의대상 | 호남신문 12월 21일자 2면 「이재명 40.3% 윤석열 37.4%…李, 2.9%p 차로 역전」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湖南新聞

2021년 12월 21일
(02면 <정치>)

이재명 40.3% 윤석열 37.4%…李, 2.9%p 차로 역전

부인·아들 논란에 윤 4.6%p, 이 0.3%p 동반 하락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서 이 후보가 선두를 탈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D)가 TBS 의뢰로 자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0.3%, 윤석열 후보는 4.6%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다.

두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6%, 심상정 4.2% 순으로 나타

났다. 기타 후보 3.7%, 부동층(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은 8.4%였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수상·전시경력 및 이력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으로 공히 가족 문제가 불거졌으나 윤 후보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1.4%포인트로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2.9%포인트로 제치며 역전했다.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지난달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윤 후보를 앞섰다.

지난 3주간 추이를 보면 11월29일 윤석열 41.8%·이재명 39.0%, 12월6일 윤석열 41.2%·이재명 37.9%, 12월13

일 윤석열 42.0%·이재명 40.6%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묻은 결과, ‘두 건 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 ‘대장동 의혹만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3%, 국민의힘 30.1%, 국민의당 8.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재환기자

(17.3415.0)cm



이재명 40.3% 윤석열 37.4%... 李, 2.9%p 차로 역전

부인·아들 논란에 윤 4.6%p, 이 0.3%p 동반 하락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서 이 후보가 선두를 탈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0.3%, 윤석열 후보는 4.6%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다.

두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6%, 심상정 4.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3.7%, 부동층(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은 8.4%였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전시경력 및 이력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으로 공히 가족 문제가 불거졌으나 윤 후보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1.4%포인트

트로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2.9%포인트로 제치며 역전했다.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지난달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윤 후보를 앞섰다.

지난 3주간 추이를 보면 11월29일 윤석열 41.8%·이재명 39.0%, 12월6일 윤석열 41.2%·이재명 37.9%, 12월13일 윤석열 42.0%·이재명 40.6%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두 건 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 ‘대장동 의혹만 특검 해야 한다’는 응답이 24.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3%, 국민의힘 30.1%, 국민의당 8.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48 |
|-------|--|
| 언론사 | 주식회사 뉴스토마토(뉴스토마토) |
| 심의대상 | 뉴스토마토 12월 21일자 1면 「이재명, 윤석열에 골든 크로스... 5자 가상대결서 첫 추월」 및 12월 21일자 4면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뉴스토마토

2021년 12월 21일
11면 (목요일)

이재명, 윤석열에 골든크로스 5자 가상대결서 첫 추월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양자대결은 오차범위내 접전 비호감도 윤석열 다시 1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달 5일 야야 대결표가 확정된 이후 이 후보의 첫 1위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격차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더 좁아졌다.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프로>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대선 5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꺾었다.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5.7%), 심상정 정의당 후보(5.1%), 김동원 새로운물결 후보(0.0%) 순이었다.

2주 전 대비 이 후보는 지지율이 38.8%에서 37.5%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도 38.9%에서 36.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비교적 더 크게 하락하면서 1, 2위 순위가 뒤바뀌었다. 두 사람의 지지도 동반하락은 최근 발견된 기록 논란에 따른 후유증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아들의 불법도발,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경리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대재발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한 반면 윤 후보는 여론 압박에 마지막에 사과했다.

이 후보는 2주 전에 비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모든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연령별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30대와 40대에서 이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를 눌렀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40대 지지율은 하락했음에도 54.8%로 과반을 넘겨 든든한 지지 기반임을 입증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압도했다. 20대와 50대에서는 두 후보가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경기·인천과 강원·제주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권영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후보에 우세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 후보의 추월에도 여전히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이재명 29.7% 대 윤석열 42.2%로, 이 후보는 격차와도 같은 TK(32.1%)와 PK(33.2%)보다 작은 지지를 획득했다. 대전·충청·세종에서도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대선 양자 가상대결은 이재명 42.5% 대 윤석열 43.3%로 나타났다. 2주 전 대비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다만, 사과에 대한 긍정적 논의를 야기한 윤 후보의 지지를 하락 쪽이 더 컸다. 이 후보는 지지율이 42.7%에서 42.5%로 0.2%포인트, 윤 후보는 44.7%에서 43.3%로 1.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좁혀졌다.

연령별로 보면 이 후보는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2030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40대·50대·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이 후보와는 반대로, 40대와 50대 지지율이 오히려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이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20대와 50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광주·전라에서만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강원·제주와 경기·인천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권영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서울, 대전·충청·세종에서 이 후보에 우위를 점했다. 이 후보는 서울 포석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동선정책 전환으로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1.3%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3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2주 전에 비해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1.1%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엇갈렸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7%포인트 차이로, 2주 전 조사(0.7%포인트)보다 벌어졌다.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2주 전과 비교해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40대에서는 비호감도가 팽창 뒤집고 50대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윤 후보의 비호감도는 40대와 50대에서는 낮아지고,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높아졌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에서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가 특히 서울에서 비호감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권영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이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윤 후보는 민주당 안팎인 광주·전라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에서는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았다.

경남 지지에서 민주당 30.7%, 국민의힘 32.7%로 나타났다. 국민의당(8.5%), 열린민주당(6.9%), 정의당(4.2%), 새모임물결(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2주 전 30.1%에서 30.7%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2.9%에서 32.7%로 0.2%포인트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2.8%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소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2주 전에 비해 30대와 40대 지지율이 상승했다.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30대와 40대, 국민의힘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50대의 경우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강원·제주와 경기·인천에서도 평균 지지율을 선취하며 국민의힘에 앞섰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서울과 대전·충청·세종에서도 민주당에 우위를 보였다.

한편 국민 34.7%가 이 후보의 강점으로 '실천력'을 꼽았다. 연령별,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살펴봐도 이 후보의 '실천력'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이어 8.7%는 대선공약 및 정책, 7.4%는 리더십을, 5.7%는 도덕성을, 5.0%는 소속정당을 선택했다. 없음 29.3%는 집계됐다. 30%에 가까운 '없다'는 부정적 응답은 이 후보의 속제로 남겨졌다.

윤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국민 16.1%가 '소속 정당'을 지목했다. 윤 후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다. 정권교체를 현실화할 유력 청담으로 국민의힘이 꼽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에게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2%는 실천력, 9.6%는 대선공약 및 정책, 8.1%는 리더십을, 7.4%는 도덕성을 선택했다. 도덕성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없다'는 부정적 응답은 36.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연선번호)를 활용한 무선 AB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지난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삼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설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절차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ce@stomato.com

▶ 관련기사 4면

(13/54 Toki)



이재명, 윤석열에 골든 크로스

5자 가상대결서 첫 추월

양자대결은 오차범위내 접전

비호감도 윤석열 다시 1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 달 5일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이 후보의 첫 1위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격차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더 줄어들었다.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대선 5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꺾었다.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5.7%), 심상정 정의당 후보(5.1%),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1.0%) 순이었다.

2주 전 대비 이 후보는 지지율이 38.8%에서 37.5%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도 38.9%에서 36.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비교적 더 크게 하락하면서 1, 2위 순위가 뒤바뀌었다. 두 사람의 지지도 동반하락은 최근 불거진 가족 논란에 따른 후유증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아들의 불법도박,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경력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대처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한 반면 윤 후보는 여론 압박에 마지못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2주 전에 비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모든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연령별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30대와 40대에서 이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를 눌렀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40대 지지율은 하락했음에도 54.8%로 과반을 넘겨 든든한 지지 기반임을 입증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압도했다. 20대와 50대에서는 두 후보가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경기·인천과 강원·제주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진영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후보에 우세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 후보의 추월에도 여전히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이재명 29.7% 대 윤석열 42.2%로, 이 후보는 적지와도 같은 TK(32.1%)와 PK(33.2%)보다 적은 지지를 획득했다. 대전·충청·세종에서도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대선 양자 가상대결은 이재명 42.5% 대 윤석열 43.3%로 나타났다. 2주 전 대비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다만, 사과에 대한 진정성 논란을 야기한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폭이 더 컸다. 이 후보는 지지율이 42.7%에서 42.5%로 0.2%포인트, 윤 후보는 44.7%에서

43.3%로 1.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좁혀졌다.

연령별로 보면 이 후보는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2030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40대·50대·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이 후보와는 반대로, 40대와 50대 지지율이 오르고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이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20대와 50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광주·전라에서만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강원·제주와 경기·인천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진영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서울, 대전·충청·세종에서 이 후보에 우위를 점했다. 이 후보는 서울 표심이 예상치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동산정책 전환으로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1.1%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3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2주 전에 비해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1.1%포인트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7%포인트 차이로, 2주 전 조사(1.7%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2주 전과 비교해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40대에서는 비호감도가 꺾충 뛰었고 50대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윤 후보

의 비호감도는 40대와 50대에서는 낮아지고,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높아졌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에서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가 특히 서울에서 비호감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이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았지만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윤 후보는 민주당 안방인 광주·전라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에서는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30.7%, 국민의힘 32.7%로 나타났다. 국민의당(8.5%), 열린민주당(6.9%), 정의당(4.2%), 새로운물결(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2주 전 30.1%에서 30.7%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2.9%에서 32.7%로 0.2%포인트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2.8%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소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2주 전에 비해 30대와 40대 지지율이 상승했다. 2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30대와 40대, 국민의힘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50대의 경우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강원·제주와 경기·인천에서도 평균 지

지율을 선회하며 국민의힘에 앞섰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서울과 대전·충청·세종에서도 민주당에 우위를 보였다.

한편 국민 34.7%가 이 후보의 강점으로 '실천력'을 지목했다. 연령별,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살펴봐도 이 후보의 '실천력'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이어 8.7%는 대선공약 및 정책을, 7.4%는 리더십을, 5.7%는 도덕성을, 5.0%는 소속정당을 선택했다. 없음 29.3%은 집계됐다. 30%에 가까운 '없다'는 부정적 응답은 이 후보의 숙제로 남겨졌다.

윤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국민 16.1%가 '소속정당'을 지목했다. 윤 후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다. 정권교체를 현실화할 유

력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꼽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에게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2%는 실천력을, 9.6%는 대선공약 및 정책을, 8.1%는 리더십을, 7.4%는 도덕성을 선택했다. 도덕성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없다'는 부정적 응답은 36.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4명, 응답률은 6.9%다. 지난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가족 논란에 지지율 동반하락
이, TK·PK서 30%대 선전
서울은 여전히 난공불락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로,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0.1%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가 이를 0.8%포인트 격차로 뒤집었다. 지난달 5일 여야 5자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 이 후보의 첫 1위다.

동원 새로운물결 후보(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2.9%,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8.6%와 2.5%였다. 2주 전 대비 이 후보는 지지율이 38.8%에서 37.5%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도 38.9%에서 36.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비교적 더 크게 하락하면서 1, 2위 순위가 뒤바뀌었다. 두 사람의 지지도 동반하락은 최근 불거진 가족 논란에 따른 후유증으로 해석했다. 이 후보는 이들의 불법도박,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경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2주 안에 비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40대 지지율이 39.3%에서 34.8%로 4.7%포인트 떨어졌다. 50대에서도 44.9%에서 39.2%로 5.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대의 경우

39.2%에서 43.8%로 4.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모든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30대 31.9%에서 29.3%로 2.6%포인트, 40대 25.3%에서 22.9%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30대 이재명 43.8% 대 윤석열 29.3%, 40대 이재명 54.8% 대 윤석열 22.9%로, 이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28.3% 대 윤석열 34.0%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도했다. 20대 이재명 27.4% 대 윤석열 27.3%, 50대 이재명 39.2% 대 윤석열 38.5%로 두 후보가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64.9% 대 윤석열 13.8%였다. 경기·인천 이재명 39.4% 대 윤석열 33.9%, 강원·제주 이재명 40.8% 대 윤석열 35.0%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권영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후보에 우세했다. 대구·경북 이재명 32.2% 대 윤석열 44.4%, 부산·울산·경남 이재명 33.2% 대 윤석열 41.2%였다. 다만 이들 지역이 보수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서울의 경우 이재명 29.7% 대 윤석열 42.2%로, 이 후보가 이전의 서울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안·총선·세종에서는 이재명 33.5% 대 윤석열 43.3%로, 윤 후보가 우세했다. 정당·상황별로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32.0% 대 윤석열 31.0%로 접전을 벌였다.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20.6% 대 윤석열 64.9%,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64.7% 대 윤석열 11.2%로, 두 사람 모두 경쟁률 끝에 우위를 자랑했다.



〈뉴스토마토 2021년 12월 21일자 4면〉

보도내용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가족 논란에 지지율 동반하락
이, TK·PK서 30%대 선전
서울은 여전히 난공불락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로,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0.1%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가 이를 0.8%포인트 격차로 뒤집었다. 지난달 5일 여야 5자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 이 후보의 첫 1위다.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9차 정기 여론조

사' 결과, 대선 5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가 양강을 형성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5.7%), 심상정 정의당 후보(5.1%),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2.9%,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8.6%와 2.5%였다.

2주 전 대비 이 후보는 지지율이 38.8%에서 37.5%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도 38.9%에서 36.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비교적 더 크게 하락하면서 1, 2위 순위가 뒤바뀌었다. 두 사람의 지지도 동반하락은 최근 불거진 가족 논란에 따른 후유증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이들의 불법도박,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경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2주 전에 비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40대 지지율이 39.3%에서 34.8%로 4.7%포인트 떨어졌다. 50

대에서도 44.5%에서 39.3%로 5.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대의 경우 39.1%에서 43.8%로 4.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모든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30대 31.9%에서 29.3%로 2.6%포인트, 40대 25.3%에서 22.5%로 2.8%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30대 이재명 43.8% 대 윤석열 29.3%, 40대 이재명 54.8% 대 윤석열 22.5%로, 이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28.3% 대 윤석열 54.0%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압도했다. 20대 이재명 27.4% 대 윤석열 27.1%, 50대 이재명 39.3% 대 윤석열 38.5%로, 두 후보가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이재명 61.9% 대 윤석열 13.8%였다. 경기·인천 이재명 39.4% 대 윤석열 33.9%, 강원·제주 이

재명 40.8% 대 윤석열 35.0%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진영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후보에 우세했다. 대구·경북 이재명 32.1% 대 윤석열 44.4%, 부산·울산·경남 이재명 33.2% 대 윤석열 41.2%였다. 다만 이들 지역이 보수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서울의 경우 이재명 29.7% 대 윤석열 42.2%로, 이 후보가 여전히 서울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이재명 33.5% 대 윤석열 43.3%로, 윤 후보가 우세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32.0% 대 윤석열 31.0%로 접전을 벌였다.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20.6% 대 윤석열 64.5%,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64.7% 대 윤석열 11.2%로, 두 사람 모두 진영별 절대 우위를 자랑했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49 |
| 언론사 | 주식회사 뉴시스(뉴시스(NEWSIS)) |
| 심의대상 | 뉴시스(NEWSIS) 1월 3일자 정치면 「이재명 40.9% 윤석열 39.2%…李, 尹에 첫 추월」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정치 > 정치일반

이재명 40.9% 윤석열 39.2%…李,尹에 첫 추월[리얼미터]

등록 2022-01-03 08:52:09

기사내용 요약
 리얼미터 여론조사서尹에 처음으로 역전
 李, 대우분 격차 상승…20대, 李 33.6%尹 28%
 당선 가능성은 李 49.5%尹 40.6%…오차범 격차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울=뉴시스]정인행 기자 = 새해 벽두 공개된 차기 대선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추월한 가운데, 리얼미터마저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친 것으로 3일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지난해 12월 5주차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40.9%, 윤석열 39.2%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올랐으나, 윤 후보는 1.2%포인트 하락해 이 후보가 이례 처음으로 이 후보가 선두로 나타났다.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7%포인트였다.

이여 연합수 국민여당 후보 6.6%, 심상정 정의당 후보 3.0%에 달했다. '기타 후보' 2.5%, '없음' 5.7%, '모름무응답' 2.1%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7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

에서 상승했고, 진보층(4.8%포인트, 66.4%→71.2%)과 중도층(1.1%포인트, 39.2%→40.3%)에서 반등했다.

윤 후보는 TK와 호남, 50대와 70세 이상에서 오른 것 외에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고, 중도층(3.5%포인트, 41.9%→38.4%), 진보층(2.4%포인트, 15.9%→13.5%), 보수층(2.3%포인트, 66.7%→64.4%)에서도 내림세를 보였다.

여기에 20대에선 이재명 후보가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33.6%, 윤석열 후보가 6.6%포인트 내린 28.0%로 뒤집혔다. 특히 20대 남성에서 윤석열(39.0%→25.0%)은 14.0%포인트 급락했으나, 이재명(29.0%→38.3%)은 9.3%포인트 상승해 대비를 이뤘다.

또 이 후보의 진보층 지지율이 71.2%로 상승한 반면, 윤 후보의 보수층 지지율은 64.4%로 하락해 각각 진영내 움직임에서도 윤 후보가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 내 역할을 맡으며 공식 합류했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간 합당 절차에 돌입한 것이 내부 진영 다지기와 결속의 모멘텀이 됐다"고 분석했다.

지기와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묻은 결과, 이재명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49.5%, 윤석열은 3.5%포인트 내린 40.6%로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9%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안철수 2.1%, 심상정 1.0% 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1.4%, 없음·알모름은 5.4%였다.

대선 투표 의향에선 '투표할 생각'이라는 응답은 92.6%(반드시 76.4%, 기급적 16.2%)로 나타났고,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6.5%(전혀 3.1%, 별로 3.4%)로 조사됐다.

이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층(=2313)에선 이재명 44.6%, 윤석열 42.1%, 안철수 5.1%, 심상정 2.4% 순으로 집계됐다. 적극투표층에서도 전주 대비 이 후보는 1.8%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내렸다.

사회적 약자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는 이재명 40.4%, 윤석열 35.3%, 안철수 7.5%, 심상정 5.9% 순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6~31일 오전 8시~18시 전국 1만 8천 307명을 대상으로 무선(95%)·유선(5%)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ARS)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40.9% 윤석열 39.2%...李, 尹에 첫 추월[리얼미터]

李,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尹에 처음으로 역전
李, 대부분 계층 상승... 20대, 李 33.6%
尹 28%
당선 가능성은 李 49.5% 尹 40.6%...
오차 밖 격차

새해 벽두 공개된 차기 대선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추월한 가운데, 리얼미터마저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친 것으로 3일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지난해 12월 5주차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40.9%, 윤석열 39.2%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올랐으나, 윤 후보는 1.2%포인트 하락하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이 후보가 선두로 나타났다.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7%포인트였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6.6%, 심상정 정의당 후보 3.0% 순이었다. '기타 후보' 2.5%, '없음' 5.7%, '모름·무응답' 2.1%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7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승했고, 진보층(4.8%포인트 ↑, 66.4%→71.2%)과 중도층(1.1%포인트 ↑, 39.2%→40.3%)에서 반등했다.

윤 후보는 TK와 호남, 50대와 70세 이상에

서 오른 것 외에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고, 중도층(3.5%포인트 ↓, 41.9%→38.4%), 진보층(2.4%포인트 ↓, 15.9%→13.5%), 보수층(2.3%포인트 ↓, 66.7%→64.4%)에서도 내림세를 보였다.

여기에 20대에선 이재명 후보가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33.6%, 윤석열 후보가 6.6%포인트 내린 28.0%로 뒤집혔다. 특히 20대 남성에서 윤석열(39.0%→25.0%)은 14.0%포인트 급락했으나, 이재명(29.0%→38.3%)은 9.3%포인트 상승해 대비를 이뤘다.

또 이 후보의 진보층 지지율이 71.2%로 상승한 반면, 윤 후보의 보수층 지지율은 64.4%로 하락해 각각 진영내 응집력에서도 윤 후보가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내 역할을 맡으며 공식 합류했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간 합당 절차에 돌입한 것이 내부 진영 다지기와 결속의 모멘텀이 됐다"고 분석했다.

지지와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 이재명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49.5%, 윤석열은 3.5%포인트 내린 40.6%로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9%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안철수 2.1%, 심상정 1.0% 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1.4%, 없음·잘모름은 5.4%였다.

대선 투표 의향에선 '투표할 생각'이라는 응답은 92.6%(반드시 76.4%, 가급적 16.2%)로 나타났고,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6.5%(전혀 3.1%, 별로 3.4%)로 조사됐다.

이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

층(n=2313)에선 이재명 44.6%, 윤석열 42.1%, 안철수 5.1%, 심상정 2.4% 순으로 집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전주 대비 이 후보는 1.8% 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내렸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는 이재명 40.4%, 윤석열 35.3%, 안철수 7.5%, 심상정 5.9% 순으로 뽑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6~31일 엿새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3037명을 대상으로 무선(95%)·유선(5%)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ARS)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8\%$ 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 |
|--------------|--|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50 |
| 언론사 | 서울뉴스통신 주식회사(서울뉴스통신) |
| 심의대상 | 서울뉴스통신 1월 3일자 정치면 「이재명 41.0%, 윤석열 37.1%…李, 3주 연속 우위」 및 1월 4일자 정치면 「리얼미터 등 6개 여론조사… 이재명 1위」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KSOI] 이재명 41.0%, 윤석열 37.1%...李, 3주 연속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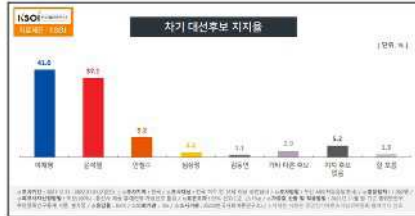
A 승혜숙 기자 | © 승인 2022.01.03 09:30



이재명 후보 (좌) 윤석열 후보(우)

[서울뉴스통신] 승혜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1.0%로 국민의힘윤석열(37.1%) 대선 후보를 3.9%포인트 차로 앞서며 3주 연속 우위를 차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난 12월 31일~1월 1일까지 이들 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었다.



자기 대선후보 지지율 / KSOI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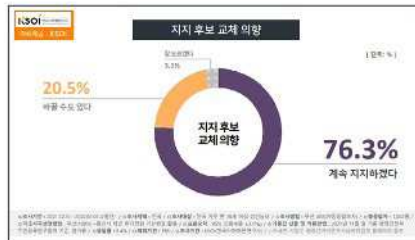
그 결과 이재명 후보 전주대비 3.4%포인트 상승해 41.0%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37.1%로 1.3%포인트 몰랐다.

뒤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9.2%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2.2%순이다.

기타 다른 후보는 2.9% 지지후보 없거나(5.2%) 잘 모름(1.3%)은 6.5%이다.

'자기 대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49.1% 윤 후보가 40.0%로 나타나 지난 12월13일 공표지 대비 이 후보는 4.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윤 후보는 6.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3.3% 심 후보는 0.4%로 뒤를 이었다.

'지지 후보 교체'에 대한 질문에는 76.3%가 '계속 지지한다'고 답해 전주 보다 4.7%포인트가 상승했다. "바뀔 수 있다"는 응답은 전주 보다 4.2%포인트 하락한 20.5%로 나타났다.



자기 후보 교체 의향 / KSOI 제공

지난 해 12월 6일 공표 조사 이후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지지율과 부동층(지지 후보 없음+모름) 추이를 보면, 이재명·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오르고, 윤 후보 지지율과 부동층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률 8.4%,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명 41.0%, 윤석열 37.1%... 추, 3주 연속 우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1.0%로 국민의힘 윤석열(37.1%) 대선 후보를 3.9%포인트 차로 앞서며 3주 연속 우위를 차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난 12월 31일~1월 1일까지 이틀 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 전주 대비 3.4%포인트 상승해 41.0%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37.1%로 1.3%포인트 올랐다.

뒤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9.2%,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2.2%순이다.

기타 다른 후보는 2.9%, 지지후보 없거나 (5.2%) 잘 모름(1.3%)은 6.5%이다.

‘자기 대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49.1%, 윤 후보가 40.0%로 나타나 지난 12월 13일 공표치 대비 이 후보는 4.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윤 후보는 6.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3.3%, 심 후보는 0.4%로 뒤를 이었다.

‘지지 후보 교체’에 대한 질문에는 76.3%가 “계속 지지한다”고 답해 전주보다 4.7%포인트가 상승했다. “바뀔 수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4.2%포인트 하락한 20.5%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6일 공표 조사 이후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지지율과 부동층(지지 후보 없음+모름) 추이를 보면, 이재명·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오르고, 윤 후보 지지율과 부동층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률 8.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스통신 2022년 1월 4일자 정치면>

보도내용

리얼미터 등 6개 여론조사... 이재명 1위

여론조사 기관별 대선후보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여러 기관에서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리얼미터 등 6개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51 |
| 언론사 | 주식회사 광주매스컴(무등일보) |
| 심의대상 | 무등일보 1월 4일자 1면 「이재명으로 기울었다…연말연시 골든크로스」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2년 01월 04일
1면 (종합)

무등일보 이재명으로 기울었다 연말연시 골든크로스

여론조사 결과 이·윤, 19 대 2
오차 밖 7건 중 10%p 이상 3건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연말연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앞선 결과가 다수 나왔다.

이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앞지락뒤지락 혼전 양상이었다면,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이 후보의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날까지 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21건 가운데 19건이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친 19건의 여론조사 중에서 오차범위 밖 차이는 7건, 나머지는 오차범위 이내였다. 격차 구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1~5.9%p 12건, 6.0~9.9%p 4건, 10.0%p 이상 3건 등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이 후보는 39.3%로, 27.3%를 보인 윤 후보를 눌렀다. 이 조사의 두 후보 격차는 12.3%p로, 연말연시 쏟아진 각종 조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CBS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이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이 후보는 10.6%p 격차로 윤 후보를 이겼다. 이 조사에서 지지율은 이 후보 35.8%, 윤 후보 25.2%였다.

이 후보가 앞선 조사 중 가장 적은 격차는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씨지에 의뢰한 조사로 0.9%p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이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이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제친 2건의 여론조사 격차는 각각 0.1%p, 0.4%p였다.

'0.1%p' 격차는 조원씨앤이(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지난해 12월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천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1.8%p)에서 나왔다. 이 후보 지지율 39.4%, 윤 후보 39.5%였다.

'0.4%p' 차이는 PNR-썬피플네트웍스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에서 나왔으며 이 후보 지지율 40.5%, 윤 후보 40.9%였다.

위 모든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김현우 기자 2022@mdtbo.com
(14.9>13.45cm)



이재명으로 기울었다...연말연시 골든크로스

여론조사 결과 이·윤, 19대 2
오차밖 7건 중 10%p 이상 3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연말연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앞선 결과가 다수 나왔다.

이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엇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이었다면,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이 후보의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21건 가운데 19건이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친 19건의 여론조사 중에서 오차범위 밖 차이는 7건, 나머지는 오차범위 이내였다. 격차 구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1~5.9%p 12건, 6.0~9.9%p 4건, 10.0%p 이상 3건 등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이 후보는 39.3%로, 27.3%를 보인 윤 후보를 눌렀다. 이 조사의 두

후보 격차는 12.3%p로, 연말연시 쏟아진 각종 조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CBS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이 후보는 10.6%p 격차로 윤 후보를 이겼다. 이 조사에서 지지율은 이 후보 35.8%, 윤 후보 25.2%였다.

이 후보가 앞선 조사 중 가장 적은 격차는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씨치에 의뢰한 조사로 0.9%p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이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제친 2건의 여론조사 격차는 각각 0.1%p, 0.4%p였다.

'0.1%p' 격차는 조원씨앤아이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지난해 12월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3천 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1.8%p)에서 나왔다. 이 후보 지지율 39.4%, 윤 후보 39.5%였다.

'0.4%p' 차이는 PNR(주)피플네트웍스가 뉴테일리 의뢰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에서 나왔으며 이 후보 지지율 40.5%, 윤 후보 40.9%였다.

위 모든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52

언론사 주식회사 디지털타임스(디지털타임스)

심의대상 디지털타임스 1월 6일자 4면 「안철수 2030 지지율 2위... 처음으로 윤석열 제쳤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디지털타임스

2022년 1월 06일
(4면 (정치))

안철수 2030 지지율 2위... 처음으로 윤석열 제쳤다

19.1%로 오차범위 내 앞서
"청년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치"
설 전 3강 구도 형성 자신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상승세에 2030이 날개를 달아줬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안 후보가 윤 후보보다 우위를 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5일 공개한 2030세대 여론조사(YTN 의뢰, 조사기간 지난 3~4일, 전국 만 18~39세 남녀 1024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다자당 대결에서 1위는 33.4%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이어 안 후보가 19.1%, 윤 후보가 18.4%였다. 안 후보와 윤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7%포인트였다. 1위인 이재명과 2위인 안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4.3%포인트다.

4위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7.5%), 5위는 김동연 세무운동계 대선후보(1.4%)였다. 부동층은 17.4%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10% 대를 돌파했다. 특히 2030 세대의 지지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마니투데이 터300 의뢰, 조사기간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결과 이 후보가 37.6%로 1위, 윤 후보가 29.2%로 2위, 안 후보가 12.9%로 3위였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에서 7.5%였으

2030세대 대선후보 지지율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4일 전국 만 18~39세 1024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 무선ARS 100%, 응답률 6.9%



나 5.4%포인트 오르며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8~29세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 후보가 27.2%로 가장 높았고, 안 후보가 19.7%, 윤 후보는 15.6%로 집계됐다.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가장 많았고,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24.4%였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19.3%였다.

안 후보는 2030 세대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203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청년 공약

을 정말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년 불공정 개선방안과 군대·주거·보육 등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 대선에 나왔다"면서 "제가 당선돼 정권교체를 하고 또 시대를 바꾸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와 만나거나 소통을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설 전까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3강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신선했다. 안 후보는 "현재 대선에서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과거 발목잡기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리도 노력해 어떻게 하면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00@

(22.9.16.7)cm



안철수 2030 지지율 2위… 처음으로 윤석열 제쳤다

19.1%로 오차범위 내 앞서
“청년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치”
설前 3강 구도 형성 자신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상승세에 2030이 날개를 달아줬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안 후보가 윤 후보보다 우위를 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5일 공개한 2030세대 여론조사(YTN 의뢰, 조사기간 지난 3~4일, 전국 만 18~39세 남녀 1024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다자가상대결에서 1위는 33.4%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이어 안 후보가 19.1%, 윤 후보가 18.4%였다. 안 후보와 윤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7%포인트였다. 1위인 이 후보와 2위인 안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4.3%포인트다.

4위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7.5%), 5위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1.4%)였다. 부동층은 17.4%였다.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10% 대를 돌파했다. 특히 2030 세대의 지지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머니투데이 더300 의뢰, 조사기간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이 후보가 37.6%로 1위, 윤 후보가 29.2%로 2위, 안 후보가 12.9%로 3위였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에서 7.5%였으나 5.4%포인트 오르며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8~29세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 후보가 27.2%로 가장 높았고, 안 후보가 19.7%, 윤 후보는 15.6%로 집계됐다.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가장 많았고,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24.4%였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19.3%였다.

안 후보는 2030 세대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203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청년 공약을 정말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년 불공정 개선방안과 군대·주거·보육 등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 대선

에 나왔다”면서 “제가 당선돼 정권교체를 하고 또 시대를 바꾸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와 만나거나 소통을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설 전까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3강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

보는 “현재 대선에서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과거 발목잡기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라도 노력해 어떻게 하면 미래먹거리, 미래일 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53 |
| 언론사 |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 |
| 심의대상 | 한국경제 1월 6일자 6면 「安 2030 지지율, 尹 추월…“저는 정책과 전문성 갖춰”」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국경제

2022년 1월 06일
06면 (정치)

安 2030 지지율, 尹 추월… “저는 정책과 전문성 갖춰”

여론조사 2위 - 이재명은 33%
“尹 반사이익이라 생각 안 해”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기업 잘 돼야 경제 살아난다”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30대에서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안 후보의 전 연령대 평균 지지율이 12%에 불과하기도 했다. 윤 후보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안 후보가 야권과 보수층 표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3. 4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율(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 양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서 안 후보는 19.1%의 지지율 얻어 윤 후보(18.4%)를 앞섰다. 33.4%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2위였다.

청년세대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을 실현하기 가장 적합한 후보를 물어봤을 때도 안 후보는 22.2%를 얻어 이 후보(24.8%)와 오차범위에서 각축을 벌였다. 공정을 가치로 내세웠던 윤 후보는 14.9%에 그쳤다.

한국갤럽의 3~4일 조사(전 연령)에서도 안 후보 지지율은 12.9%로 직전 조사(7.5%)보다 5.4%포인트 뒤였다. 이 후보는 37.6%, 윤 후보는 29.2%였다.

안 후보는 리디오에 출연해 최근 자신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청년 공약의 열심이 연구에 해결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걸 평가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꼭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게 제대로 된 정책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지지율) 다른 후보에게 갔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으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락기술이 시대정신인 이 시대에 제 역할이 있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나왔다”며 “자만이 시대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 출신임을 강조하며 경제 정책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V3(백산)를 만들어 팔았는데 전부 대기업 납품이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줬다”며 “(대기업) 부장 집 앞에서 서서 그 부장님이 술 뒤에 들어오면 소매 끝을 붙잡고 돈을 달라고 외쳤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의무감, 사명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25.2*17.2)cm



安 2030 지지율, 尹 추월… “저는 정책과 전문성 갖춰”

여론조사 2위…이재명은 33%
“尹 반사이익이라 생각 안해”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기업 잘 돼야 경제 살아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30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안 후보의 전 연령대 평균 지지율이 12%에 달하기도 했다. 윤 후보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안 후보가 야권과 보수층 표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3, 4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 후보 다자대결(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서 안 후보는 19.1%의 지지를 얻어 윤 후보(18.4%)를 앞섰다. 33.4%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2위였다.

청년세대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을 실현하기 가장 적합한 후보를 물어봤을 때도 안 후보는 22.2%를 얻어 이 후보(24.8%)와 오차범위에서 각축을 벌였다. 공정을 기치로 내세웠던 윤 후보는 14.9%에 그쳤다.

한국갤럽의 3~4일 조사(전 연령)에서도 안 후보 지지율은 12.9%로 직전 조사(7.5%)보다 5.4%포인트 뛰었다. 이 후보는 37.6%, 윤 후보는 29.2%였다.

안 후보는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자신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청년 공약을 열심히 연구해 해결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걸 평가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꼭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게 제대로 된 정책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지지율은) 다른 후보에게 갔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으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시대정신인 이 시대에 제 역할이 있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나왔다”며 “저만이 시대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 출신임을 강조하며 경제 정책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V3(백신)를 만들어 팔았는데 전부 대기업 납품이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줬다”며 “(대기업) 부장 집 앞에 서서 그 부장님이 술 취해 들어오면 소매 끝을 붙잡고 돈을 달라고 외쳤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의무감, 사명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56 |
| 언론사 | 주식회사 뉴스투데이(목포투데이) |
| 심의대상 | 목포투데이 1월 12일자 4면 「안철수 급부상, 2030 지지율 역전」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안철수 급부상, 2030 지지율 역전

국민의힘 긴장...일시적 현상 아닌 듯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선대위를 전격 해체하고 발표된 2030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39살 이하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본오차 ±3.1%포인트 해 지난 5일 내놓은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33.4%, 안철수 후보는 19.1%, 윤석열 후보는 18.4%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스웬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 지지율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차밖에 안 나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

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7.5%를 기록했다. 답변을 '없음'(12.3%)이거나 '잘 모름'(6.1%)이라고 한 부동층은 17.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 힘 선대위 해체로 이번 대선에서 아권 단일화 없는 정권교체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국민의 힘에서 발 벗고 단일화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 중이라 자칫하면 제1야당이 후보를 내보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단일화 논의가 나오면 여론조사 100% 반영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되기 때문 이다. 단일화가 불발돼도 완주하고 얻는 시너지 효과가 많으므로 큰 손해는 아니다. 이번의 상승세를 단단히 붙들며 두면 올해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당당한 캐스팅 보드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윤석열을 떠난 2030은 안철수를 선택했다. 안 후보에게 붙어오는 훈풍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열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양레오기자

〈목포투데이 2022년 1월 12일자 4면〉



안철수 급부상, 2030 지지율 역전

국민의힘 긴장... 일시적 현상 아닌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를 전격 해체하고 발표된 2030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39살 이하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해 지난 5일 내놓은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33.4%, 안철수 후보는 19.1%, 윤석열 후보는 18.4%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스윙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 지지도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7.5%를 기록했다. 답변을 '없음'(12.3%)이거나 '잘 모름'(5.1%)

이라고 한 부동층은 17.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로 이번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없는 정권교체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발 벗고 단일화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 중이라 자칫하면 제1야당이 후보를 내보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단일화 논의가 나오면 여론조사 100% 반영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단일화가 불발돼도, 완주하고 얻는 시너지 효과가 많으므로 큰 손해는 아니다. 이번의 상승세를 단단히 붙들어서 올해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당당한 캐스팅 보트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윤석열을 떠난 2030은 안철수를 선택했다. 안 후보에게 불어오는 훈풍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열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57 |
| 언론사 | 주식회사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 |
| 심의대상 | 일간경북신문 1월 20일자 6면 「뒤집혔다…尹 36.1 vs 李 34.9%」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일간경북신문

뒤집혔다…尹 36.1 vs 李 34.9%

윤석열 급등…안철수 1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7~1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지율은 34.9%, 윤석열은 36.1%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13.5%,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3.9% 등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이 후보가

2.7%p(포인트) 떨어지고 윤 후보가 6.9%p 오르면서 두 후보 간 차이는 초접전(1.2%p 차이) 양상이었다.

윤 후보는 20대에서 29.1% 지지를 받아 23.3%에 그친 이 후보를 앞섰다. 연령대별로도 지난 조사보다 20대 13.5%p, 30대 10.7%p, 40대 10.3%p 등 고른 상승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10.7%p, 인천·경기 +9.0%p)과 대전·충청(+10.8%p), 부산·울산·경남(+7.5%p)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윤 후보 39.6%, 이 후보 25.2% 등으로 격차가 커졌다. 중도층에서도 윤 후보가 35.8%로 이 후보

2022년 1월 20일
(0면 (종합))

면 안 후보와 3차 대결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 35.7%, 안 후보 43.6%, 심 후보 8.1%로 집계됐다. 이 후보 대비 윤 후보는 3.5%p 우위를 보였는데, 안 후보는 7.9%p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67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17.6%다. 조사원과 직접 대화하는 유·무선 전화 인터뷰로 실시했으며 무선 87.8%, 유선 12.2%다. 표본은 통신문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방식으로 가중값을 산출,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시스
t23.5*10.0cm

(31.6%)보다 4.2%p 높았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6.5%p 앞섰으나 뒤바뀌었다.

이 후보는 좀처럼 30%대를 뚫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 후보가 확정된 지난해 11월2주차 조사 이후 줄곧 32%~37%대 사이를 맴돌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정권교체' 응답이 56%로 '정권유지'(36.7%) 여론보다 높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4.7%로 '잘하고 있다' 41.2%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9%, 민주당 32.5%, 국민의당 5.6%, 열린민주당 3.9%, 정의당 3% 등이다.

13.5% 지지를 얻은 안 후보는 윤 후보와 단일화를 가정한 3차 대결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 후보 39%, 윤 후보 42.5%, 심 후보 9.1%로 조사된 반

◀일간경북신문 2022년 1월 20일자 6면▶



뒤집혔다…尹 36.1 vs 李 34.9%

윤석열 급등…안철수 1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7~1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지율은 34.9%, 윤석열은 36.1%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13.5%,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3.9% 등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이 후보가 2.7%p(포인트) 떨어지고 윤 후보가 6.9%p 오르면서 두 후보 간 차이는 초접전(1.2%p 차이) 양상이었다.

윤 후보는 20대에서 29.1% 지지를 받아 23.3%에 그친 이 후보를 앞섰다. 연령대별로도 지난 조사보다 20대 13.5%p, 30대 10.7%p, 40대 10.3%p 등 고른 상승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10.7%p, 인천·경기 +9.0%p)과 대전·충청(+10.8%p), 부산·울산·경남(+7.5%p)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윤 후보 39.6%, 이 후보 25.2% 등으로 격차가 커졌다. 중도층에서도 윤 후보가 35.8%로 이 후보(31.6%)보다 4.2%p 높았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6.5%p 앞섰으나 뒤바뀌었다.

이 후보는 좀처럼 30%대를 뚫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 후보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2주차 조사 이후 줄곧 32%~37%대 사이를 맴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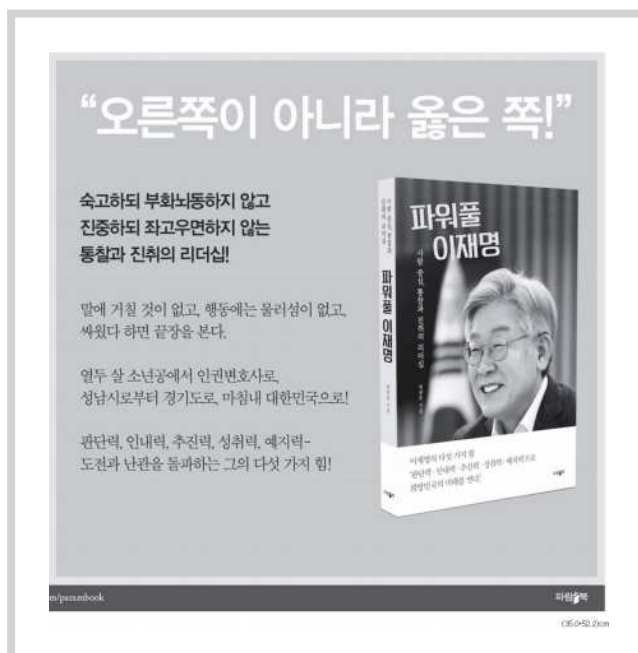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도 '정권교체' 응답이 56%로 '정권유지'(36.7%) 여론보다 높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4.7%로 '잘하고 있다' 41.2%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9%, 민주당 32.5%, 국민의당 5.6%, 열린민주당 3.9%, 정의당 3% 등이다.

13.5% 지지를 얻은 안 후보는 윤 후보와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 후보 39%, 윤 후보 42.5%, 심 후보 9.1%로 조사된 반면 안 후보와 3자 대결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 35.7%, 안 후보 43.6%, 심 후보 8.1%로 집계됐다. 이 후보 대비 윤 후보는 3.5%p 우위를 보였는데, 안 후보는 7.9%p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67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17.6%다. 조사원과 직접 대화하는 유·무선 전화 인터뷰로 실시했으며 무선 87.8%, 유선 12.2%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방식으로 가중값을 산출,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58 |
| 언론사 |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브릿지경제신문) |
| 심의대상 | 브릿지경제신문 1월 26일자 4면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제하의 광고 |
| 주문 |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브릿지경제 2022년 1월 26일자 4면〉

| 의결 번호 | 제20대 대선-자심63 |
|-------|--|
| 언론사 | 주식회사 뉴시스(뉴시스(NEWSIS)) |
| 심의대상 | 뉴시스(NEWSIS) 1월 24일자 정치면 「윤석열 37.8%, 이재명 33.6%… 李·尹, 격차 4.2%포인트[글로벌리서치]」 및 2월 3일자 정치면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한길리서치]」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 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내용 요약과 본문 등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 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 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석열 37.8%, 이재명 33.6%…李尹, 격차 4.2%포인트[글로벌리서치]

기사등록 2022-01-24 17:08:00

🔗 기사

기사내용 요약

안철수 '14%→10.1%' 지지율 확보…2강 1중 구도 윤이심 대결서尹 승리, 안이심 대결은李 승리



[서울=뉴스시스] 양소리 기자 = 문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양상을 보이며 '2강 1중' 구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37.8%, 이 후보는 33.6%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1월 16~17일)와 대비해 이 후보는 1%포인트 떨어진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포인트 올랐다. 두 사람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윤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지난 조사(14%)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한 10.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8%로 그 뒤를 이었다.

아권 단일화를 통해 윤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면 이 후보를 꺾는 반면, 안 후보가 나설 경우 이 후보에 패배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재명-문석열-심상정 세 후보가 대결한다면 윤 후보 40.7%, 이 후보 36.8%, 심 후보 4.5% 순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 앞섰다.

반면 이재명-안철수-심상정 세 후보가 대결한다면 이 후보 35.7%, 안 후보 29.7%, 심 후보 4% 순으로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뉴스시스 2022년 1월 24일자〉



윤석열 37.8%, 이재명 33.6%...

李·尹, 격차 4.2%포인트[글로벌리서치]

안철수 '14%→10.1%' 지지율 답보...2강 1중 구도

윤·이·심 대결서尹 승리, 안·이·심 대결은李 승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양상을 보이며 '2강 1중' 구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37.8%, 이 후보는 33.6%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1월 16~17일)와 대비해 이 후보는 1%포인트 떨어진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포인트 올랐다. 두 사람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윤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지난 조사(14%)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한 10.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8%로 그 뒤를 이었다.

야권 단일화를 통해 윤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면 이 후보를 꺾는 반면, 안 후보가 나설 경우 이 후보에 패배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 세 후보가 대결한다면 윤 후보 40.7%, 이 후보 36.8%, 심 후보 4.5% 순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 앞섰다.

반면 이재명·안철수·심상정 세 후보가 대결한다면 이 후보 35.7%, 안 후보 29.7%, 심 후보 4% 순으로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한길리서치]

등록 2022.02.03 12:00:23 수정 2022.02.03 13:46:19

[이](#)
[공](#)
[관](#)
[가](#)
[가](#)


기사내용 요약

윤 5.1%p 급반등尹 0.5%p 하락...李, 역전
안철수 8.2%, 심상정 3.3%, 허경명 2.1%
윤, 3040서 강세...尹, 60세서 과반 지지율



[그래픽]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팡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명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를 이 추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원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9.0%를 얻으면서 이 후보(26.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한길리서치]

李 5.1%p 급반등 尹 0.5%p 하락...李, 역전
안철수 8.2%, 심상정 3.3%, 허경영 2.1%
李, 3040서 강세...尹, 60세서 과반 지지율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0.9%로, 이 후보(32.1%)를 앞질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험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9.0%를 얻으면서 이 후보(26.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64 |
| 언론사 | 대한미디어 주식회사(The대한일보) |
| 심의대상 | The대한일보 2월 4일자 3면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부제와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일보 2022년 2월 4일 (월) 3면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정권을 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반에 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선 전문가 한림리서치가 쿠팡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를 앞섰다. 60대 이상에서 50.9%로, 이 후보(32.1%)를 앞섰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정권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5.1%p 급반등 0.5%p 하락... 나, 박정 안철수 8.2%, 심상정 3.3%, 허경명 2.1% 나, 3040서 강세... 윤, 60에서 과반 지지율

이 후보는 30대 43.1%, 40대 50.5%, 50대 49.3%, 60대 이상 50.9%로 윤 후보를 앞섰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정권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7-13-2022

<The대한일보 2022년 2월 4일자 3면>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李 5.1%p 급반등 尹 0.5% 하락... 李, 역전
안철수 8.2%, 심상정 3.3%, 허경영 2.1%
李, 3040서 강세... 尹, 60세서 과반 지지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반빙 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p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p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p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0.9%로, 이 후보(32.1%)를 앞질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혐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9.0%를 얻으면서 이 후보(26.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65 |
| 언론사 | 주식회사 호남매일(호남매일) |
| 심의대상 | 호남매일 2월 4일자 3면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부제와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2년 02월 04일
03면 (종합)

호남매일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李 5.1%p 급반등尹 0.5%p 하락…李, 역전



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연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편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7.8×12.0)cm

<호남매일신문 2022년 2월 4일자 3면>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李 5.1%p 급반등 尹 0.5% 하락... 李, 역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박빙 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

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66 |
| 언론사 | 주식회사 광전매일신문(광전매일신문) |
| 심의대상 | 광전매일신문 2월 4일자 3면 「이 5.1%p 급반등 윤 0.5%p 하락… 이, 역전 이, 3040서 강세… 윤, 60세서 과반 지지율」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광전매일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점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박빙 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팡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점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이 5.1%p 급반등 윤 0.5%p 하락… 이, 역전 이, 3040서 강세… 윤, 60세서 과반 지지율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

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0.9%로, 이 후보(32.1%)를 앞질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점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협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9.0%를 얻으면서 이 후보(26.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뉴스 (24.1*8.1)cm

<광전매일신문 2022년 2월 4일자 3면>



이 5.1%p 급반등 윤 0.5% 하락... 이, 역전 이, 3040서 강세... 윤, 60세서 과반 지지율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반빙 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 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0.9%로, 이 후보(32.1%)를 앞질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험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9.0%를 얻으면서 이 후보(26.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67 |
| 언론사 | 주식회사 문화일보(문화일보) |
| 심의대상 | 문화일보 1월 27일자 4면 「단일화 적합도는 安...경쟁력은 尹이 앞서」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단일화 적합도는 安... 경쟁력은 尹이 앞서

“단일화 필요하지 않다” 46%
“필요” 42%에 오차범위내 앞서

■ 문화일보 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중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는 안 후보가 다소 높지만 경쟁력은 윤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관련 질문 내용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셈이어서 실제 두 후보의 단일화가 추진될 경우 조사 문항과 대상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응답이 46.8%로, ‘필요하다고 본다’는 응답(42.3%)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모름·무응답

| | 윤석열 | 안철수 | 그 외 다른사람 | 없다 / 모름 / 무응답 |
|-----|------|------|----------|---------------|
| 적합도 | 37.6 | 43.1 | 3.1 | 16.2 |
| 경쟁력 | 51.5 | 30.9 | 3.1 | 14.5 |

은 10.9%다. 야권 성향 응답자는 단일화에 공감하고 있다. 윤 후보 지지층의 65.8%와 안 후보 지지층의 61.2%가 각각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 후보 지지층은 15.1%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정 권교체 지지층(63.5%)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 평가층(61.1%)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에 대해선 안 후보가 43.1%를 기록, 윤 후보(37.6%)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였다. 다른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1%였고 ‘없다’는 응답은 13.5%, 모름·무응답은 2.7%이었다. 하지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로 범위를 좁히면 윤 후보(53.8%)가 안 후보(38.5%)보다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단일화 시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윤 후보(51.5%)가 안 후보(30.9%)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3.1%의 응답자는 다른 후보를 꼽았고 ‘없다’는 응답은 11.3%, 모름·무응답은 3.2%였다.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로 범위를 좁힐 경우 윤 후보(63.8%)가 안 후보(27.8%)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조재연 기자

〈문화일보 2022년 1월 27일자 4면〉



단일화 적합도는 安… 경쟁력은 尹이 앞서

“단일화 필요하지 않다” 46%

“필요” 42%에 오차범위내 앞서

문화일보 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중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는 안 후보가 다소 높지만 경쟁력은 윤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관련 질문 내용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셈이어서 실제 두 후보의 단일화가 추진될 경우 조사 문항과 대상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응답이 46.8%로, ‘필요하다고 본다’는 응답(42.3%)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10.9%다. 야권 성향 응답자는 단일화에 공감하고 있다. 윤 후보 지지층의 65.8%와 안 후보

지지층의 61.2%가 각각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 후보 지지층은 15.1%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정권교체 지지층(63.5%)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 평가층(61.1%)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에 대해선 안 후보가 43.1%를 기록, 윤 후보(37.6%)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였다. 다른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1%였고 ‘없다’는 응답은 13.5%, 모름·무응답은 2.7%이었다. 하지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로 범위를 좁히면 윤 후보(53.8%)가 안 후보(38.5%)보다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단일화 시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윤 후보(51.5%)가 안 후보(30.9%)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3.1%의 응답자는 다른 후보를 꼽았고 ‘없다’는 응답은 11.3%, 모름·무응답은 3.2%였다.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로 범위를 좁힐 경우 윤 후보(63.8%)가 안 후보(27.8%)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68 |
| 언론사 | 주식회사 헤럴드(헤럴드경제) |
| 심의대상 | 헤럴드경제 2월 4일자 1면 「한달만에 재역전」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p>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한달만에 재역전

이 후보는 2.9%포인트 하락한 40.0%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오차 범위인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5.7%포인트 격전으로 이 후보를 앞서는 45.7%로 나타났다. 42.9%포인트 격전으로 이 후보를 앞서는 45.7%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오차 범위인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5.7%포인트 격전으로 이 후보를 앞서는 45.7%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2.9%포인트 하락한 40.0%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오차 범위인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5.7%포인트 격전으로 이 후보를 앞서는 45.7%로 나타났다.

이후 후보는 2.9%포인트 하락한 40.0%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오차 범위인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5.7%포인트 격전으로 이 후보를 앞서는 45.7%로 나타났다.

이후 후보는 2.9%포인트 하락한 40.0%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오차 범위인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5.7%포인트 격전으로 이 후보를 앞서는 45.7%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2022년 2월 4일자 1면〉



한달만에 재역전

윤 2.9%P ↓...尹은 7.9%P ↑

“지지후보 안바꾼다” 85.8%

역대 대선 사상 최고의 혼전
설연휴 막판 의전논란 영향도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다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설연휴 이후 민심의 흐름을 엿볼수 있는 조사로, 두 후보의 위치가 또다시 바뀌면서 혼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지지후보 교체 의향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집중됐던 배우자 검증의 칼날이 설 연휴 기간 '과잉의전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로 향하면서 이 후보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는 이달 초 선거대책위원회의 전격 해체를 통한 쇄신책 등 승부수가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진 흐름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빼앗겼던 20대와 중도층에서 과반으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직전 조사(작년 12월 27~28일)보다 7.9%포인트 상승한 45.7%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2.9%포인트 하락한 40.0%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 내 5.7%포인트 격차로 이 후보를 밀어내고 5주 만에 선두자리를 탈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6.9%,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였다.

윤 후보는 20대에서 34.8%포인트 오른 53.7%를 기록했다. 중도층 지지율도 13.5%포인트 끌어올리며 51.2%를 얻어 과반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20대에서 15.1%포인트 빠진 22.0%를, 중도층에서 4.3%포인트 떨어진 34.8%를 기록했다.

이강윤 KSOI 소장은 “설 연휴기간 불거진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이 일정 부분 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성과 상식을 중시하는 중도층이 이 후보에게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까지 한 달여를 앞두고 부동산과 지지후보 교체 의향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은 3.7%(지지할 후보 없음 2.9%+잘 모름 0.8%)로 지난 조사 대비 6.1%포인트나 감소했다. 지지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85.8%로 11.4%포인트 증가한 반면 바꿀 수도 있다는 의견은 12.6%로 10.3%포인트나 감소했다.

윤 후보 지지층 59.7%는 윤 후보 지지 이유로 “정권교체를 위해서”를 꼽았고, 이 후보 지지층 57.5%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응답했다.

보수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윤 후보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후보별 경쟁력을 물어본 결과, 47.4%가 윤

후보를, 30.3%가 안 후보를 선택했다.

차기 대선 성격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심판을 위해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정권교체론은 2.4%포인트 오른 50.0%로 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안정적 국정운영과 연속성을 위해 여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국정안정론은 0.7%포인트 하락한 40.1%였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37.1%, 민주당 35.0%, 국민의당 10.2%, 정의당 4.4%였다. 국

민의힘 2.6%포인트, 민주당 3.7%포인트, 국민의당 3.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는 윤 후보(40.2%)와 이 후보(39.5%)가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조사(ARS) 100%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갈팡질팡 서울2030 “김혜경 갑질 논란 보고 마음 굳혔어요”

“정책은 괜찮다 싶었는데…”

“공정 내세운 이재명에 배신감”

“내일 투표라면 윤석열 찍을 것”

“정권교체가 답이라는 생각”

“김혜경 씨 갑질 논란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배신감도 좀 느껴요. 정권교체가 답이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좀 서툴러 보여요. 이대남(20대 남성) 표 얻겠다고 갈라치기 하는 것도 속이 뻘하잖아요. 배우자 논란요? 부인 김건희 씨의 ‘스케일’이 더 크죠. 근데 막상 누굴 찍을지는 선거일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정권교체가 됐으면 해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부터 경제, 코로나19 방역 등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8일과 9일 <뉴스토크>가 만난 서울의 2030 청년세대는 투표의 무게추를 점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양강 주자 모두에 대한 비호감이 강한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앞세웠다. 취재팀이 열흘 전(1월 30일~이달 2일까지) 설문 연휴 민심 동향을 청취하고자 만났던 서울의 2030은 주로 “아직까지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갑질 논란이 터지자 민심은 요동쳤다. 2030은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던 이 후보 가족의 ‘내로남불’ 논란에 상

당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20대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 “내일 당장 투표한다면 윤석열을 찍겠다”면서 “보수가 당선돼야 집값이 떨어지고 취업도 잘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래도 정책은 이재명이 조금 더 괜찮겠다 싶었는데, 김혜경 씨 논란에 대처하고 해명하는 걸 보고선 비호감이 높아졌다”며 “대장동 의혹이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보니까 정말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한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에서 만난 30대 강모 씨도 “윤석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강씨는 “윤석열과 이재명 중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후보는 고르라면 이재명이다. 윤석열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는 것도 없어서 비호감”이라면서도 “일단 정권교체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후보 자질이나 배우자 논란은 눈에 잘 안 띈다”고 했다. 강씨는 정권교체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꼽았다. 그는 “청년들에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취업생들에게 상실감을 준 게 결정적이었다”며 “또래들도 이때부터 ‘반문’이 됐다”고 했다.

서울의 2030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굳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뽑혀도 괜찮다는 반응이었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30대 이모씨(여)는 “여러 후보를 봤지만 정책이 구분도 안 되고, 민심 얻기만 급급한 것 같다”며 “어쨌든 정권교체를 해야 하나까 좀 더 깨끗해 보이는 안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2030 민심이 갈팡질팡에서 정권교체로 돌아

선 데는 김혜경 씨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여권의 내로남불 비판을 연상케 하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심지어 과거 이 후보의 ‘형수 욕설’지 소환됐다. 가족 전체가 욕을 들어야 했고, 이 후보가 강조해왔던 ‘공정’ 이미지에도 큰 흠집이 생겼다.

관악구 봉천동의 20대 정 모 씨(여)는 “김건희 씨 허위경력도 문제지만, 김혜경 씨 논란이 더 크다”며 “김씨 논란을 보고선 이 후보의 형수욕설과 김씨가 조카와 싸운 것까지 생각이 날 정도였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등을 수습하기 위해 비운의 가족사를 설명하며 눈물로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김혜경 씨 논란에 사과의 진정성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정 씨는 “2030에게 허위경력 의혹은 ‘남의 일’일 수도 있지만 ‘갑질’은 당장 직장에 취업해 윗사람으로부터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만난 20대 이 모 씨는 “김건희 씨 허위경력 문제는 윤 후보와 결혼 전의 일”이라며 “김혜경 씨 논란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일로 더 큰 불공정이고, 대통령이 돼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서울 2030 민심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2030은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를 더 원하는 듯 했다. 윤 후보에 대한 투표도 정권교체를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2030은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 보였다.

양천구 목동의 안 모 씨(30대 · 여)는 “개혁이나 경제문제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더 큰 관심이 있다”면서 “가장 상식적으로 공약을 내고 진정성을 갖춘 후보는 심 후보”라고 했다. 강동구 암사동의 신 모 씨(30대)는 “인생사를 보면 안 후보야말로 신념을 가졌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가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서울의 2030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 군인 월급 200만원 인상,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선 대다수가 ‘편가르기’, ‘갈라치기’, ‘혐오 조장’, ‘정치적 퇴보’ 등으로 규정했다. 윤 후보를 지지한 2030 중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다만 “특정 세대, 계층을 위한 표심잡기를 나쁘게 볼 순 없다”, “정권교체와 대선승리를 위해선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72 |
| 언론사 | 주식회사 국제신문(국제신문) |
| 심의대상 | 국제신문 2월 22일자 4면 「유력해진 다자대결 구도... 李 비상체제 돌입 총력전」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며, 후보자 간 지지율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부제와 본문에서 후보자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2년 02월 22일
04면 (정치)

국제신문 유력해진 다자대결 구도... **李 비상체제** 돌입 총력전

KSOI 조사 6주 만에尹에 앞서 의원들에 뒷골목 선거운동 지지 SNS 홍보 등 지지층 결집 사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다자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 지역구 의원들에게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을 지시하는 등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상호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1일 T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결렬과 관련, "저희는 4자 구도로 가는 것만으로도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일화 이슈가 결렸기 때문에 이제 양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는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열흘이 승부처"라고 전망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충남 아산 온양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에게 열세를 보이지만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지난 18·19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앞선 것으로 나온 것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조사에서 이 후보는 43.7%, 윤 후보는 42.2%를 기록했다. 지난 주 대비 이 후보는 3.3%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1.3%포인트 하락하며 순위가 6주만에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전일부터 선대위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조직을 총 가동하고 있다. 대선을 보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현장 조직은 물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에게 밤 10시까지 현장 선거운동을, 당원들에게 '왜 이재명인가'를 주제로 영상(숏츠 등)을 제작하는 등 1인 미디어 활동도 나서 달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전날 회견에서 "선출직 의원을 중심으로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저도 선대위 당사에서 속삭이면 서 전 상황을 진두지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부 기강 단속 차원에서 유흥을 금지하고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 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상체제 운영지침'을 각 시도당에 보냈다. 이는 이광재(강원 원주갑)·박재호(부산 남읍) 의원이 골프를 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경고 조치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조원호 기자 (17.3+13.6)cm



유력해진 다자대결 구도… 李 비상체제 돌입 총력전

KSOI 조사서 6주 만에 尹에 앞서
의원들에 뒷골목 선거운동 지시
SNS 홍보 등 지지층 결집 사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다자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 지역구 의원들에게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을 지시하는 등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1일 T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결렬과 관련, “저희는 4자 구도로 가는 것만으로도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일화 이슈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양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는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열흘이 승부처”라고 전망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열세를 보이지만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지난 18·19일, 자세한 사

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앞선 것으로 나온 것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조사에서 이 후보는 43.7%, 윤 후보는 42.2%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지난 주 대비 이 후보는 3.3%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1.3%포인트 하락하며 순위가 6주 만에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선대위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조직을 총 가동하고 있다. 대선을 보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현장 조직은 물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에겐 밤 10시까지 현장 선거운동을, 당원들에겐 ‘왜 이재명인가’를 주제로 영상(숏츠 등)을 제작하는 등 1인 미디어 활동도 나서 달라고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전날 회견에서 “선출직 의원을 중심으로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저도 선대위 당사에서 숙식하면서 전 상황을 진두지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부 기강 단속 차원에서 유흥을 엄격히 금지하고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상체제 운영지침’을 각 시도당에 보냈다. 이는 이광재(강원 원주갑)·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를 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경고 조치를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73 |
| 언론사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
| 심의대상 | 조선일보 2월 26일자 5면 「5.6%p 격차가 1.6%p로... 李 수도권서 역전, 尹2030 계속 우세」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朝鮮日報 2022년 2월 26일 (토) 5면

5.6%p 격차가 1.6%p로... 李 수도권서 역전, 尹 2030 계속 우세

본지-TV조선 심의 대상 D-11 여론조사

조선일보-TV조선-엔터테인먼트가 3·9 대선을 2주 앞둔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우권 야세 후보가 조바림의 경쟁을 받으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24일 실시한 이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6.5%)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4.9%)의 차이가 2.0%p포인트 좁아졌다.

연평균으로는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20대(13.2% 대 27.2%)와 30대(25.2% 대 36.7%), 60대 이상(28.8% 대 51.5%) 등에서 앞섰고, 40대(66.3% 대 22.7%)와 50대(50.4% 대 35.2%)에선 경향 지지율 민주당 우세로 역전 선거일문 뒤편 지지율 결집 나선듯 **키지지율 66% "野 단일화 필요" 추지지율 10%만 찬성**과 대조

이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지난 조사는 국민의힘(39.9%)이 33.8% 대 46.4%로 윤 후보가 12.6%포인트 앞섰지만 이번엔 38.2% 대 42.6%로 차이가 4.4%p포인트로 좁아졌다. 중도층에서 지난 조사는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28.8% 대 37.4%로 앞섰지만, 이번엔 35.7% 대 31.8%로 이 후보가 더 높았다.

대선 후보 4차대결 추세(%)

| | |
|------|----------|
| 36.5 | 36.5 윤석열 |
| 29.3 | 34.9 이재명 |
| 4.2 | 8.6 안철수 |
| 3.2 | 3.1 심상정 |

지난 11월 2차-3차 대결

4차대결 세대별 지지율(%)

| 세대 | 윤석열 | 이재명 | 안철수 | 심상정 |
|-----|------|------|------|------|
| 20대 | 27.2 | 38.7 | 22.7 | 11.4 |
| 30대 | 25.2 | 36.7 | 25.7 | 12.4 |
| 40대 | 66.3 | 22.7 | 8.4 | 1.4 |
| 50대 | 50.4 | 35.2 | 11.0 | 3.4 |
| 60대 | 28.8 | 51.5 | 11.0 | 5.4 |

4차대결 지역별 지지율(%)

| 지역 | 윤석열 | 이재명 | 안철수 | 심상정 |
|-------|------|------|------|------|
| 서울 | 36.0 | 36.8 | 4.9 | 2.3 |
| 인천/경기 | 48.7 | 18.8 | 11.0 | 1.5 |
| 대전/충청 | 40.7 | 24.4 | 28.3 | 5.6 |
| 충청/전라 | 17.7 | 21.5 | 38.0 | 21.8 |
| 대구/경북 | 38.0 | 38.0 | 14.8 | 9.2 |
| 부산/경남 | 36.4 | 36.4 | 18.7 | 8.5 |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

| 후보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
|--------|------|---------|
| 안철수 후보 | 8.6 | 79.9 |
| 심상정 후보 | 66.3 | 29.6 |
| 안철수 후보 | 31.5 | 36.2 |
| 심상정 후보 | 36.2 | 36.2 |

이후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지난 조사는 국민의힘(39.9%)이 33.8% 대 46.4%로 윤 후보가 12.6%포인트 앞섰지만 이번엔 38.2% 대 42.6%로 차이가 4.4%p포인트로 좁아졌다. 중도층에서 지난 조사는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28.8% 대 37.4%로 앞섰지만, 이번엔 35.7% 대 31.8%로 이 후보가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선 경향 지지율도 변화가 없다. 지난 조사는 국민의힘(39.9%)이 민주당(34.1%)보다 높았지만 이번엔 민주당(34.9%)이 국민의힘(32.8%)보다 높았다.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가 바뀐 데에는 중도층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조사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이 28.8% 대 38.3%로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이번엔 반대로 37.3% 대 27.4%로 민주당이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야권 지지층이 산개를 앞두고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대한 찬성자의 37.5%가 '필요하다'고 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48.4%였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찬성은 지지는 66.3%가 단일화를 찬성했고 안 후보 지지자도 51.5%였다. 반면 이 후보 지지자는 단일화 찬성이 10.6%에 그쳤다.

○조사 어떻게 했나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엔터테인먼트에 의뢰해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68.5%와 음성전화(11.5%)를 전화통화(18.0%)를 활용하여 전화 면접을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합당 추출했으며, 인구 배분에 따른 가중치(셀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 응답률은 33.8%다.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함의 참조.

출처: 여론조사전문기관
© 2022. 02. 26

〈조선일보 2022년 2월 26일자 5면〉



5.6%p 격차가 1.6%p로... **윤** 수도권서 역전, **尹** 2030 계속 우세

정당 지지율 민주 우세로 역전
선거 앞둔 與지지층 결집 나선 듯

尹지지층 66% “野 단일화 필요”
李지지층 10%만 찬성과 대조

조선일보·TV조선·칸타코리아가 3·9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여야 후보가 초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24일 실시한 이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6.5%)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4.9%)의 차이가 1.6%포인트에 불과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5%,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1%였다. 약 열흘 전인 12~13일 칸타코리아 조사에 비해 윤 후보(38.8→36.5%)의 하락과 이 후보(33.2→34.9%)의 상승이 대비되면서 차이가 5.6%포인트에서 좁혀졌다.

이 후보의 반등은 수도권에서 지지율 회복이 크게 기여했다. 지난 조사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서울(30.4% 대 43.7%)과 인천·경기(32.7% 대 39.1%)에서 열세였지만, 이번엔 서울(36.0% 대 34.6%)과 인천·경기(36.9% 대 32.9%)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지난 조사는 25.9% 대 49.5%였고 이번엔 28.0% 대 47.7%로 윤 후보가 계속 50%를 넘지 못한 가

운데 차이가 23.6%포인트에서 19.7%포인트로 좁혀졌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20대(13.2% 대 27.2%)와 30대(25.2% 대 36.7%), 60대 이상(28.8% 대 51.5%) 등에서 앞섰고, 40대(56.3% 대 22.7%)와 50대(50.4% 대 35.2%)에선 이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지난 조사는 자영업자에서 33.8% 대 46.4%로 윤 후보가 12.6%포인트 앞섰지만 이번엔 38.2% 대 42.6%로 차이가 4.4%포인트로 좁혀졌다. 중도층에선 지난 조사는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28.8% 대 37.4%로 앞섰지만, 이번엔 35.7% 대 31.8%로 이 후보가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선 정당 지지율도 변화가 컸다. 지난 조사는 국민의힘(39.9%)이 민주당(34.1%)보다 높았지만 이번엔 민주당(34.9%)이 국민의힘(32.8%)보다 높았다.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가 바뀐 데에는 중도층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조사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이 28.6% 대 38.3%로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이번엔 반대로 37.3% 대 27.4%로 민주당이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여권 지지층이 선거를 앞두고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선 응답자의 37.5%가 ‘필요하다’고 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49.4%였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견해는 각 후보 지지자별로 달랐다. 윤 후보 지지자는 66.3%가 단일화를 찬성했고 안 후보 지지자도 51.5%였다. 반면 이 후보 지지자는 단일화 찬성이 10.6%에 그쳤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의 경우엔 야권 단일화 찬성이 60.1%로 다수였고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는 찬성이 13.5%에 머물렀다.

◇조사어떻게 했나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월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88.5%)와 집전화(11.5%)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로 할당 추출했으며,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 응답률은 13.6%다.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4. 권고

| | |
|------|--|
| 의결번호 | 제20대 대선-자심1 |
| 언론사 | 주식회사 광전매일신문(광전매일신문) |
| 심의대상 | 광전매일신문 7월 14일자 11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희화화」 및 8월 4일자 11면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
| 이 유 |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외부 기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예비후보자 및 여타 출마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광전매일신문

이재명과 윤석열의 문제는 정치희화화의 주인공이란 점이다. 조국 파동을 겪으며, 조국의 인지도는 대선후보급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정치가 쉽지 않은 이유는 조국이 희화화의 대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렇다. 검찰총장 사위의 권력에 가려진 윤석열 장모의 최가 윤석열 퇴진 후 얼마 안되어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문제는 더 가관이다.

얼마 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줄리"가 아남을 해명하면서 석사학위 두 개, 박사학위를 취득하느라고 "줄리"를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박사학위를 준 국민대에서 김건희 박사는 문 표점이 엄중하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또한, 김건희가 발표한 한 논문에서 "회원 유지" 영역을 "Member Yuji"로 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조국을 버릇한 사회지도층의 자식들을 위한 "논문품앗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던가? 사실 이 논문 품앗이는 조국이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았지만, 그 전부터 공공연히

칼럼 조영우

공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희화화

만연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 "줄리"에 관한 진중권의 의견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의 김부선 스캔들이 증거가 없어서 끝난 것이나, 김건희의 "줄리"도 문제가 아니라 식이다. 이재명이 증거를 안남겼으니, 법에서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도덕과 정 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진보논객을 자처한 진중권이 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도이지, 진보가 문제가 생겼다고 반대전연의

보수 유력후보 아내의 "줄리" 문제를 감싸고 진보진영에 내부 총질을 한 것 역시 웃을거리다. 진중권도 희화화의 대상인 것이다.

급기야, 김부선은 법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다. 이 자체로 이재명은 정치 희화화 된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일국의 지도자로 체통을 세우기는 어렵다. 본선 진출시 야당의 강한 공격에 시달릴 것도 변한 일이다.

이재명의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인지도

를 크게 높힌 제1공약 "기본소득"에서 한 발짝 발을 뺀 것이다. 그 동안 증세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수백억원의 홍보비를 들여서 자랑해놓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으니까 슬쩍 "제1공약"이 아니라고 뒷꿈두니를 빼고 말았다. 지도자의 인행이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된다.

윤석열의 희화화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표창장 위주로 조국 아내 정경심교수에 4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장모의 여죄,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논문표절과 주가조작문제, 윤석열 본인의 윤우진세무사장의 법적문제 관여 등에서 불공정과 정치희화화는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의 문제는 정권교체론을 정권 재창론으로 그 흐름을 바꿔놓는 일이다. 그것은 가장 능력있고 품격있는 이낙연 후보와 함께 국민들에게 안정과 평화,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2021년 07월 14일
11면 (오화니언)

(23.7*12.6cm)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희화화

이재명과 윤석열의 문제는 정치희화화의 주인공이란 점이다. 조국 파동을 겪으며, 조국의 인지도는 대선후보급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정치가 쉽지 않는 이유는 조국이 희화화의 대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렇다. 검찰총장 사위의 권력에 가려진 윤석열 장모의 죄가 윤석열 퇴진 후 얼마 안되어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 문제는 더 가관이다.

얼마 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줄리”가 아님을 해명하면서 석사학위 두 개, 박사학위를 취득하느라고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박사학위를 준 국민대에서 김건희 박사논문 표절이 엄중하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또한, 김건희가 발표한 한 논문에서 “회원유지” 영역을 “Member Yuj”로 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조국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자식들을 위한 “논문품앗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던가? 사실 이 논문 품앗이는 조국이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았지만, 그 전부터 공공연히 만연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 “줄리”에 관한 진중권의 의견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의 김부선 스캔들이 증거가 없어서 끝난 것이니, 김건희의 “줄리”도 문제가 아니란 식이다. 이재명이 증거를 안남겼으니, 법에서 자유로울지 모르지

만 도덕과 정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진보 논객을 자처한 진중권이 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도이지, 진보가 문제가 생겼다고 반대진영의 보수 유력후보 아내의 “줄리” 문제를 감싸고 진보진영에 내부 충질을 한 것 역시 웃음거리다. 진중권도 희화화의 대상인 것이다.

급기야, 김부선은 법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다. 이 자체로 이재명은 정치 희화화 된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일국의 지도자로 체통을 세우기는 어렵다. 본선 진출시 야당의 강한 공격에 시달릴 것도 뻔한 일이다.

이재명의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인지도를 크게 높인 제1공약 “기본소득”에서 한 발짝 발을 뺀 것이다. 그 동안 증세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수백억 원의 홍보비를 들여서 자랑해놓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으니까 슬쩍 “제1공약”이 아니라고 뒷꿈무니를 빼고 말았다. 지도자의 언행이 이렇게 가벼워서 안된다.

윤석열의 희화화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표창장 위조로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에 4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장모의 여죄,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논문표절과 주가조작문제, 윤석열 본인의 윤우진 세무서장의 법적문제 관여 등에서 불공정과 정치희화화는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의 문제는 정권교체론을 정권재창론으로 그 흐름을 바꿔놓는 일이다. 그것은 가장 능력있고 품격있는 이낙연 후보와 함께 국민들에게 안정과 평화,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광전매일신문

2021년 08월 04일
11면 (사회나란)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소장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성격을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로 규정하였다. 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과 부동산 등 정책실패에 대한 정권교체론과 야당 대선후보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정부 검찰과 검찰 출신 윤석열과 최재형의 배신자 응징론에 대한 심판선거의 구도로 보는 것이다.

김소장은 이 기준에서 보면, 윤석열의 입장에서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낙연이 될 것으로 본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주장한다. "2002년 노무현선거처럼 끝날 수 있다. 지역순회경선에서 광주 전에 앞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권리당원의 대부분은 호남이거나 친문이다. 이들 상당수가 이낙연 쪽인데, 이재명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 중 병원에 입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이 역시 이낙연에 큰 호재이다. 그 동안 중립을 지키고 있던 친문세력인 민주주의 4.0 관련 의원들 중 10명 이상이 이낙연 공개지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미,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이 이낙연 캠프에 가세했다.

9월 순회경선이 시작되면, 이낙연 대세론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윤석열에겐 혹독

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 전 총정의 과거 연행과 가족 문제에 비난이 가열되는 가운데, 급기야 종료 한 건물에 '돌리벽화'까지 등장했다. 정치회화화의 대상이 정치에 그것도 대선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제3지대를 포기하고 국민의 힘에 입당한 윤석열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평이 들고 돌아 전두환 뿌리 정당에 갔다."고 비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정치가 아해가 안된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세력이 만든 당으로, 자신이 국정농단세력으로 구속했던 사람들이 핵심으로 참여했다."고 혹평했다. 제3지대를 포기하고 보수정당에 입당한 것은 배신자의

칼럼
조영우

광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

신포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론의 빌미를 제공한 조국은 난과 정책실패는 향후에 만회 가능하다고. 조국 관련 재판에서 2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인턴 관련해서 조국 탈 친구가 사진 속 인물이 조국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곰팡이 확 대하면서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대책이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변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로 이 난국을 헤쳐간다면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2021년 7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통해 올 7

월 수출이 554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95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10년 만에 4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을 나타냈다.

중도층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전환기에 경제를 안착시킨 민주당정부에 한 번 더 기회를 중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서느냐이다. 그것은 결국,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 실제 광주, 전남북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을 향한 것보다 많다. 최근 이재명 지사의 "한반도 통합에 한반도 백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백제론으로 호남인들이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호남은 항상 정권창출에 주역이 될 수 없는가. DJP연합과 노무현 양자론에서 보듯이 호남의 독자정권창출은 항상 어렵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힌 보수정당 후보와의 싸움에서 여러 스캔들에 시달리는 이재명 후보보다 품격과 안정을 보여주는 이낙연 후보의 승리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3.7*14.5)cm

<광전매일신문 2021년 8월 4일자 11면>

보도내용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소장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성격을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로 규정하였다. 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과 부동산 등 정책실패에 대한 정권교체론과 야당 대선후보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정부 검찰과 검찰 출신 윤석열과 최재형의 배신자 응징론에 대한 심판선거의 구도로 보는 것이다.

김소장은 이 기준에서 보면, 윤석열의 입장에서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낙연이 될

것으로 본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주장한다. "2002년 노무현선거처럼 끝날 수 있다. 지역순회경선에서 광주 전에 앞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권리당원의 대부분은 호남이거나 친문이다. 이들 상당수가 이낙연 쪽인데, 이재명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 중 병원에 입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이 역시 이낙연에 큰 호재이다. 그 동안 중립을 지키고 있던 친문세력인 민주주의 4.0 관련 의원들 중 10명 이상이 이낙연 공개 지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미,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은 이낙연 캠프에 가세했다.

9월 순회경선이 시작되면, 이낙연 대세론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윤석열에게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 전 총장의 과거 언행과 가족 문제에 비난이 가열되는 가운데, 급기야 종로한 건물에 ‘줄리벽화’까지 등장했다. 정치회화화의 대상이 정치에 그것도 대선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제3지대를 포기하고 국민의 힘에 입당한 윤석열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핑이 들고 돌아 전두환 뿌리 정당에 갔다.”고 비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정치가 이해가 안된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세력이 만든 당으로, 자신이 국정농단 세력으로 구속했던 사람들이 핵심으로 참여했다.”고 혹평했다. 제3지대를 포기하고 보수정당에 입당한 것은 배신자의 운신폭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론의 빌미를 제공한 조국논란과 정책실패는 향후에 만회가 가능하다. 조국 관련 재판에서 2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인턴 관련해서 조국 딸 친구가 사진 속 인물이 조국 딸 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공급이 확대하면서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대책이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변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로 이 난국을 헤쳐간다면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2021년 7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통해 올 7월 수출이 5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95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10년 만에 4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을 나타냈다.

중도층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전환기에 경제를 안착시킨 민주진보정부에 한 번 더 기회를 중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서느냐다. 그것은 결국,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실제 광주, 전남북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을 합한 것보다 많다. 최근 이재명 지사의 “한반도 통합에 한번도 백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백제론으로 호남인들이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호남은 항상 정권창출에 주역이 될 수 없는가. DJP연합과 노무현 양자론에서 보듯이 호남의 독자정권창출은 항상 어렵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힌 보수정당 후보와의 싸움에서 여러 스캔들에 시달리는 이재명 후보보다 품격과 안정을 보여주는 이낙연 후보의 승리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한 주 새 5%p 오른 이재명, 윤석열 <오차범위 내> 추월... 20대 표심향방 '최대변수'

李 38%, 尹 36%... 6주 만에 역전

李, 3040 · 호남 · 수도권에서 강세
차별화 행보에 중도층 움직인 듯

尹, 60대이상 · 영남서 지지 높지만
선대위 불협화음 등 '주춤'

하락세가 멈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컨벤션 효과'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풍긴다. 이 후보는 이번 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부 조사에선 윤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당선가능성 39%로 동률 이뤄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9일 합동으로 지난 29일~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포인트) 이 후보의 지지율은 38%를 기록, 윤

후보(36%)를 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오차범위 내지만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앞선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조사 이후 6주 만이다. 이 후보는 전주대비 5%포인트 상승했지만, 윤 후보는 2%포인트 증가에 그쳐 역전을 허용했다. 당선 가능성은 39%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상승세는 다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더300 의뢰로 이달 6일과 7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36.3%)와 윤 후보(36.4%)의 격차는 0.1%포인트에 불과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윤 후보가 2.0%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이 후보는 0.8%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하락폭이 2배 이상이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후보(35.1%→37.1%, 2%포인트)는 윤 후보(43.7%→45.3%, 1.6%포인트)와 비교해 상승폭에서 앞섰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연령별, 지역별 대결 구도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 후보가 30대와 40대에서 우위를 점한 반면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도 이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 윤 후보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는 상황이다. 두 후보의 주요공약 대상인 20대는 조사기관마다 엇치락 뒤치락 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이 후보(22.3%)가 윤 후보(20%)에 앞섰지만 NBS 조사에서는 (이 후보 20% · 윤 후보 28%) 반대의 결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년1월 골든크로스 전망도

전문가들은 여론의 변화와 관련해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적중했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하면서 조국 장관 사태, 부동산 문제 등 현 정부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면서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노출된 불협화음과 '3김'(김종인·김병준·김한길)으로 대표되는 '올드보이'의 전면 배치로 신선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행정능력에서도 이 후보의 경쟁력이 표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후보지지 배경으로 '추진력·실행

력'을 꼽은데 반해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들었다. NBS 조사에서도 경제 분야 능력 평가에서 이 후보는 42%의 지지를 얻었지만, 윤 후보는 25%를 얻는데 그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내년 1월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전망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새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싶어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실행 능력을 입증한 이 후보가 유리하다"며 "윤 후보는 '반문 캠프'를 연상시키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등 과거를 지향하고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중전선언' 정책이 성공할 경우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5. 안내문 송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제재조치 없이 관련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한 사례임



<The대한일보 2021년 7월 23일자 15면>

보도내용

2022년 대선 기상도

드센 기세의 폭염도 10여일 후면 꺾일 것이다. 서서히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추석을 지나면 어느새 겨울, 그리고 잠시 후면 봄과 함께 2022년 대선을 맞게 될 것이다.

대선까지 불과 200여 일, 어수선한 여야의 정치 판도도 서서히 대세를 잡아갈 것이다.

과연 차기 대권을 쥐게 될 정당은 어느 곳이며 누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여권인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30%대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잠시, 현재 45%대의 놀라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다. 총선까지 40%대만 유지된다면 여권의 승리는 60% 이상 장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누가 여권의 대권 후보가 되며 또한 과연 누가 대권후보로 선정되어야 승리에 유리한가?

절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로 본다.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뭔가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적 상황에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그의 가끔씩 나타나는 돌출 행동이 긴장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선택을 결정할 때는 뭔가 기대감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출신지역이 경상도 쪽으로 막판 지역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다.

경상도 특유의 전라도 쪽 기피현상은 막판 판세에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장을 그리고 경기지사 지내며 위기돌파 내지는 과감한 정책들을 성공시킨 성적표이다.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1,2위가 다시 붙을 경우 충분히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이른바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연합이다. 그러나 경선 막판까지 정세균 후보가 10%를 넘지 못할 것 이라면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인 추미애 후보의 지지표가 그쪽으로 몰려 돌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대선 승리 그래프는 이재명으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될 경우 이낙연 후보보다 6대4 정도

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일단 후보가 결정되면 반문이니 친문이니 하는 색깔은 없어질 것이고 단합 되리라고 본다.

야당 쪽은 어떠할까? 첫째 후보는 누가 될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복기해 보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윤석열은 언제 국민의 힘에 입당할까... 결국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입당하는 순간 당의 보호보다는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될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당에 입당하여 안철수와 투톱을 이루고 두사람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와 마지막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길 확률이 높다.

이유는 계속되는 검증과정을 통하여 부적격 자질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체된 지지율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에선 누가 후보가 될까...

사실 모두 그만 그만이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중에서 선출될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신은 결국 선택받기 어렵다. 그중에서 원희룡이 가장 유리하리라고 본다.

다수의 국회의원과 김종인 전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신성이다.

그렇게 보면 원희룡과 안철수의 최종 선택은 원희룡 후보로 낙점되고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맞붙을 경우 6.5대 5.5로 민주당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안철수와 이재명의 대결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시정요구심의 의결 사례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1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
| 심 의 대 상 | 중앙일보 2021년 9월 30일자 4면 「성남의뜰, 화천대유 위해 3214억 담보 제공했다」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 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성남의뜰이 화천대유가 대출을 위해 하나투자신탁에 신탁한 땅을 미리 담보로 쓸 수 있도록 일종의 ‘빚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민간사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시정요구인측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화천대유가 돈을 빌릴 당시, 토지가 아니라 배당금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시정요구인이 성남의뜰을 통해 화천대유에 어떠한 특혜를 준 것처럼 과장 보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하였다.</p> <p>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성남의뜰이 하나투자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을 맺을 당시, 성남의뜰만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화천대유가 돈을 빌린 성남 대장제일차(주) 등이 채무자로 추가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채무자는 화천대유로 볼 수 있고, 성남의뜰 · 하나투자신탁 · 화천대유 간 권리관계는 실질적으로 토지라는 담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며, ‘빚보증’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다.</p> <p>살피건대, 공직선거에 있어 언론이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거나 압축, 강조할 수 있다.</p> |

이 유 그러나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의 주요 내용과 ‘성남의뜰과 하나자산신탁 간 부동산신탁계약을 바탕으로, 화천대유가 자금을 조달받은 성남대장제일차(주) 등이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3순위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들의 수익권증서의 금액이 총 3214억 원’이라는 확인된 사실을 비교해 보면, 그 제목이나 내용이 과장된 면이 있어, 독자나 유권자들이 ‘신탁된 땅 자체가 직접적인 담보’라거나 ‘3214억이 확정된 담보금액’이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10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에 해당하는 수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앙일보 2021년 9월 30일자 4면>



성남의뜰, 화천대유 위해 3214억 담보 제공했다

대장동 개발한 부지 판 성남의뜰
그 땅 산 화천대유 위해 빚보증 선생
금융전문가 “업계선 이례적인 일”
이재명 측 “위험 민간부담”과 배치

‘대장동 의혹’은 복잡한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 그 의혹의 중심에는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어떻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중 핵심 쟁점은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이 내놓은 설명 자료에는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환수한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사업자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다. ‘위험은 민간이, 수익은 공공 우선’이 실질에 맞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각각 지분 ‘50%+1주’와 ‘50%-1주’를 소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을 만들었고 사업의 수익 크기와 무관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503억 원을 환수하게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컨소시엄에 포함된 화천대유는 지분 ‘1%-1주’를 가졌다. 결국 사업이 성공하면 민간사업자는 큰 이익을 보지만 실패하게 되

면 빚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캠프 측 자료는 이를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장동 210번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2017년 1월 4일 토지를 취득한 뒤 1월 10일 하나자산신탁에 소유권을 넘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 신탁을 한 것이다. 그런 뒤 10개월 뒤인 2017년 11월 7일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이튿날 이를 신탁원부에 반영하게 된다. 변경된 내용은 ‘우선수익자’ 공동 3순위에 모두 24개(중복 포함) 법인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성남의뜰)의 채권자들인데, 사업 도중 문제가 생겨 강제집행절차 등이 진행되면 수탁자(하나자산신탁)에게 신탁수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들 24개 법인(중복 포함)에게 빚을 진 채무자는 성남대장제일차(주), 성남대장제이차(주), 성남대장제삼차(주)이며 각각 1176억 5000만 원, 1017억 9000만 원, 1019억 2000만 원 등 모두 3213억 6000만 원이 수익권증서금액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성남대장제일차는 어떤 회사일까. 한국기업평가의 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차주(돈을 빌리는 측) 성남대장제일차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업주)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SPC)로 돼 있고 ‘사업주는 대장동 A1 BL(블록) 일원에서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토지신탁(신탁회사: 하나자산신탁)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결국 성남대장제일차·제이차·제삼차는 각각 공동주택 분양용지인 A1·A2·A11 구

역 개발을 위해 화천대유에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인 셈이다. 실제 신탁원부에는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 추가 설정을 위한 신탁보수 8000만 원의 부담주체로 화천대유를 명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성남의뜰이 개발용지를 사들여 공공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 땅을 하나자산 신탁에 맡기는 신탁계약을 맺었고, 화천대유가 돈을 빌릴 때 신탁된 땅을 담보로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수익권증서금액의 총합인 3213억 6000만 원이 일종의 빚보증인 셈이다.

이는 “민간사업자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이 지사 측 캠프 설명 자료와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이 개발용지 분양 계약을 맺

었다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7년 11월엔 화천대유가 아직 소유권을 갖지 못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해 땅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담보를 미리 제공한 것으로 업계에선 이례적인 일”이라며 “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냐”고 했다.

야권에선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이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또한 주택용지 계약을 하면서 별도의 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이날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2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
| 심 의 대 상 | 조선일보 2021년 10월 4일자 4면 「유동규 집 압수수색때, 검사만 먼저 들어가 2~3시간 면담했다」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 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하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이례적으로 검사가 먼저 들어가 유씨를 2~3시간 면담하거나,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등 검찰이 유씨 뒷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압수수색 당시, 유씨 주거지의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고, 유씨가 검사와 면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보도하였고, 이러한 검찰의 부실 압수수색 논란을 두고 마치 시정요구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p> <p>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유씨의 휴대전화를 경기남부경찰청이 습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다만 유씨와 면담한 인물이 ‘검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온라인에 게재한 동일한 내용의 기사 제목 등을 ‘검사’에서 ‘수사팀’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사전체가 허위라는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항변하였다.</p> <p>살피건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한 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명백하고, 피시정요구인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보았던 취재원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요구인이 향후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당사자를 미리 면담했다는 보도 내용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선거의 쟁점의 된 사안에 대해 기사 제목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경우로서, 독자나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p> |

이 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3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10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에 해당하는 수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일보 2021년 10월 4일자 4면>

보도내용

유동규 집 압수수색 때, 검사만 먼저 들어가 2~3시간 면담했다

검찰 대장동 수사 부실 압수수색 논란

검찰이 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지만, 앞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

지 못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유씨 자택 압수 수색 상황, 유씨가 집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 등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유씨가 머무르던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 압수 수색 상황부터 이례적이었다. 이 건물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팀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 유씨가 휴대

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졌고, 이후 한 검사가 유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 2~3 시간가량 유씨를 별도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 수색을 개시하고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관련 자료를 즉각 확보하는 통상적인 압수 수색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압수 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휴대전화)를 너무 허술하게 놓쳤다”며 “압수 수색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장시간 면담했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선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지인을 통해 이 오피스텔을 월세 50만 원에 계약한 뒤 혼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것도 이상하다는 말이 나온다.

검사의 별도 면담은 매우 이례적 유씨가 던진 폰은 최근 바꾼 것 수사팀, 쓰던 폰 알고도 확보 안해

檢내부 “중요 증거 허술하게 놓쳐 수사 확대할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

유씨의 오피스텔에는 창문이 2개가 있는데, 그중 한쪽 창문에서 던지면 1층 도로에 떨어지게 되는데 주변 방범 카메라에 낙하물이 포착된 것은 없었다고 한다. 다른 쪽 창문에서 던질 경우 같은 건물 5층 테라스로 떨어지는 구조인데, 5층 피부과를 통해서만 테라스 출입이 가

능하다고 한다.

건물 입주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런 상황을 검찰 관계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던진 휴대전화는 이후 서울 송파구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더는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씨 측 관계자는 3일 본지와 만나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최근 새로 개통한 것인데 기자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짜증나서 던진 것”이라며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했으나 검찰이 확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옛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이날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에서 “유씨가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유씨 휴대전화는 이번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다. 그 내용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은 수사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유씨가 거주지 압수 수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오피스텔을 구해 주소를 옮겨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또 수사팀이 유씨의 휴대전화도 아직 확보하지 않은 걸 보면 유씨 뒷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3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
| 심 의 대 상 | 중앙일보 2021년 10월 5일자 4면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 개발 때 도 특혜의혹」 및 5면 「민간사업자 분양수익 3000억 원 육박」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 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또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이 시장일 당시,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였을 뿐, 해당 사업과 무관함에도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전혀 청취하지 않아 공정성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나 공문 발송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또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p> <p>이에 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가 용도변경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당시 최종 결정권자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피했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구체적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명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으며, 보도 내용이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항변하였다.</p> <p>살피건대,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위법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p> <p>그러나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성남시의 개입으로 인해 연구원의 업무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해당 의혹은 주로 연구원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고,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제목 등이 다소 단정적이고, 의혹의 당사자인 성남시 나아가 시정요구인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것으로 인정된다.</p> |

이 유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6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경고결정문 게재 또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에 해당하는 수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The JoongAng

2021년 10월 05일
04면 (정치)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때도 특혜의혹

자연녹지 → 준주거지로 용도 조정
임대 부지, 일반분양으로 바뀌어
당시 이계명 시장이 고시권자
성남시 "불법 없었던 것으로 안다"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특혜 논란 속에 막대한 이익을 남긴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다.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올 6월 입주한 성남시 백현동 '관교 A아파트'(전용면적 84㎡ 이상 1223가구)다.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B민간사업자(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수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지구단위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계명 현 경

기지사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아파트 단지 개발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이한 점이 여럿이다.

B사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의계약을 거쳐 해당 부지(11만2861㎡)를 2187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1014㎡)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준상업지와 비슷한 '준주거지'로 상향 조정했고, 준주거지로 바뀐 뒤의 감정평가 금액은 4869억원으로 뛰었다.

이 프로젝트처럼 자연녹지에서 1~3종 주거지를 뛰어넘어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 조정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용적률 최대높이가 50m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관교A아파트 단지, 올 6월 입주했다. 현종선 기자

문'인데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 이하이고, 준주거지는 400% 이하여서다. 성남시가 이렇게 파격적인 증상향을 해준 명분은 '공공성'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

(17.9·11.3cm)

The JoongAng

2021년 10월 05일
05면 (정치)

민간사업자 분양수익 3000억원 육박

\'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을 제출했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란 '공약'은 1년여 만에 사라졌다. 이 부지의 매각 과정을 감사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당시 감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부당하게 민간업체의 영리 활동을 지원했다며, 실무자 징계(해임 1명, 정직 1명, 주의 2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배경에는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주장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국

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성남시의 매입자(B사) 협의로 공공기여 면적(기부채납)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 임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 공문을 한국식품연구원이 발송한 것은 "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때 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비를 막기 위해 공문 발송을 민간업체인 B사가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하도록 성남시가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직원이 퇴직하거나 부서를 옮겼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불법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B사업자는 준주거지

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316%로 높여 받았지만 해당 부지는 고도제한(서울 비행장 인근)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게 허용했고, 사업자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이 지난 5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해 감사를 발인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신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B사 관계자는 "성남시의 과도한 요구로 기부채납 조건인 R&D센터 부지를 예정보다 늘린 8000평으로 조성했고, 시민을 위한 공원도 1만 평이나 조성했기 때문에 사업자 수익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세종=김남준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18.9·11.3cm)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때도 특혜의혹 민간사업자 분양수익 3000억 원 육박

자연녹지 → 준주거지로 용도 조정
임대부지, 일반분양으로 바뀌어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고시권자
성남시 “불법 없었던 것으로 안다”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다. 대장동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올 6월 입주한 성남시 백현동 '관교 A아파트(전용면적 84㎡이상 1223가구)'다.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B민간사업자(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 원에 육박한다.

지구단위계획화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다른 아파트 개발 사업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점이 여럿이다.

B사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의 계약을 거쳐 해당 부지(11만 2861㎡)를 2187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 1014㎡)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다. B사도 자연녹지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은 가격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1014㎡)의 용도는 자연

녹지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준상업지와 비슷한 '준주거지'로 상향 조정했고, 준주거지로 바뀐 뒤의 감정평가금액은 4869억 원으로 뛰었다.

이 프로젝트처럼 자연녹지에서 1~3종 주거지를 뛰어넘어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조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이하이고, 준주거지는 400%이하여서다. 성남시가 이렇게 과격적인 종상향을 해 준 명분은 '공공성'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공공성 확보 위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계획을 제출했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란 '공익'은 불과 1년여 만에 사라졌다. 이 부지의 매각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당시 감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부당하게 민간 업체 영리 활동을 지원했다며, 실무자 징계(해임 1명·정직 1명·주의 2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배경에는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주장이다. 연구원은 국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성남시와 매입자(B사) 협의로 공공기여 면적(기부채납)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 임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 공문을 한국식품연구원이 발송한 것은 “임대에서 일반 분양 전환할 때 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공문 발송을 민간 업체인 B사가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하도록 성남시가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직원의 퇴직 등으로 현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불법과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B사업자는 준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316%로 높여 받았지

만 해당 부지는 고도제한(서울 비행장 인근)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게 허용했고, 사업자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이 지난 5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B사 관계자는 “성남시의 과도한 요구로 기부채납 조건인 R&D센터부지를 예정보다 늘린 8000평으로 조성했고, 시민을 위한 공원도 1만 평이나 조성했기 때문에 사업자 수익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4 |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
| 심 의 대 상 | 조선일보 2021년 10월 6일자 4면 「대장동 원주민 “유동규, 사업 당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라 했다”」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하 ‘유씨’)이 시정요구인의 측근이고, 원주민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당시 유씨가 ‘내 말이 시정요구인의 말’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유씨가 측근이라는 보도 내용은 근거 없는 추측이고, 대장동원주민의 발언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p> <p>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언론의 보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 김은혜 의원이 지난 6일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유씨가 시정요구인의 측근이었다는 정황을 보도하였을 뿐,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p> <p>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시정요구인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그 보도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보도가 비록 의혹의 형식이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p> <p>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대장동 원주민 “유동규, 사업 당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라 했다”



서로 가까웠던 정황 곳곳에서 드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씨에 대해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유씨에게 “유씨는 측근이었던 정황이 나와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행과 같은 100% 공공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유씨에 유리하리라는 것으로 유씨의 의도,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있다”고 유씨는 측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씨에 대해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유씨에게 “유씨는 측근이었던 정황이 나와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행과 같은 100% 공공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유씨에 유리하리라는 것으로 유씨의 의도,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있다”고 유씨는 측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유씨에게 “유씨는 측근이었던 정황이 나와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행과 같은 100% 공공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유씨에 유리하리라는 것으로 유씨의 의도,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있다”고 유씨는 측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씨에 대해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유씨에게 “유씨는 측근이었던 정황이 나와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행과 같은 100% 공공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유씨에 유리하리라는 것으로 유씨의 의도,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있다”고 유씨는 측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유씨, 측근으로 볼수없어”
유씨 “유씨, 측근으로 볼수없어”
유씨 “유씨, 측근으로 볼수없어”

<조선일보 2021년 10월 6일자 4면>

보도내용

대장동 원주민 “유동규, 사업 당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라 했다”

서로 가까웠던 정황 곳곳에서 드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와 유씨가 가까운 사이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재와 같은 민관(民官) 합동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래 유씨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5일 “유씨는 측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012년 5월 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을 공영 개발로 하겠다고 했지만, 유동규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이 민관 공동 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이 시장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유동규)가 느닷없이 이 사업에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키는 개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시장과 측근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3년 뒤인 2015년 사업자를 선정하며 본격화한 대장동 개발은 유씨 주장처럼 민관 합작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유씨가 이 지사의 생각을 바꿀 만큼 영향력을 가진 측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지시를 받은 성남시의원들이 100% 공공 개발을 포기하도록 집요한 압력을 넣어 예산을 통과시키

지 않는 등 시정까지 방해했다”며 “이런 압력에도 이 지사가 공공·민간 복합 개발을 성사시킨 것”이라고 했다. 유씨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계속되는 시의회의 반대로 100% 공공 개발을 관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野 “유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때 이재명이 ‘동규야 이리와’라고 해”
李측은 “유씨, 측근으로 볼 수 없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4일 밤 페이스북에서 “유동규 씨가 이 지사의 측근 중 측근이라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 직원들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 시절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박 의원은 “여러 경기도청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유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을 때 이 지사가 수여식 절차와 직원들을 물리고 ‘동규야, 이리 와라’ 하면서 바로 티타임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도청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유씨는 평소 ‘이 지사가 넘버1, 정진상(이 지사 대선 캠프 총괄 부실장)이 넘버2, 내가 넘버3’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익명의 신빙성 없는 말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수없이 많은 상황에 배석했지만 이렇게 말쑤

하신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유씨가 대장동 사업 담당자로 일하면서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5일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대장동 원주민 녹취록을 보면, 원주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았고,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가라고 했다”며 “유동규가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하니 (유씨가)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민주당 부대변인 시절이던 2009년 유씨와 민주당 인사 간담회를 주선한 일도 있었다고 5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2009년 9월 김진표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유씨와 정책 간담회를 했다. 당시 유씨는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 직함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2009년에는 분당의 핵심 의제가 아파트 리모델링이었다”며 “정치권이 관심 갖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5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
| 심 의 대 상 | 중앙일보 2021년 10월 6일자 4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참여 성남시서 사전에 인지한 정황」제하의 기사 |
| 주 문 |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2014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남욱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련자가 참여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성남시 도시개발단 사업추진과장이 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과장 보도하였고, 시정요구인이나 성남시가 남욱 변호사 등의 참여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객관성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p> <p>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2014년 8월 29일 성남시의 회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타 언론사에도 해당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발송한 문서 등 해당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다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기재된 사실을 위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를 적시하였다거나, 시정요구인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참여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은폐하여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p> <p>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참여 성남시서 사전에 인지한 정황

7년 전 시의회 “민간업자 참여” 문자 사업추진과장 “할 수 있다” 답변
원주민 “토지주 설득 때 남쪽 동행” 추정하고 있다.

2014년 당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남쪽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련 세력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남시가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2014년 8월 열린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강한구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려면) 민간업자들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통과되면서 강릉 차고 떠나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김용구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단 사업추진과장은 “떠나간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강 시의원이 “아직도 있느냐”고 묻자, 김 과장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할 때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그 사람들이 민간 시행을 위해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로비가 무위로 끝나는 것 아니겠냐”고 재차 묻자 김 과장은 “공공시행이라도 (민간업자들이) SPc 구성에 참여하면...”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를 놓고 지역 정가에선 강 시의원과 김 과장의 문답 속 ‘민간업체’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화천대유 세력인 것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토지를 사들이며 민간개발을 추진했다. 201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뒤 공영개발 계획을 밝혔을 당시에는 이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한 부동산개발회사 ‘씨세븐’과 이 회사가 설립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등이 지주들을 설득해 상당수의 땅을 확보한 상태였다. 남 변호사는 ‘씨세븐’과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 회계사도 관계사 대표를 맡았다.

성남시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이들이 참여한 화천대유가 SPc인 ‘성남의 풀’에 참여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 5호로 참여해 각각 1007억원과 644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대장동의 당시 원주민들은 “당시에 땅 매입 작업을 하던 이들이 전복 등 선물을 돌리면서 토지주를 설득했는데 그때 남 변호사가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캠프 대변인인 성남시의회 이기인 시의원은 “당시 대장동에서 민간개발을 추진한 곳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화천대유 세력이 참여한 한 곳밖에 없었다”며 “(회의록 속 시의원과 시 관계자 문답은) 성남시가 당시 이들이 SPc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11.3*20.6)cm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참여 성남시서 사전에 인지한 정황

7년 전 시의회 “민간업자 참여” 문자
사업추진과장 “할 수 있다” 답변
원주민 “토지주 설득 때 남옥 동행”

2014년 당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남옥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련 세력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남시가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2014년 8월 열린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강한구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려던)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통과되면서 강통 차고 떠나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김응구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단 사업추진과장은 “떠나간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강 시의원이 “아직도 있느냐”고 묻자, 김 과장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할 때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그 사람들이 민간 시행을 위해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로비가 무위로 끝나는 것 아니겠냐”고 재차 묻자 김 과장은 “공공시행이라도 (민간업자들이) SPC 구성에 참여하면…”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를 놓고 지역 정가에선

강 시의원과 김 과장의 문답 속 ‘민간업체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화천대유 세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토지를 사들이며 민간개발을 추진했다. 201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뒤 공영개발 계획을 밝혔을 당시에는 이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한 부동산개발회사 ‘씨세븐’과 이 회사가 설립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등이 지주들을 설득해 상당수의 땅을 확보한 상태였다. 남 변호사는 ‘씨세븐’과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 회계사도 관계사 대표를 맡았다.

성남시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이들이 관여한 화천대유가 SPC인 ‘성남의뜰’에 참여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 5호로 참여해 각각 1007억 원과 644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대장동의 당시 원주민들은 “당시에 땅 매입 작업을 하던 이들이 전복 등 선물을 돌리면서 토지주를 설득했는데 그때 남 변호사가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캠프 대변인인 성남시의회 이기인 시의원은 “당시 대장동에서 민간개발을 추진한 곳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화천대유 세력이 참여한 한 곳 밖에 없었다”며 “(회의록 속 시의원과 시 관계자 문답은) 성남시가 당시 이들이 SPC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6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
| 심 의 대 상 | 조선일보 2021년 10월 7일자 35면 「‘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제하의 사실 |
| 주 문 |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시정요구인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던 판결을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났고, 무죄 판결 후 넉 달 만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되는 등 시정요구인의 판결과 관련해 로비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시정요구인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을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p> <p>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제기된 의혹은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심에서 비롯되었고, 위 사실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권 전 대법관이 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바, 시정요구인이 보도의 주요대상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p> <p>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공직 수행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전 대법관을 비판하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도가 불공정하여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p> <p>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요즘 해명해야 할 일이 많아 입이 열 개라도 모자랄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그가 엮힌 사건은 ‘천문학적 이익 독점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대장동 의혹만큼이나 큰 문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와 대법원의 도덕성이 통째로 걸려 있다. 그런데 그는 범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변명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그가 유죄 의견을 냈다면 이 지사는 대선 출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대한 판결을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수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면담할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김씨의 부동산 개발회사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문에 세 차례 언급된 상태였다. 권 전 대법관이 회사의 정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그를 만났다.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대법원에서 이 지사가 무죄가 된 지 넉 달 만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세계 문명국 대법관 중

에 이런 처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김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결코 지나친 추측이라고 할 수 없다. 로비가 있었다면 돈이나 다음 정권에서의 자리가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법원 역사에 전대미문의 일이다. 이 심각한 의문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해명해야 할 사람이 권 전 대법관이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 그가 침묵하는 사이 김씨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간 것”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고문으로 일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야당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그에 대해서만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훨씬 심각한 혐의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말고도 이번 일에 얽혀 한국법조계를 추락시킨 법틀기는 여럿이다. 검찰총장, 법무차관, 특검, 검사장 출신도 포함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뒤에 숨어 있다 여당 정권이 연장되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럴 수 없을 것이다.

(17.6×10.5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7일자 35면〉



보도내용

‘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요즘 해명해야 할 일이 많아 입이 열 개라도 모자랄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그가 엮힌 사건은 ‘천문학적 이익 독점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대장동 의혹만큼이나 큰 문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와 대법원의 도덕성이 통째로 걸려 있다. 그런데 그는 범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변명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유무

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그가 유죄 의견을 냈다면 이 지사는 대선 출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대한 판결을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수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면담할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김씨의 부동산 개발회사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문에 세 차례 언급된 상태였다. 권 전 대법관이 회사의 정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그를 만났다.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대법원에서 이 지사가 무죄가 된 지 넉 달 만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세계 문명국

대법관 중에 이런 처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김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결코 지나친 추측이라고 할 수 없다. 로비가 있었다면 돈이나 다음 정권에서의 자리가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법원 역사에 전대미문의 일이다. 이 심각한 의문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해명해야 할 사람이 권 전 대법관이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 그가 침묵하는 사이 김씨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간 것”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고문 변호사로 일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야당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그에 대해서만 “사실무근”이라고 했을 뿐이다. 훨씬 심각한 혐의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말고도 이번 일에 얽혀 한국 법조계를 추락시킨 법률가는 여럿이다. 검찰총장, 법무차관, 특검, 검사장 출신도 포함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뒤에 숨어 있다 여당 정권이 연장되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럴 수 없을 것이다.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7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
| 심 의 대 상 | 조선일보 2021년 10월 7일자 34면 「'버럭' 이재명이 유동규의 '배은망덕'에 왜 잠잠할까」 제하의 칼럼 |
| 주 문 |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의 평소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으로 자신을 궁지에 빠뜨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하 '유씨')에게 화를 내지 않거나 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정요구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만을 담았고, 유씨가 시정요구인의 측근이라는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p> <p>살피건대, 필자가 칼럼을 통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불같이 화를 낸다', '폭언을 퍼부었을 것이다' 등의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나,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가 칼럼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분은 평가적 표현에 불과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p> <p>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버럭’ 이재명이 유동규의 ‘배은망덕’에 왜 잠잠할까

김창규 칼럼



는술주권

유동규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지 아닌지는 두 사람이 판단할 문제다. 제3자가 가타부타 말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처음 당선된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유씨는 성남시살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인 유씨가 공직 경력이 전혀 없다는 자격을 문제 삼았지만 이재명 시장이 밀어붙였다. 이 지사가 2014년 재선에 도전할 때 유씨는 선거 캠프에 갔다가 기획본부장 자리로 돌아왔다. 그사이 기획본부장 자리는 비어 있었다. “기획본부장 감투가 유동규 개인 몫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10년간
요직 앉히며 신뢰 쏟았는데
투기 세력 결탁, 대박 챙기며
恩人의 대선 가도에 재 뿌려
성질 못 다스리는 추 지사가
유씨에게 화 안 내는 까닭 궁금

이재명 성남시장 1기 때부터 유동규씨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이 지사를 할 이재명 씨는 2012년 6월 이 지사 아내 김혜경씨에게 전화통화의 동생 주변엔 어떻게 유동규 같은 사람밖에 없느냐고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 통화에 서 이재전 씨는 “(동생이 보낸) 문자를 보니 유동규 많이 사랑합디다”라는 말도 했다. 이재전 씨는 제수보다 먼저 동생에게 유동규씨 ‘힘담’을 늘어 놓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원하게 유동규씨를 감싸고 편드는 담판을 보겠다는 뜻이다.

흔날 이 지사는 형과의 불화 원인에 대해 “성남시의 인사 문제까지 개입해서 들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을 보면 인사 문제가 당시 지사가 유동규씨였던 셈이다. 백근에 전 대통령이 동생 지만

가 화순살리할 누나에게서 태어났으리다 남매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사연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유동규씨는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연했다. 이 지사가 중앙대 신세자 백백이 방법을 함께 찍었던 광고여자를 앉혀려 했던 내로 그 자라다. 이 지사가 유씨에게 임명장을 줄 때 주변 사람들을 둘러며 “유동규, 이리 와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9년 1월, 이 지사는 트위터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국내 최초 파괴출산해 화해”라는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산하 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는 존편을 달았다. 유 사장이 일 잘한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에 “3년 만에 금강령 양대 둘은 이재명-유동규의 부트레비법”이라는 기사도 트위터에 공유했다. 이재명, 유동규 이름이 나란히 제목에 등장하면서 로트드니딩 공개처럼 비친다. 기사에는 “유 시장은 이 지사와 복상이라 측근”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 지사가 이 기사를 트위터에 소개한 것은 내용에 공감하고 만족했다는 뜻이다.

이 지사가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온 유동규씨가 이 지사를 궁지에 빠트렸다. 화천대우가 대박을 타르던 것은 유동규씨가 기획본부장 시절 수익 배분 구조를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지분이 60%+1주인 성남도시개발정자는 1822억원만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수익은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우와 관계사인 천화물원에 돌아가도록 만

들었다. 공사에서 대당동 사업을 담당했던 개발 2차장은 화천대우에 과도한 수익이 들어갈 수 있다”며 안전요원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담담을 2차에서 1차로 옮기면서 화천대우 횡재 구조를 유지시켰다. 유 본부장은 그 댓가로 200여명을 약속받았다는 녹취록이 있기 하면, 구속영장에는 이미 59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대쪽도 나온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리안 이재명 지사의 대표 상용이 단군 이래 최대 한탄 투기 로 근두마 일었다. 이 지사는 투기 세력을 때려잡자 못하는 공무원 뜻을 때렸는데, 이 지사의 부하 직원들은 야에 투기 세력과 한탄 대박을 끌고왔다. 이 지사가 자신의 말 밑에서 발췌된 입장을 까먹게 불렀고 주 경하면서 “이재명이 일 잘한다”는 신뢰와 화상은 로 드노고 있고 모두 유동규씨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사가 뒤따라하면 화를 낸다. 형수에게 차마 양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가동들이 팔고팔고를 질투하 마고 주에 끼었던 유(산)를 빼고 안양를 풍문시키기도 했다. 유동규씨는 이 지사의 신뢰를 투기 세력과의 이합(聯合)에 이용했다. 본스의 이명박 지사처럼 유씨의 ‘배은망덕’에 본을 사이지 못하고 같은 폭언을 ‘부묘’를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잠했다. 자신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형제사 표현을 쓰며 유씨에 대한 신뢰 소리를 터뜨리다 안 한다. 그래서 공금에 대한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씨의 심사를 신뢰야 할 무슨 사연이도 있는 것일까.

DR.HLSSON

<조선일보 2021년 10월 7일자 34면>

보도내용

‘버럭’ 이재명이 유동규의 ‘배은망덕’에 왜 잠잠할까

성남시장, 경기지사 10년간
요직 앉히며 신뢰 쏟았는데
투기 세력 결탁, 대박 챙기며
恩人의 대선 가도에 재 뿌려
성질 못 다스리는 추 지사가
유씨에게 화 안 내는 까닭 궁금

유동규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지 아닌지는 두 사람이 판단할 문제다. 제3자가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이 지사가 유씨를 유난히 아끼고 챙겨왔다는 건 복수의 ‘팩트’로 확인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유씨는 성남 시설관리공단(성남 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에 임명된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인 유씨가 공직 경력이 전혀 없다는 자격을 문제 삼았지만 이재명 시장이 밀어붙였다. 이 시장이 2014년 재선에 도전할 때 유씨는 선거 캠프에 갔다가 기획본부장 자리로 돌아왔다. 그사이 기획본부장 자리는 비어 있었다. “기획본부장 감투가 유동규 개인 몫이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 1기 때부터 유동규 씨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이 지사의 형 이재선 씨는 2012년 6월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주변엔 어떻게 유동규 같은 사람밖에 없느냐”고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 통화에서 이재선 씨는 “(동생이 보낸) 문자를 보니 유동규 많이 사랑합디다”라는 말도 했다. 이재선 씨는 제수보다 먼저 동생에게 유동규 씨 ‘힘담’을 늘어 놓았는데, 이재명 시장은

형에게 유동규 씨를 감싸고 편드는 답글을 보내왔다는 뜻이다.

훗날 이 지사는 형과의 불화 원인에 대해 “성남시의 인사 문제까지 개입하려 들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을 보면 인사 문제의 당사자가 유동규 씨였던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최순실 씨를 누나에게서 떼어놓으려다 남매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사연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유동규 씨는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다. 이 지사가 중앙대 선배이자 떡볶이 떡방을 함께 찍었던 황교익 씨를 앉히려 했던 바로 그 자리다. 이 지사가 유씨에게 임명장을 줄 때 주변 사람들을 물리며 “동규야, 이리 와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9년 1월, 이 지사는 트위터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국내 초 과격 출산책 화제’라는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산하 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는 찬평을 달았다. 유 사장이 일 잘한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엔 “3년 만에 금한령 방패 뚫은 이재명·유동규의 투트랙 비법”이라는 기사도 트위터에 공유했다. 이재명, 유동규 이름이 나란히 제목에 등장하면서 파트너십 관계처럼 비친다. 기사에는 “유 사장은 이 지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 지사가 이 기사를 트위터에 소개한 것은 내용에 공감하고 만족한다는 뜻이다.

이 지사가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온 유동규 씨가 이 지사를 궁지에 빠뜨렸다. 화천대유가 대박을 터뜨린 것은 유동규 씨가 기획본부장 시절 수익 배분 구조를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

이다. 지분이 (50%+1주)인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1822억만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수익은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개발 2처장은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유 본부장은 담당을 2처에서 1처로 옮기면서 화천대유 횡재 구조를 유지시켰다. 유 본부장은 그 대가로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녹취록이 있는가 하면, 구속영장에는 이미 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대목도 나온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던 이재명 지사의 대표 상품이 ‘단군 이래 최대 한탕 투기’로 곤두박질쳤다. 이 지사는 투기 세력을 때려잡지 못하는 공무원 탓을 해 왔는데, 이 지사의 부하 직원은 아예 투기 세력과 한탕 대박을 공모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발 밑에서 벌어진 일을 까맣게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이 일 잘한다”는 신화도 허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모두 유동규 씨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심사가 뒤틀리면 불같이 화를 낸다.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기자들이 꺾끄러운 질문을 한다고 귀에 끼었던 수신기를 빼고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다. 유동규 씨는 이 지사의 신뢰를 투기 세력과의 야합(野合)에 이용했다. 평소의 이재명 지사라면 유씨의 ‘배은망덕’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갖은 폭언을 퍼부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잠하다. 자신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절제된 표현을 쓰며 유씨에 대해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한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의 심사를 살펴야 할,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8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
| 심 의 대 상 | 중앙일보 2021년 10월 8일자 4면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줬다더니 20억 준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한 단체가 ‘시정요구인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변호사에게 3억 원 가량의 수입료를 줬다는 주장과 달리, 20억 원대의 거액을 준 의혹이 있다며 시정요구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고발인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이며, '이벤트'에 불과한 고발장 제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여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고발인이 증거로 제시한 통화내용을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p> <p>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고발인이 원외정당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였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기사에 불과하여 허위를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정요구인측의 반론이 이미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양쪽의 주장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요구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p> <p>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썼다더니 20억 준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이 캠프 “명백한 허위, 후보 음해 의도” 친문 성향의 단체가 7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에게 20억 원대의 거액 수입료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국 개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말 (지

난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 원이라고 했던 이 지사가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 원은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 단체는 성남 지역 정당이자 지난해 총선 때 비례대표 20번으로 출마했던 원외정당이다. 이 단체는 이 지사 사건을 맡았던 A변

호사와 제보자 B씨 간의 대화가 담긴 5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에는 “이 지사 사건 수입료로 20여억 원은 받지 않았느냐”는 B씨 질문에 A변호사가 여러 차례 “아, 네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이와 별도로 A변호사의 다른 사건 의뢰인이 통화에서 “A변호사가 이 지사 수입

료로 현금과 주식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사 한 명에게 2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의 존재,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초

호 변호인단 면면으로 볼 때 이 지사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이 단체의 고발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경선 개입 및 후보 음해 목적의 고발”이라며 “고발 단체가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02-246-5200)

<중앙일보 2021년 10월 8일자 4면>

보도내용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썼다더니 20억 준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이 캠프 “명백한 허위, 후보 음해 의도”

친문 성향의 단체가 7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에게 20억 원대의 거액 수입료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국 개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말 (지난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 원이라고 했던 이 지사가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여 억 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단체는 성남 지역 정당이자 지난해 총선 때 비례대표 20번으로 출마했던 원외정당이다.

이 단체는 이 지사 사건을 맡았던 A변호사와 제보자 B씨 간의 대화가 담긴 5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에는 “이 지사 사건 수입료로 20여 억 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B씨 질문에 A변호사가 여러 차례 “아, 네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이와 별도로 A변호사의 다른 사건 의뢰인이 통화에서 “A변호사가 이 지사 수입료로 현금과 주식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사 한 명에게 2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의 존재,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 면면으로 볼 때 이 지사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이 단체의 고발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경선 개입 및 후보 음해 목적의 고발”이라며 “고발 단체가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9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
| 심 의 대 상 | 조선일보 2021년 10월 8일자 5면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로 한명에 23억 준 정황”」제하의 기사 |
| 주 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 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한 시민단체가 ‘시정요구인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번호를 맡았던 A 변호사에게 3억 원 가량의 수입료를 줬다는 주장과 달리, 20억 원 대의 거액을 준 의혹이 있다’며 시정요구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고발인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이며, '이벤트'에 불과한 고발장 제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여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고발인이 증거로 제시한 통화내용을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p> <p>이에 피시정요구인은 단체의 성격은 보도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며, 해당 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존재했으며, 다각적인 노력으로 후보자의 반론을 담았다고 항변하였다.</p> <p>살피건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적격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후보자에게 위법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의혹의 당사자인 후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제목 등에 있어서도 균형을 갖춰 독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판결 2001도6138 등 참조)</p> <p>그러나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고발인과 익명의 취재원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보도하였다고는 하나, 보도의 제목 등이 다소 단정적이고, 의혹의 당사자인 시정요구인의 입장이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이지 못하여, 해당 의혹이 모 단체의 고발장 접수 수준을 넘어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p> |

이 유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10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에 해당하는 수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8일
제4면 (종합)

신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로 한명에 23억 준 정황”

(현금 3억·주식 20억)

“수임료 3억 해명 거짓”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로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이 지사 부부 사건을 맡았다.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 이후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논란’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아내 김혜경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소셜미디어 ‘최경규 김씨’의 계정주라는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증거 부족이라며 김씨를 기소 중지 처리했다. 발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전과이런 점이 불렀다”는 말이나

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이 지사 재판의 1심, 2심, 파기환송심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가 전환사채로 보이는 20억원어치를 포함해 23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변호사에게 본인 사건을 의뢰하

면서 친분을 쌓은 A씨를 통해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가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면 전환사채일 가능성이 크다. 이 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을 수임한 2018년 7월 이후, 20억원 이상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2018년 11월 3년 만기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증권기업 C사 정도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 C사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 변호사 외에도 C사의 다른 계열사에는 이 지사 캠프 소속 인사 여러 명이 비교적 최근까지 사외이사로 있었다.

이 변호사는 본지에 “수임료는 정상적으로 계약도 받아 세금 처리했다”며 “전환사채를 받은 적도 없고 금액도 언급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단체가 적극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과 주식 20억 상당 뒤… 뒷받침할 녹취록 제출할 예정”

李 변호사 “주식 받은적 없다”

李 지사측 “명백한 허위사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 지사 측으로부터 현금 3억과 주식 20억원어치 등 23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이 7일 검찰에 접수됐다. 진문(眞文)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인) 이태형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한 뒤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2년여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이 지사는 지난 8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아내인 캠프 측과 살전을 벌이며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제재산은 3억원 줄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3억여원이 변호사비라는 위지였다. “깨어있는 시민연대” 측은 그 주장이 허위라면서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2018년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

027.9-02.81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8일자 5면〉

제4부 | 심의·의결사례

323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로 한명에 23억 준 정황”

“수임료 3억 해명 거짓”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시민단체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과 주식 20억 상당 줘… 뒷받침할 녹취록 제출할 예정”
 이변호사 “주식 받은적 없다”
 이지사측 “명백한 허위사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 지사 측으로부터 현금 3억과 주식 20억 원어치 등 23억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이 7일 검찰에 접수됐다. 친문(親文)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인) 이태형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 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한 뒤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2년여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이 지사는 지난 8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캠프 측과 설전을 벌이며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 3000만 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 줄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3억여 원이 변호사비라는 취지였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측은 그 주장이 허위라면

서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2018년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이 지사 부부 사건을 맡았다.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 이후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논란’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아내 김혜경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소셜미디어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라는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증거 부족이라며 김씨를 기소 중지 처리했다. 이에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박문까지 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전관이란 점이 통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이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 선거법사건 재판의 1심, 2심, 파기환송심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가 전환사채로 보이는 20억 원어치를 포함해 23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변호사에게 본인 사건을 의뢰하면서 친분을 쌓은 A씨를 통해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가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면 전환사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을 수임한 2018년 7월 이후, 20억 원 이상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2018년 11월 ‘3년 만기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중견기업 C사 정도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 C사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 변호사 외에도 C사의 다른 계열사에는 이 지사 캠프 소속 인사 여러

명이 비교적 최근까지 사외이사로 있었다.

이 변호사는 본지에 “수입료는 정상적으로 계좌로 받아 세금 처리했다”며 “전환사채를 받은 적도 없고 금액도 언급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단체가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10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동아일보) |
| 심 의 대 상 | 동아일보 2021년 10월 8일자 4면 「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 이익 환수 장치」 제하의 기사 |
| 주 문 |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중, 대장동 개발 사업만이 초과이익 발생 시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민간이 모든 초과이익을 독식했고, 공공의 관리·감독이 전무해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시정요구인 간의 연관성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결정을 요구하였다.</p> <p>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권은희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피시정요구인이 해당 자료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허위를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시정요구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성남시장이었던 시정요구인이 연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장치나 관리·감독 직원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독식했다’ 또는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등의 표현이 단순한 과장 또는 수사적 표현으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p> <p>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이익 환수 장치

2008~2015년 사업 들여다보니
의왕 백운밸리-하남 풍산 등 4곳
수익 늘어나면 지분만큼 배분 구조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 다른 민관개발사업에는 환수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사업만 유독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됐던 셈이다.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

동 등 5개 사업지 가운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민관이 설립한 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만큼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남시는 2008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서 사전 확정 이익 210억 원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2013년 개발에 참여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성남시는 총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미리 정한

1822억 원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전체 수익이 늘어도 공공의 몫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모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 사전 확정 이익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날 경우 지분에 따라 나누는 조항이 있었다면 공공 환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과정도 민간에 유리하도록 짜였다. 의왕 백운밸리 등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AMC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공공의 관리 감독이 정무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김호경 kimhk@donga.com · 최동수·정순규 기자

(21.10.10.4cm)

<동아일보 2021년 10월 8일자 4면>

보도내용

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이익 환수 장치

2008~2015년 사업 들여다보니
의왕 백운밸리-하남 풍산 등 4곳
수익 늘어나면 지배만큼 배분 구조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 다른 민관개발사업에는 환수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사업만 유독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됐던 셈이다.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

업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사업지 가운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민관이 설립한 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만큼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남시는 2008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서 사전 확정 이익 210억 원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2013년 개발에 참여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성남시는 총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미리 정

한 1822억 원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전체 수익이 늘어도 공공의 몫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모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 사전 확정 이익뿐 아니라 초과 수익이 날 경우 지분에 따라 나누는 조항이 있었다면 공익 환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과정도 민간에 유리하도록 짜였다. 의왕 백운밸리 등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AMC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공공의 관리 감독이 전무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11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동아일보) |
| 심 의 대 상 | 동아일보 2021년 10월 14일자 1면 1.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제하의 기사 (제1기사) 2. 「대장동 국감」 앞둔 이재명, 쏟아진 질문 세례」 제하의 사진기사 (제2기사) |
| 주 문 |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하는 <동아일보> 1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제1기사의 부제 「檢, 계좌추적서 금전거래 내역 확보」와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 중 제1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낸 109억 중 일부가 박영수 전 특별감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제1기사를 보도하며, 제1기사의 제목과 본문이 제2기사를 둘러싼 형태로 게재하였다. 시정요구인은 자신과 무관한 사안의 기사(제1기사)에 시정요구인의 사진(제2기사)을 배치하여 마치 한 건의 기사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제1기사와 제2기사는 별개의 기사이고, 뉴스가치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기사를 배치하였을 뿐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두 심의대상기사의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기사로 인식되어, 박영수 전 특별감사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기사가 시정요구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기사의 크기와 게재 지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정요구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0조(사진게재)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10월 14일자 1면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이재명 후보자의 사진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배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기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유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및 제10조(사진기재) 위반]



1920년 4월 1일 창간 제31143호 45면 인쇄 02-2000-0114 구독·배포 1989-2020 since 1920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특검판)

檢, 계좌추적서 금전거래 내역 확보

인척 분양사, 김민배에 109억 받아 20억 밀린 토목업체에 100억 상환 차에 일부 지급된 듯- 대가성 수사 분양사측 “하이 빌러존 돈 같은 것”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정 특별검사(사진)가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공물을 받은 단서를 결합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팀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대정동 7법원 의뢰 경당수사(법정 김태훈 4차장 겸사는 최근 계좌추적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2018년 이후 경기 성남시 대정동 개발 인(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대유)가 시행한 대정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하고 있으며, 박 전 특검은 2016년 13월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원안 채무를 고문은 지냈다.

분양대행업체는 대정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민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8%인 100억 원을 되갚는 수산한 자금 거래를 한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공물이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낸 100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분양대행업체와 토목업체 간에 20억 공물이 동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대정동 국감” 일문 이재명, 쏟아진 질문 세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성원간담회 참석차 국회에 출근 서울 국회에 도착했다. 뒤 추방은 이 자리에서 강도도에 대정동 개발사업 취재 의혹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비판하며 “사위(사)가 어느 부위(부)를 뒤지는 줄”이라고 했다. (사진:동아일보)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 인 2012, 2013년 사업자금을 (이모 대표)가 빌렸고, 그 이후에 같은 적이 있다”면서 “특검 근무 이전에 돈을 물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대정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도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전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앞서 9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

경감사에서 박 전 특검을 이른바 ‘50억 약속 글방’ 중의 한 명으로 지목하자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거나 분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만을 냈다. 검찰은 김 씨가 유정규 전 총(총)대행업사 사장 직(직)에게 지급(지)한 약속(약) 700여 원과 과(과)상도 의(의)원의 아들(아)에게 지급(지)한 50여 원 등 총 700여 원을 김 씨의 구(구)속영양 범죄(범죄) 사실(사실)에 포함(포함)시켰다. 과(과) 위(위)은 13일 폐

이스파에 “선과(과)로 논(논)급(급)하지 않다”고도 모(모)를 일(일)이라(라) “저는 연(연)비(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일)에도 관(관)여(여)하지 않았다”고 반(반)박(박)했다. 서울중앙지(지)법은 김 씨의 공(공)물(물) 도(도)용(용) 수(수)사(사)를 위(위)해 대(대)검(검)청(청)에 검사(사) 2, 4명 의 중(중)원을 오(오)구(구)에 수(수)사(사)된 검사(사) 기준 18명(명)에 서 20명 이상으로 늘(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유)문(문) onemove@donga.com·고(고)도(도)에 43-4면(면) 관련(관)기사

〈동아일보 2021년 10월 14일자 1면〉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檢, 계좌추적서 금전거래 내역 확보
인척 분양사, 김만배에 109억 받아
20억 빌린 토목업체에 100억 상환
차례 일부 지급된 듯…대가성 수사
분양사측 “차이 빌려준 돈 값은 것”**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 등에서 박 전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2018년 이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하고 있으며,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분양대행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

에 보낸 109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분양대행업체와 토목업체 간에 오간 금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인 2012, 2013년 사업자금을 (이모 대표가) 빌렸고, 그 이후에 갚은 적이 있다”면서 “특검 근무 이전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도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전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앞서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을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중의 한 명으로 지목하자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700억 원과 광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김 씨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광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성과급이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검사 3, 4명의 증원을 요구해 수사팀 검사가 기존 18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재심1 (원결정 제20대 대선-시심11) |
| 재심청구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동아일보) |
| 재심청구대상 | 동아일보 2021년 10월 14일자 1면 1.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제하의 기사 (제1기사) 2. 「「대장동 국감」 앞둔 이재명, 쏟아진 질문 세례」 제하의 사진기사 (제2기사) |
| 주 문 | 1. 우리 위원회의 제20대 대선-시심11 결정에 따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주의사실 게재 명령을 취소한다. 2. 위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 한다. |
| 재심청구취지 | 제20대 대선-시심11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
| 이 유 | 1.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대상기사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제10조(사진게재)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바 없고, 설혹 위반의 점이 조금 이나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주의사실 게재'에 이르지 않으므로,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 원심 결정(제20대 대선-시심11)의 취소를 구하였다. 2.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등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등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 등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공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실에 어긋나거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7. 30. 2013헌가8 참조) 나.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기사에 기술된 언어적 표현부터 사진이나 이미지, 기사의 배치 등 편집에 이르기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라면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보도의 결과물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심 |

이 유 청구대상기사 제1기사와 제2기사의 중첩된 배치로 인해 독자들이 하나의 기사로 오인하여 시정요구인에 대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우리 위원회의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후보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 '선거기사'가 아니고, 제1기사와 제2기사가 별개이므로 오인의 가능성이 없으며,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 편집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사진을 담고 있지 않은 기사에 사진 게재 관련 조항을 적용한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재조치의 수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심청구인 이외에도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같은 면에 중첩하여 배치한 신문 기사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편집방식이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언론·출판 자유의 보장의 관점 하에서 언론계의 관행이라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고 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대상기사가 관행에 따른 편집에 의해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행에 대한 제재는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재조치의 수위를 다시 정할 이유가 있다.

나.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선거기사의 공정성 유지에 두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우리 위원회가 언론의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함께 고려한 비례원칙 하에서 달성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주의사실 게재'를 통해서만 해당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심청구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재심청구인에게 제재의 이유 등을 설명하고 규정 위반을 지적하였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공정보도 촉구'라는 목적도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이에 우리 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주장 일부를 수용해 제재조치를 조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의 결 번 호 | 제20대 대선-시심12 |
| 시정요구인 | 이재명 |
| 피시정요구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
| 심 의 대 상 | <p>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면 「정자동 호텔, 용역·시행사 모두 경기주택공 부사장 관련회사」 제하의 기사(제1기사) 2. 4면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도’ 나오기 직전 추, 유동규와 10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 제하의 기사(제2기사) 3. 4면 「원희룡 “유동규, 폰 버리기전 이재명 복심과 2시간 통화했다”」 제하의 기사(제3기사) 4. 5면 「이재명에 조폭 돈 20억’ 박철민 폭로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제4기사) 5. 6면 「어떤 역할도 맡겼다 했다고?... 이낙연측, 이재명측에 “도대체 저의가 뭐냐”」 제하의 기사(제5기사) 6. 10면 「이재명, 윤석열 처가 사업 감사지시」 제하의 기사(제6기사) 7. 27면 「진실 가리고 비트는 혼탁한 말의 정치」 제하의 칼럼(제7기사) 8. 31면 「재판 거래’ 말 없는 권순일, 대법원이 진상 밝히라」 제하의 사설(제8기사) 9. 6면 「윤석열 “전두환정권에 고통당한 분께 송구”」 제하의 기사(제9기사) |
| 주 문 |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
| 신 청 취 지 |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
| 이 유 | <p>피시정요구인은 ① 시정요구인이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제1기사 내지 제4기사), ② 시정요구인이 여당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 이낙연 전 대표측과의 갈등 정황이 있다는 기사(제5기사), ③ 시정요구인이 경기도지사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시행했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는 기사(제6기사), ④ 정치인들의 망언이 공정한 규칙을 해치고 혼란을 야기한다는 외부 필자의 칼럼(제7기사), ⑤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사설(제8기사), 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과 발언과 이를 평가한 기사(제9기사)를 2021. 10. 22.자 여러 면에 걸쳐 게재하였다.</p> |

- 이 유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국민의힘 경선후보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해외 시찰을 다녀온 사정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이나 시정요구인의 반론 없이 의혹을 제기하였고(제1기사 내지 제4기사),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낙연 전 대표측과의 불화를 암시하였으며(제6기사), 편파적인 내용의 칼럼과 사설을 게재하는(제7기사 및 제8기사) 등 시정요구인에 대해서는 총 8건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긍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여(제9기사) 양적·질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한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시정요구인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일방적인 의혹제기가 아니라 관계자들을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고(제1기사), 시정요구인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제2기사), 감사를 지시한 사실(제6기사), 이낙연 전 대표측의 입장(제5기사)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며, 시정요구인측의 주장을 기사에 반영하였고(제3기사, 제4기사), 칼럼이나 사설은 '말의 중요성에 대한 외부필자의 견해 표명이거나(제7기사) 대법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제8기사) 내용으로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통상 정치인의 '송구하다'는 발언을 '사과'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제9기사)이라며 항변하였다.
- 살피건대 언론의 자유 중 편집의 자유란 무엇을 공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자유라 할 수 있고, 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법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다. 다만, 언론은 그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아울러 져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 제8조가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벗어난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각 심의대상기사가 선거 국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거나, 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수행능력 검증에 관한 것인 점, 특정일에 게재된 후보들 간 보도 건수의 비교만으로 유·불리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시정요구인이 신문 편집의 자유를 벗어나 불공정한 보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4면 (정치)

정자동 호텔, 용역·시행사 모두 경기주택공사 부사장 관련회사

호텔 시행 경험없는 식품회사
사업 승인받기 넉 달 전에야
법인 목적에 '호텔업' 추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가 신축을 승인한 성남 D호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며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사업 승인이 난 이 호텔 신축 사업 시행을 안태준 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서 있던 회사의 관계사가 맡았다는 것이다. 안 부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이 후보의 대외 총괄을 담당한 한 전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안 부사장은 2012년 대선 때는 민주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P사에 '성남시 가용 사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후 P사는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직업체험관 잠월드의 학생 숙박 체험이 불가능하다며 가족호텔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잠월드 부근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업 시행을 P사 관계사인 B사에 맡겼다. B사는 2015년 1월 성남시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월에 406실을 갖춘 가족호텔 건축 승인을 받았다. 성남시의 호텔 사업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관계사가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된 사업 시행까지 맡은 것이다.

이와 관련, B사 관계자는 "성남시가 이 사업 연구 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호텔 개발 법인 구성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MOU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B사의 사업 참여도 성남시 권유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의회 의원은 "성남시가 P사에 연구 용역을 줄 때부터 사업 시행까지 맡기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닌지 규명이 필

요하다"고 했다. 원래 식품회사였던 B사는 사명이 4번 바뀌었고 성남시의 호텔 사업 승인을 받기 넉 달 전인 2015년 8월에야 법인 사업 목적에 호텔업을 추가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P사도 호텔 시행 경험이 없었다. 당시 B사의 또 다른 관계사인 U사에는 안태준 부사장이 사내이사(2015년 3월~2016년 1월)로 근무하고 있었다. B사가 호텔 사업 승인을 받고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는 기존 계획보다 432실을 늘리는 사업 계획을 새롭게 승인해 줬다.

호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는데 성남시는 이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58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은 "당시 성남시 측은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등지도 감독 없이 B사의 비용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호텔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아사 기자**

(17.2·13.4)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4면>

 **보도내용**

정자동 호텔, 용역·시행사 모두 경기주택공사 부사장 관련회사

호텔 시행 경험없는 식품회사
사업 승인받기 넉 달 전에야
법인 목적에 '호텔업' 추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가 신축을 승인한 성남 D호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며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사업 승인이 난 이 호텔 신축 사업 시행을 안태준 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서 있던 회사의 관계사가 맡았다는 것이다. 안 부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이 후보의 대외 총괄을 담당한 한 전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안 부사장은 2012년 대선 때는 민주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P사에 ‘성남시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후 P사는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직업체험관 잡월드와 학생 숙박 체험이 불가능하다며 가족호텔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잡월드 부근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업 시행을 P사 관계사인 B사에 맡겼다. B사는 2015년 1월 성남시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월에 406실을 갖춘 가족호텔 건축 승인을 받았다. 성남시의 호텔 사업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관계사가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된 사업 시행까지 맡은 것이다.

이와 관련, B사 관계자는 “성남시가 이 사업 연구 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호텔 개발 법인 구성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MOU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B사의 사업 참여도 성남시 권유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성남시가 P사에 연구 용역을 줄 때부터 사업 시행까지 맡기는 방안

을 염두에 둔 것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래 식품회사였던 B사는 사명이 4번 바뀌었고 성남시의 호텔 사업 승인을 받기 6달 전인 2015년 8월에야 법인 사업 목적에 호텔업을 추가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P사도 호텔 시행 경험이 없었다. 당시 B사의 또 다른 관계사인 U사에는 안태준 부사장이 사내이사(2015년 3월~2016년 1월)로 근무하고 있었다. B사가 호텔 사업 승인을 받고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는 기존 계획보다 432실을 늘리는 사업 계획을 새롭게 승인해 줬다.

호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는데 성남시는 이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58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은 “당시 성남시 측은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등 지도 감독 없이 B사의 비용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호텔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04면 (정치)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도’ 나오기 직전 李, 유동규와 10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

이재명, 출장 다녀온 지 17일 뒤 유동규가 맡긴 용역으로 작성된 ‘대장동 SPC 설립’ 보고서 결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9박 11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과 해외 출장을 간 시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안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이 출장 후 17일 만인 2015년 2월 2일 이 후보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 보고서는 유 전 본부장이 발주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

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성남시 판교에 트램(노면 전차) 설치를 추진 중이던 성남시가 선진 교통 체계를 배우겠다며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찰단(총 12명)을 꾸려 해외 시찰에 나선 것이다. 시찰단에는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공 인사 2명도 포함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출장을 떠나기 직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과 유 전 본부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나기 6일 전인 2014년 12월 31일, 성남도공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장동 사업 SPC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겼다.

성남에 본부를 둔 이 연구원은 연구 시작 22일 만인 2015년 1월 22일 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이 연구를 발주한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은 유동규씨가 공사

기획본부장에 부임한 지 두 달 만인 2014년 10월 구성됐다. 대장동 사업 민간 투자자인 남육·정영학씨 후배인 정민용씨 등 일명 ‘대장동팀’ 멤버가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유 전 본부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지 7일 뒤인 1월 23일 용역 보고서를 내놨고 이날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은 당시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에게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구인데 당시 심의회 위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맡았다.

성남도공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 대장동 사업 설계의 초안이 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돼 공사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나왔었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17.2·14.3)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4면>

📄 보도내용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도’ 나오기 직전 李, 유동규와 10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

이재명, 출장 다녀온 지 17일 뒤 유동규가 맡긴 용역으로 작성된 ‘대장동 SPC 설립’ 보고서 결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

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9박 11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과 해외 출장을 간 시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안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이 출장 후 17일 만인 2015년 2월 2일 이 후보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 보고서는 유 전 본부장이 발주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성남시 관교에 트램(노면 전차) 설치를 추진 중이던 성남시가 선진 교통 체계를 배우겠다며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찰단(총 12명)을 꾸려 해외 시찰에 나선 것이다. 시찰단에는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공 인사 2명도 포함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출장을 떠나기 직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과 유 전 본부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나기 6일 전인 2014년 12월 31일, 성남도공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장동 사업 SPC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겼다.

성남에 본부를 둔 이 연구원은 연구 시작 22일 만인 2015년 1월 22일 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이 연구를 발주한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은 유동

규 씨가 공사 기획본부장에 부임한 지 두 달 만인 2014년 10월 구성됐다. 대장동 사업 민간 투자자인 남욱·정영학씨 후배인 정민용씨 등 일명 '대장동팀' 멤버가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유 전 본부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지 7일 뒤인 1월 23일 용역 보고서를 내놨고 이날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은 당시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에게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구인데 당시 심의회 위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맡았다.

성남도공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 대장동 사업 설계의 초안이 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돼 공사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나왔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4면>

보도내용

원희룡 “유동규, 폰 버리기전 이재명 복심과 2시간 통화했다”

이재명 측과 유동규 압수수색前 접촉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1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뇌물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복심(腹心)’과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씨가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검찰의 유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유씨가 자살하겠다고 약을 먹었다는 사실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데, 이 후보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이 후보 측과 유씨 간에 검찰 압수수색 전 물밑 접촉이 있었기 때문으로 의심된다는 게 원 전 지사 주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씨가 검찰에 체포될 당시 전화 통화를 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친구와 통화한 게 최근엔 전혀 없다.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체포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답변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본인밖에 모를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그분(유씨)이 우리랑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측근에게 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유씨 소식을 누구한테서 보고받았느냐는 물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元 “민주당 안팎의 사람이 제보”

“유동규, 토사구팽이 될 상황에서 이재명 뜻을 정확히 판단하고 중간연결 가능한 사람과 통화

‘유동규 자살 약’ 언급한 이재명 보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겠냐

이 후보의 국감 발언을 두고 원 전 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유씨가 약 먹기 전, 즉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두 시간 동안 통화한 A씨가 있는데, A씨가 통화하는 걸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 나에게 제보했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민주당 안팎의 사람이다.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

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최근 ‘대장동 의혹 1타 강사’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등 대장동 의혹 규명에 적극적이다.

원 전 지사는 A씨가 이 후보 복심이라는 점은 제보뿐 아니라 정황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유씨는 자기가 뇌물받은 거까지 나온 상황에서 토사구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럼 이 과정에서 과연 내가 주군(主君)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판단해야 했는데, 이재명의 뜻을 정확히 판단하고 중간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통화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보도를 전제로 한 이야기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보도는 없었다’는 진행자 지적에 “이 지사가 가까운 분들과 유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유씨 퇴직 이후에 여러 가지 전했던 사람들이 몇 가지를 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유씨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기 전이나 체포되기 전 통화한 이 후보 측 인사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나 백종선 수행비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05면 (정치)

‘이재명에 조폭 돈 20억’ 박철민 폭로 진실공방

김남국, 박씨 친구 2명 녹취록 공개
“이재명 본적 없어” “돈 전달 안해”
박 변호인과 대화 녹취 與에 건네

朴 “이준석 형님이 돈 전달 지시”
조폭출신 사업가 이준석, 朴 고소
법조계 “실형 예상되는 이준석
박씨 폭로前 보석, 배경에 의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 주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수감 중인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돈 전달 주장을 펼치자, 여당은 21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박씨 주장을 부인하는 관련자들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박씨가 돈 전달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한 A, B씨를 박씨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가 만나 나는 대화가 담겼다. 반면 박씨는 녹취록 공개 하루 전 접견은 장 변호사에게 “(A, B씨가)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이 XX들이 배신했다”고 했다고 한다.

박씨는 자신에게 돈을 주고 이 지사에게 건네라고 했다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의 ‘교감’ 하에 이번 폭로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대표가 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박씨는 이날도 기존 주장을 이어나갔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장 변호사가 지난 19일 A, B씨를 만나 대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이거나 이준석 대표의 운전기사 등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은수미(성남시장)와 이재명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했다. 장 변호사가 “그런데 박철민은 왜 당신이 수차례 돈을 줬다고 할까”라고 묻자 A씨는 “저는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녹음 파일에서 B씨는 “이재명 측근에게 돈 심부름을 한 적 있나”라는 장 변호사 질문에 “아니, 없어요”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김용관 국민의힘 의원이 박철민씨 주장을 공개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오후 박씨 소개로 A, B씨를 각각 A씨 사무실과 본인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장 변호사와의 대화

를 녹음해 민주당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은 “20일 밤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박씨와 이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보석 전 이 대표와 박씨 사이에 얘기가 오갔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준석 대표가 박씨 폭로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왔다. KBS는 지난 9월 7일 ‘이재명 관련 비리를 내놓으라’는 취지의 검찰 압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보도했고 그 직후 2심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연기했다. 이어 지난 7일 이씨가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씨는 이날 장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공개한 진술서에서 “준석 형님(이준석)이 (2심) 선고까지 이 지사 도움을 받고 터트리자고 했으나 저는 준석 형님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이 저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먼저 제보를 하게 됐다”며 “A도 2015년쯤 준석 형님이 (사켜서) 1억을 이 지사 측에 갔다 주러 가는 길이라며 1억 처음 보는데 갖고 튀지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조의준·박국희 기자

(17.3*15.6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5면>



보도내용

‘이재명에 조폭 돈 20억’ 박철민 폭로 진실공방

김남국, 박씨 친구 2명 녹취록 공개
“이재명 본적 없어” “돈 전달 안해”
朴 변호인과 대화 녹취 與에 건네

朴 “이준석 형님이 돈 전달 지시”
조폭출신 사업가 이준석, 朴 고소
법조계 “실형 예상되는 이준석
박씨 폭로前 보석, 배경에 의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 주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수감 중인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돈 전달 주장을 펼치자, 여당은 21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

서 박씨 주장을 부인하는 관련자들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박씨가 돈 전달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한 A, B씨를 박씨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가 만나 나눈 대화가 담겼다. 반면, 박씨는 녹취록 공개 하루 전 접견 온 장 변호사에게 “(A, B씨가)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이 XX들이 배신했다”고 했다고 한다.

박씨는 자신에게 돈을 주고 이 지사에게 건네라고 했다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의 ‘교감’ 하에 이번 폭로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대표가 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박씨는 이날도 기존 주장을 이어나갔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장 변호사가 지난 19일 A, B씨를 만나 대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이거나 이준석 대표의 운전기사 등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은수미(성남시장)와 이재명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했다. 장 변호사가 “그런데 박철민은 왜 당신이 수차례 돈을 줬다고 할까”라고 묻자 A씨는 “저는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녹음 파일에서 B씨는 “이재명 측근에게 돈 심부름을 한 적 있나”라는 장 변호사 질문에 “아니, 없어

요”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김용관 국민의힘 의원이 박철민씨 주장을 공개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오후 박씨 소개로 A, B씨를 각각 A씨 사무실과 본인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장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민주당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은 “20일 밤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박씨와 이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보석 전 이 대표와 박씨 사이에 얘기가 오갔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준석 대표가 박씨 폭로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왔다. KBS는 지난 9월 7일 ‘이재명 관련 비리를 내놓으라’는 취지의 검찰 압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보도했고 그 직후 2심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연기했다. 이어 지난 7일 이씨가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씨는 이날 장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공개한 진술서에서 “준석 형님(이준석)이 (2심) 선고까지만 이 지사 도움을 받고 터트리자고 했으나 저는 준석 형님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이 저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먼저 제보를 하게 됐다”며 “A도 2015년쯤 준석 형님이 (시켜서) 1억을 이 지사 측에 갖다 주러 가는 길이라며 1억 처음 보는데 갖고 튀자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제5기사> 제20대 대선-시심12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09면 (정치)

어떤 역할도 맡겠다 했다고?... 이낙연측, 이재명측에 “도대체 저의가 뭐냐”

통화내용 보도놓고 양측 갈등 커져
이재명, 오늘 光州·봉하마을 방문

‘대장동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 대선 준비에 들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첫 단추’인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뒤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 ‘원팀 선대위’에 힘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21일

보도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기로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이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 중인 지난 20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이 즉각 “오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지사 측 정성호 의원과 이 전 대표 측 박광

운 의원이 협의케 하지는 것”이라며 “추측과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선 이 후보 측에 “이러면 될 일도 안 된다” “도대체 저의가 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캠프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국감 후 이재명-이낙연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보도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인사는 “이 전 대표와 이번 주말에는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

주면 너무 늦다”고 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주말 회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지사직 사퇴도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 묘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등 민주당의 상징적 장소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대선 레이스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22·8·8.0)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6면>



보도내용

어떤 역할도 맡겠다 했다고?... 이낙연측, 이재명측에 “도대체 저의가 뭐냐”

통화내용 보도놓고 양측 갈등 커져
이재명, 오늘 光州·봉하마을 방문

‘대장동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 대선 준비에 들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첫 단추’인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뒤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 ‘원팀 선대위’에 힘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21일 보도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22일 광주 5·18민주묘지, 노무

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기로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이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 중인 지난 20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이 즉각 “오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지사 측 정성호 의원과 이 전 대표 측 박광운 의원이 협의케 하지는 것”이라며 “추측과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선 이 후보 측에 “이러면 될 일도 안 된다” “도대체 저의가 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캠프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국감 후 이재명-이낙연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보도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인사는 “이 전 대표

와 이번 주말에는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 주면 너무 늦다”고 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주말 회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지사직 사퇴도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등 민주당의 상징적 장소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10면 (사회)

이재명, 윤석열 처가 사업 감사 지시

양평 350가구 아파트 건설 사업
‘뒤늦게 시한 연장’ 문제삼아
인허가 특혜 의혹 제기
양평군 “입주민들 고려해 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가 시행했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기도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21일 조사담당관실 직원을 양평군에 보내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처남, 처형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아내 김건희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부동산 개발업체 ESI&D가 아파트 35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에 완료하지 못했고,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을 앞둔 2016년 6월에 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이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를 줬고, ESI&D는 약 8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업체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인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 시행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주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등은 “1년 8개월 동안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지속했는데, 오히려 시한을 연장하는 변경 고시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감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정, 특혜 행정”이라며 즉시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김원준 청장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입건 전 수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공흥지구에선 350가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부술 수도 없었고 입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시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수원=권승은 기자

(10.7*18.1)cm



이재명, 윤석열 처가 사업 감사 지시

양평 350가구 아파트 건설 사업

‘뒤늦게 시한 연장’ 문제 삼아

인허가 특혜 의혹 제기

양평군 “입주민들 고려해 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가 시행했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기도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21일 조사담당관실 직원을 양평군에 보내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처남, 처형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아내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부동산 개발업체 ESI&D가 아파트 35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에 완료하지 못했고, 양

평군은 아파트 준공을 앞둔 2016년 6월에 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이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를 줬고, ESI&D는 약 80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업체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인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 시행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주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등은 “1년 8개월 동안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지속했는데, 오히려 시한을 연장하는 변경 고시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감사를 촉구했다. 이 지시는 “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정, 특혜 행정”이라며 즉시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김원준 청장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입건 전 수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공흥지구에선 350가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부술 수도 없었고 입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시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27면 (호피니언)



권경애의 GPS



진실 가리고 비트는 혼탁한 말의 정치

정치는 말[言]로 한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려는 대선 후보들의 난무하는 방안들로 세상이 혼탁하다.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정치란 정언(正言)이다. 정언이란 무엇인가. 정언은 정의(正義)를 말하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사전적으로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국가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에 합의하는 조직체라면, 정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진실을 가리고 비트는 말은 공정한 도리를 허물고 관계와 세상을 망친다. 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말발은 구성원들의 공정한 규칙을 해치고 혼란과 분란을 야기한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끊임없이 사실을 뒤돌고 거짓을 선동하고 진실을 덮었다. 대장동 개발은 법조와 공공 및 민간업자들이 결탁된 초대형 부패 카르텔의 잘 꾸며진 약탈 사업이었다. 주거 안전과 공공복지를 위한 공공의 강제수용권을 민간이 입주주민을 약탈하는 무기로 사용한 치밀한 설계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 환수라는 선전으로 가려진 범죄의 현장이었다. 공공 개발로 위장된 약탈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줄지어 '관리 책임에 소홀해서 부하 유류공 개인이 업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배임 배리'로 돌변했다.

구속된 유류공의 배임 혐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배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두 차례 건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자본율에 따라 (이익금)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이다. 유류공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의견을 낸 사업 담당 부서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업 부서를 바꿨다.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업무는 성남시장에게 보고되어야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확정 이익을 정하라는 자사의 지시에 반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후 열린 국감장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

항 건의가 있다는 보고도 못 받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알았다"고 허둥지둥 뒷걸음쳤다. 배임 혐의를 벗어 나기 힘들다는 뒤늦은 자각 때문인지 국감장에서의 해명은 일관성도 상실한 것이다.

"부동산과 아파트값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 아니었으면 5500억원의 공공 환수는 불가능했다"는 것은 어림 반 뿐이지도 않는 해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공공의 확정 수익을 정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공공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규정했어야 했다. 조 단위 사업비가 산정된 공공사업 책임자의 당연한 업무상 주의 의무였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확정이익 환수 방식을 택했다는 해명 자체가 거짓이다. 성남의들

끊임없이 사실 뒤돌고 진실 덮는 이재명 '배임' 핵심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말바꾸기 말잔치로 부패 카르텔 약탈 사업 은폐 못해 윤석열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 잃을 텅가

은 대장지구의 평당 실거래가 600만원 하는 토지를 평당 300만원에 강제 수용했다. 공공의 강제 수용이 없기에 가능한 험값 수용이었다. 공공 수용임에도 민간택지로 분류되는 민간 합작 SPCC가 사업시행자였기에 분양가상한제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조성한 택지는 평당 2000만원에 분양했다. 실패할 수 없는 안전한 사업이었다. 공모에 참여했던 성남의들, 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3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성이 좋고,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했다. 공공의 강제수용권과 인허가권이 보장한 안전성이었다.

사업성이 높고 안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50%+1주의 지분으로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이 5500억원인 반면, 7% 지분의 천화동인과 화천대유 수익이 4000억원이다. 택지 분양 수익에서만 그

말다. 화천대유가 수의 계약으로 분양받은 5필지에서 진행된 주택분양사업에서도 5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성남의들 주주 간의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초과 수익이 예상되지 타원 사업비 920억원을 추가로 공공 환수하는 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냈다고 자랑해 왔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의들 주주 간 이익 배분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이미 저질러진 부당선 약탈 사업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과 우두마육(牛頭馬肉)의 말잔치로는 저질러진 부당선 약탈을 덮을 수 없다.

야당의 제1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는 도박한 정치적인 안으로 설화를 반복한다. 120시간 노동할 자유, 매이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의 구분, 손발 노동과 아르바이트 차별하는 연사를 반복하던 윤 후보는 전두환의 정치를 긍정하는 망언에 이르렀다.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배만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실언을 번 말언이다. 당내 결선 과정에서 극우 당원들을 향한 교언영색이라면 구절만 표는 연을명정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는 않는다. 설화와 망언 후의 대응도 깔끔하지 못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겨우 유감이라고 했다가 21일 오후 다시 "전두환 정권에도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고 물러섰다.

허를러는 계기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서 대중 연설로 위대한 독일을 향한 원대한 꿈과 유대인 증오를 심어 주는 일 이외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국정 운영은 총성 경쟁하는 부하들이 전횡하도록 방치했다. 허를러 시대의 복지와 일자리 증가는 나치에 대한 열광을 뒷받침했다.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조국 사태에 전지리를 친 국민들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든다. 파시즘 지도자의 정수는 극렬 강성 지지자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연행에서 감지되기 시작한다.

번호사 '무법의 시진' 저자

(322.0*31.8)cm



진실 가리고 비트는 혼탁한 말의 정치

**끊임없이 사실 뒤틀고 진실 덮는 이재명
‘배임’ 핵심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말바꾸기
말잔치로 부패 카르텔 약탈 사업 은폐 못해
윤석열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 잃을 텐가**

정치는 말(言)로 한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려는 대선 후보들의 난무하는 망언들로 세상이 혼탁하다.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정치란 정언(正言)이다. 정언이란 무엇인가. 정언은 정의(正義)를 말하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사전적으로 ‘개인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국가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에 합의하는 조직체라면, 정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진실을 가리고 비트는 말은 공정한 도리를 허물고 관계와 세상을 망친다. 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망발은 구성원들의 공정한 규칙을 해치고 혼란과 분란을 야기한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끊임없이 사실을 뒤틀고 거짓을 선동하고 진실을 덮었다. 대장동 개발은 법조와 공공 및 민간업자들이 결탁된 초대형 부패 카르텔의 잘 꾸며진 약탈 사업이었다. 주거 안정과 공공복지를 위한 공공의 강제 수용권을 민간이 입주민을 약탈하는 무기로 사용한 치밀한 설계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 환수라는 선전으로 가

려진 범죄의 현장이었다. 공공개발로 위장된 약탈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줄지에 ‘관리 책임에 소홀해서 부하 유동규 개인이 업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배임 비리로 돌변했다.

구속된 유동규의 배임 혐의 핵심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의 배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들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 삽입을 두 차례 건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이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의견을 낸 사업 담당 부서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업 부서를 바꿨다.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업무는 성남시장에게 보고되어야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확정 이익을 정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반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후 열린 국감장에서는 “초과수익 환수 조항 건의가 있다는 보고도 못 받았고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고 허둥지둥 뒷걸음쳤다.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뒤늦은 자각 때문인지 국감장에서의 해명은 일관성도 상실한 것이다.

“부동산과 아파트 값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나 아니었으면 5500억 원의 공공 환수는 불가능했다”는 것은 어림 반 뿐어도 없는 해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공공의 확정 수익을 정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공공의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규정했어야 했다. 조 단위 사업비가 산정된 공공사업 책임자의 당연한 업무상 주

의 의무였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확정 수익 환수 방식을 택했다는 해명 자체가 거짓이다. 성남의뜰은 대장지구의 평당 실거래가 600만 원 하는 토지를 평당 300만 원에 강제 수용했다. 공공의 강제 수용이었기에 가능한 헐 값 수용이었다. 공공 수용임에도 민간택지로 분류되는 민관 합작 SPC가 사업시행자였기에 분양가상한제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조성한 택지는 평당 2000만 원에 분양했다. 실패할 수 없는 안전한 사업이었다. 공모에 참여했던 성남의뜰, 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3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성이 좋고,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했다. 공공의 강제수용권과 인허가권이 보장한 안전성이었다.

사업성이 높고 안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50%+1주의 지분으로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이 5500억 원인 반면, 7% 지분의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수익이 4000억 원이다. 택지 분양 수익에서만 그렇다. 화천대유가 수익계약으로 분양받은 5필지에서 진행한 주택 분양사업에서도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성남의뜰 주주 간의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초과 수익이 예상되자 터널 사업비 920억 원을 추가로 공공 환수하는 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냈다고 자랑해 왔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의뜰 주주 간 이익 배분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이미 저질러진 부동산 약탈

사업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과 우두마육(牛頭馬肉)의 말 잔치로는 저질러진 부동산 약탈을 덮을 수 없다.

야당의 제일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는 둔탁한 정치적 언사로 설화를 반복한다. 120시간 노동할 자유,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의 구분, 손발 노동과 아프리카를 차별하는 언사를 반복하던 윤 후보는 전두환의 정치를 긍정하는 망언에 이르렀다.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실언을 넘어 망언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극우 당원들을 향한 교언영색이라면 구걸한 표는 얻을망정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는 잃는다. 설화와 망언 후의 대응도 깔끔하지 못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겨우 유감이라고 했다가 21일 오후 다시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고 물러섰다.

히틀러는 게으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서 대중 연설로 위대한 독일을 향한 원대한 꿈과 유대인 증오를 심어 주는 일 이외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국정 운영은 충성 경쟁하는 부하들이 전횡하도록 방치했다. 히틀러 시대의 복지와 일자리 증가는 나치에 대한 열광을 뒷받침했다.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조국 사대에 진저리를 친 국민들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든다. 파시즘 지도자의 징후는 극렬 강성 지지자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언행에서 감지되기 시작한다.

‘재판 거래’ 말 없는 권순일, 대법원이 진상 밝히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출입 기록을 비실명으로 요구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지사 무죄 판결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대법원을 드나든 출입 기록이 확인되면서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문제는 법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대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 관계인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 받는 일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국민이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불신하게 되면 법원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재판에서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담하면서 무죄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된다면 이 지사는 대선에 나올 수 없었다. 이 지사 사건에는 대장동 관련 혐의가 포함돼 있었고, 김만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당연히 사건 관

계자였다. 김씨는 이 지사가 진행한 대장동 사업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오랜 친분이 있는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 대장동 개발 회사의 고문으로 들어가 월 1500만원씩 받기도 했다. 김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결코 무리한 억측이 아니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아무 말도 없다. 평생 법원에 몸담으며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사법부 위기로 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도 손을 놓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해 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만배씨를 이해 관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법원행정처장은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 판결은 이미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그보다 큰 논쟁이 있겠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이 지사 무죄 판결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제로 조사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17.5·10.0)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31면>

보도내용

‘재판 거래’ 말 없는 권순일, 대법원이 진상 밝히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출입 기록을 비실명으로 요구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지사 무죄 판결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대법원을 드나든 출입 기록이 확인되면서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문제는 법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대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 관계인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 받는 일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국민이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불신하게 되면 법원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재판에서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담하면서 무죄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된다면 이 지사는 대선에 나올 수 없었다. 이 지사 사건에는 대장동 관련 혐의가 포함돼 있었고,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당연히 사건 관계자였다. 김씨는 이 지사가 진행한 대장동 사업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오랜 친분이 있는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 대장동 회사의 고문으로 들어가 월 1500만 원씩 받기도 했다. 김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결코 무리한 억측이 아니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아무 말도 없다. 평생 법원에 몸담으며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사법부 위기로 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

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도 손을 놓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해 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만배 씨를 이해 관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법원행정처장은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 판결은 이미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그보다 큰 논쟁이 있겠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이 지사 무죄 판결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06면 (정치)

윤석열 “전두환정권에 고통당한 분께 송구”

尹, 어제 오전 유감 표명했지만
파문 가라앉지않자 오후에 사과
홍준표 “내가 당대표였으면 제명”
유승민측 “尹, 호남을 두 번 능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자신의 ‘전두환 발언’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논란 이틀 만에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선 ‘전두환 재평가’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내용이 계속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발언은 5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전 전 대통령의 ‘권한 위임’을 배우겠다는 취지의 뜻을 고수하자, 경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선 “호남을 두 번 능멸하는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는 논평이 나왔다. 비슷한 시각, 호남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전 대통령은

통치했을 뿐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총장이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게 총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정정 조치를 주문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결국 오후 3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며 “대통령은 무한 책임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또 “원칙을 가지고 권력에 맞설 때는 고집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국민에게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라며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었다”며 책임을 돌린 것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해명 정치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고, 비판이 일자 “내 발언을 곡해하지 말라”고 했었다. 정치권

에선 윤 전 총장이 이날 오전 ‘유감 표명’으로 여론이 오히려 악화하자 추가 입장문을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오전부터 입장문을 준비했고, 윤 전 총장 발언과 시차가 다르게 나간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어차피 사과할 일을 가지고 우기고 버티는 것이 ‘윤 검사’의 기개인가”라며 “내가 당 대표였다면 제명감”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박배사죄의 자세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날 당 회의에서 “부동산, 원전 정책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짚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유 전 의원 측은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윤석열 캠프로 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5·18 폄해 발언” 2년 만에 당이 ‘전두환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사태로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이준석 대표로 이어진 국민의힘의 ‘사진(西進)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여파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갑 당협위원장도 과거 ‘광주 비하’ 논란이 일면서 이날 자진 사퇴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후보 개인과 당에 부정적인 효과인 것은 분명하다”며 “전두환 논란이 대장동 이슈로 분열된 민주당을 다시 뭉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동하·김승현 기자

(22. 9:21. 5)cm



윤석열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한 분께 송구”

尹, 어제 오전 유감 표명했지만
파문 가라앉지 않자 오후에 사과
홍준표 “내가 당대표였으면 제명”
유승민측 “尹, 호남을 두 번 능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자신의 ‘전두환 발언’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 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논란 이틀 만에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선 ‘전두환 재평가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내용이 계속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 발언은 5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전 전 대통령의 ‘권한 위

임’을 배우겠다는 취지의 뜻을 고수하자, 경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선 “호남을 두 번 능멸하는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는 논평이 나왔다. 비슷한 시각, 호남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전 대통령은 통치했을 뿐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총장이 유감 표명을 했다는데 그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 정정 조치를 주문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결국 오후 3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며 “대통령은 무한 책임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또 “원칙을 가지고 권력에 맞설 때는 고집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국민에게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라며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었다”며 책임을 돌린 것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고, 비판이 일자 “내 발언을 곡해하지 말라”고 했었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이날 오전 ‘유감 표명’으로 여론이 오히려 악화하자 추가 입장문을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오전부터 입장문을 준비했고, 윤 전 총장 발언과 시차가 다르게 나간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어차피 사과할 일을 가지고 우기고 버티는 것이 ‘윤 검사’의 기개인가”라며 “내가 당 대표였다면 제명 감”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백배사죄의 자세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날 당 회의에서 “부동산, 원전 정책 두 가지
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
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유 전 의원 측은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윤석열 캠프로 가라”고 했다. 국민의
힘에선 “5·18 폄훼 발언’ 2년 만에 당이 ‘전두
환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
다. 이번 사태로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김
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이준석 대표로

이어진 국민의힘의 ‘서진(西進)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여파로 윤석열 캠프
에 합류했던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갑 당
협위원장이 과거 ‘광주 비하’ 논란이 일면서 이
날 자진 사퇴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는 통화에서 “후보 개인과 당에 부정적인 효과
인 것은 분명하다”며 “전두환 논란이 대장동 이
슈로 분열된 민주당을 다시 뭉치게 할 수 있다”
고 했다.